

2003 연구보고서 210-17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문 미 경 (연구위원)

공동연구자 : 김 혜 영 (전문연구원)

 한국여성개발원

발 간 사

새로운 21세기는 세계화, 지방화, 분권화의 세기가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방향과 노릇기를 수행하는 행정이 펼쳐질 것 입니다.

그동안 여성정책이 중앙정부 또는 광역정부 중심으로 정책을 펼쳐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의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에 따라 여성정책의 활성화를 기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여성정책은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한 바와 같이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를 위해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복지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실행해 나갈 주체인 것입니다.

여성정책도 중앙정부부처 중심의 정책으로는 지역곳곳의 여성에게 여성정책이 추구하는 바를 실현하는 데는 한계를 지닌다고 하겠습니다. 지역여성들은 자신들의 보다 나은 삶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지방정부의 노력을 촉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파악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기반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한 내·외부적 요인들을 기틀로 향후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활성화 요인을 제시함은 매우 의미 있는 연구라 봅니다.

본 연구의 결과가 아무쪼록 여성정책의 풀뿌리화에 기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추진 담당자 및 관련자, 관심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03년 12월

한 국 여 성 개 발 원
원 장 장 하 진

연구요약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역 여성의 요구와 필요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선거를 통해 정책결정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여성의 목소리가 보다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환경과 추진체계가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관련 정책들의 집행 사업들을 살펴보면 중앙의 여성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시책시달 사항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들이 지역여성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여성정책의 개발과 집행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 이와 같은 현상은 도나 광역자치단체를 벗어나 기초자치단체로 내려갈수록 그 정도는 심각하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직접 정책의 수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차적인 행정조직체계로서 주민과 행정이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도에 비해 여성정책이 상위정부에 의한 선언적 정책에 머무를 수 있는 위험성의 소지를 안고 있다.
- 그렇다면 왜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가? 향후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요인들은 무엇인가?
- 현재까지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단체장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설치, 담당공무원들의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 부분적으로 분석한 정도로, 매우 미흡하며 거의 실태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가지고 있는 기반체계 및 내적 역량과 외부적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한 실태가 제대로 파악할 때 개선되어야 할 부분과 아울러 적실성 있는 정책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갖고 있는 기반체계 및 내적 역량을 파악함과 동시에 외부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 현대는 정책 영역들 간에 구분이 어렵고, 한 부서의 정책 활동이 여타 부서들의 정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어떤 한 부서의 정책결정과 집행에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각기 달리하는 여러 유관 부서들이 연루되어 상호작용을 펼치는 것이 보통이다(Peters, 1981). 정책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소관영역에서는 물론이고 타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정책선택을 반영시킬 수 있는 강력한 부서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소관영역에서조차도 타부서들의 압력의 굴레 속에서 종속적으로 기능해야 하는 나약한 행정부서들도 적지 않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이러한 현상은 조직 내부의 문제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영향 요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 여성정책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이나 인력, 업무의 전문성(bureaucratic expertise, knowledge), 조직구성원의 결속력(organizational esprit, cohesion), 리더의 수완(administrative statecraft, leadership) 등과 같은 조직내부가 안고 있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외부 집단들로부터의 지지와 견제 때문일 수도 있다. 하나

의 부서는 그 부서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영향 세력으로부터 받는 지지와 견제간의 불균형의 규모와 방향 여하에 따라 그 부서가 갖는 힘이 강화 또는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 우선,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반체계이다.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가시적 성과인 결과물을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찾아낸다면 바람직하겠으나 여성정책의 가시적 성과물이 수량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입요소인 전담조직유무와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위원회 운영이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가정하였다. 즉 전담조직이 있고, 전담인력이 여성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며, 이를 지원하는 여성발전조례의 법적 제도화가 보다 더 여성정책을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여성발전기금조성과 여성발전위원회의 활용은 여성정책을 보다 활성화하고 보다 더 지역여성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 둘째,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조직 내부적인 특성이다. 조직내부적인 특성은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가지고 있는 기반이 얼마나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외에도 여성정책 조직이 갖는 업무의 전문성, 조직구성원간의 결속력, 그리고 조직 리더의 수완 등은 여성정책을 수행하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조직내부적인 특성이 강할 때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여성정책은 유명무실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과의 관계이다. 만약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여성문제나 정책에 관해 자신의 문제인식과 시각을 반영·관철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

서의 역량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이 현대 행정에서는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부세력이 그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히 크다. 따라서 하나의 부서가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는 사안에 대해 자기 부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였다면 그것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조직들과의 관계가 우호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3.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기반체계 현황

가. 여성정책 담당기구 현황

-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 여성정책 담당기구를 살펴 본 결과 현재 국 수준에서 여성정책 업무 전담기구를 두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 전담국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과 수준에서 여성정책 전담기구(여성정책과, 여성과)를 갖추고 있는 시(원주시, 춘천시, 전주시, 남양주시, 고양시, 안양시, 순천시), 군(없음), 구(양천구, 부평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시, 구 기초자치단체에서 과 단위의 여성정책 업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더 나아가 현재 국 단위 명칭에서는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거의 없고 과 단위의 명칭에서 ‘여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일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과 수준 정도에서라도 ‘여성○○과’ 또는 ‘○○여성과’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많았는데, 이를 ‘사회복지여성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 있어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설치가 아직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여성정책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과 수준에서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명칭으로 통일을 시키든지, 아니면 ‘여성’이라는 단어를 붙여 명칭을 사용하게 할 때 명칭의 일치를 통해서 업무상의 일치도 도모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간 업무협조상의 이해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 행정기구에 접근한 사람들의 해당기구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 인력 현황

■ 전반적으로 시·군·구 모두 여성관련 부서의 인력이 평균 3~4명 혹은 그 이상으로 분석되었으나, 실질적 여성정책의 업무를 하는 인력은 팀장을 제외한다면 1~2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인력 수가 많은 팀(담당)이라면 그 중 팀장과 여성정책이 아닌 보육, 노인 혹은 청소년담당자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222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이며, 일부는 인력부족에 대한 호소를 하기도 하였다.

■ 시·군·구 별로 여성정책 담당인력 평균을 살펴본다면, 구에서는 4명의 인력을 배치한 경우가 38.0%를 보여주었으며, 구 전체의 비율 중 가장 컸다. 시와 군에서는 3명의 인력배치가 많았으며, 각각 48.1%, 41.9%의 비율을 나타냈다. 시·군·구 종합평균으로 보았을 때 3명의 인력배치가 3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명의 인력배치가 19.9%로 나타났다. 1명의 인력배치는 17.2%, 2명의 배치는 15.7%로 각각 나타났으며, 5명과 6명의 인력배치를 한 시·군·구는 각각 5.2%와 5.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3명의 인력배치에 비해 6명의 인력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는 약 1/7일 뿐이었다.

다. 여성발전기본조례 현황

- 시의 경우, 86.5%에 달하는 64개의 시에서 조례제정을 한 상태이며, 나머지 10개의 시에서는 아직 제정이 되어있지 않았다. 군의 경우는 제정을 한 군은 40개 군(45.5%)이었으며, 그렇지 않은 군은 48개 군으로 54.5%를 차지하였다. 전체 구의 40%, 24개 구에서 조례제정이 되어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36개 구에서는 제정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여성발전기금 조성 현황

- 시의 경우, 81.1%에 해당하는 60개의 시에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14개의 구에서는 기금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의 경우, 62.5%를 차지하는 55개의 군이 기금 조성 중에 있으며, 37.5%에 해당하는 33개의 군에서는 기금조성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의 경우는 35.0%에 해당하는 21개의 구에서 기금조성이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상태이며, 나머지 65.0%를 차지하는 39개의 구에서는 기금조성이 되어있지 않았다.

마. 여성위원회 설치 현황

- 시의 경우 62.2%에 해당하는 46개의 시에 위원회 설치가 되어있고, 37.8%로 조사된 28개의 구에서는 위원회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다. 군의 경우는 31.8%를 차지하는 28개의 군이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68.2%에 해당하는 60개의 군은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는 35.0%에 해당하는 21개의 구에서 위원회 설치가 되었으며, 나머지 65.0%를 차지하는 39개의 구에서는 위원회설치가 되어있지 않았다.

바. 여성정책 사업내용

- 여성정책 사업은 법적 기준에 따른 업무분류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업무와 임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성정책시행계획수립·수행’과 ‘보육정보센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기준을 통해서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여성업무와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여성업무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적 기준 외에 사무배분의 일반원칙들과 업무수행율을 통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여성 업무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의 원칙에 따라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구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사무가 광역과 기초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 업무 역시 광역과 기초에서 동시에 수행되는 비율이 매우 높다(여성부, 2001).
- 특히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정책들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수립하여 내려보내지기 때문에 지역에서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정책(여성일자리 창출, 여성공무원임용목표제 등)들이 존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언적인 수준에서 머무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중앙에서 여성정책기본계획 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담당자들도 공동으로 참석하여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연계성을 가지면서 체적으로 여성정책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여성정책을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4. 분석결과 및 논의

-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기반체계로서 여성정책을 담

당하는 전담조직 설치,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여성발전기금 조성, 여성발전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가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 요인에 관한 내용으로, 여성정책담당부서의 독자적 영역, 여성정책 업무 수행시의 헌신도, 여성정책 담당부서 구성원간의 결속력, 여성정책 담당 부서장의 적극적 리더십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는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에 대한 외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여성단체, 지역 대중매체들이 갖는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여성정책을 효율적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주체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기반체제와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할 시 여성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성과 향후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기반체제에 대한 분석

■ 전담조직

전담조직의 유무는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담조직이 있을 경우가 전담조직이 없을 경우보다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전체 조사응답자의 68.7%가,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응답자집단에서는 87.1%가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다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기초자치단체 중 여성발전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는 37.6%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 여성정책의 자치단체내 정책적 지위

여성정책이 소속 시군구에서 중요한 행정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곳은 54.9%였다. 여성정책을 중요한 행정목표로 설정할 경우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86.5%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 향후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여성정책 부문

시·군·구의 여성정책은 현재 여성의 평생교육참여 여건강화 또는 여성의 문화활동참여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으로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현재의 정책수행과 향후 방향은 차이를 보였다.

■ 여성발전 중장기계획

시·군·구는 여성정책에 대하여 중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비율은 39.3%였고, 당해연도 계획만을 갖고 있는 경우는 49.2%, 계획이 없는 경우도 10.4%로 나타났다. 중장기발전계획유무와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은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중장기발전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150% 내지 200%의 인력 및 예산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인력 및 예산의 부족은 심각하다.

■ 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은 일반예산과는 달리 특화된 사업실행, 창의성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이미 조성된 비율은 17.6%이고, 43.7%는 조성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여성발전기금을 현재 활용하는 비율은 25.0%로 여성발전기금의 활용은 미약하다.

■ 여성발전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는 여성정책추진의 방향 및 정책개발자문, 여성정책에 대한 사업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된 비율은 28.1%에 불과하다.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연중 개최빈도로서 가장 많은 것은 1-2회로 66.0%를 차지한다. 여성발전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수용정도는 54.3%가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예산의 부족과 인력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발전위원회가 여성정책추진의 방향 및 사업에 대한 건의를 한다 해도 예산 및 인력의 제약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여성정책의 기여도 및 효율적 추진에 대한 인식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즉 남녀평등촉진, 여성 의사사회참여확대, 복지증진의 목표달성을 어느 정도 하였다고 평가하는가에 대하여는 82.1%가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시·군·구 여성정책담당공무원의 여성정책추진에 대한 효율성 평가는 69.1%가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응답은 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응답과 무관하지 않다. 분석결과에서 효율적 추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교차분석결과에서 24명)에 95.9%가 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동의하고, 효율적 추진에 동의하는 편(교차분석결과에서 220명)에서 92.7%가 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나.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내부적 요인 분석

■ 여성정책 업무에 대한 전문성

우선 여성정책 관련 전문성으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여성정책이 높은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자신이나 동료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독자적 영역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여성정책 관련 사업들을 독자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좁다(아주 좁은 편 18.7%, 좁은 편 44.8)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63.5%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갖는 독자적 영역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정책 담당구성원간의 결속력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구성원간의 결속력에 대한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 비율(62.4%)이 부정적인 응답비율(2.7%)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담당부서장의 여성업무 관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여성정책부서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부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 조직들과의 활동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가에 대한 인식은 노력하는 편(아주 많이 노력 12.0%, 노력하는 편 39.4%)이 노력하지 않는 편(노력하지 않는 편 10.6%, 전혀 노력하지 않은 2.5%)보다 월등히 높아 현재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 부서장들은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외부조직들과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전략으로 지지를 내어 내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는 상관계수가 .351 유의도는 .000으로 부서장이 내·외부 조직들과의 활동에 적극적일수록 효율적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다.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외부적 요인 분석

■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

여성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외적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아주 높음 11.8%, 높은 편 42.3%)이 낮은 편(아주 낮음 1.6%, 낮은 편 11.5%)보다 응답비율이 높아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체장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95.4%,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85.0%는 본인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편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 지역여성단체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

다음은 지역 여성단체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서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3%(아주 높음 8.0%, 높은 편 36.3%)로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 14.0%(아주 낮음 2.2%, 낮은 편 11.8%)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주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93.1%,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79.6%가 본인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편 있었다. 그러나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51.1%, 아주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62.5%는 본인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거나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또한 지역 여성단체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 지역대중매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

지역신문이나 대중매체가 지역여성들의 문제점이나 여성정책에 대해 갖는 관심은 높은 편이 26.1%(아주 높음 2.2%, 높은 편 23.9%)로 낮은 편 20.8%(아주 낮음 1.6%, 낮은 편 19.2%)보다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7%로 특별히 여성문제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성문제와 여성정책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음을 고려할 때, 대중매체나 지역지를 통한 홍보 및 정보전달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겠다.

■ 각 주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여성, 지역 여성단체, 대중매체, 타 행정부서의 여성정책에 대한 지지도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지역여성, 여성단체, 대중매체, 타 행정부서의 순이었다.

■ 각 주체가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각 주체들이 여성정책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의 순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여성단체, 대중매체, 지역여성, 타 행정부서의 순위였다.

■ 각 주체의 지지도와 영향력 비교

각 주체의 여성정책에 미치는 지지도와 영향력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영향력은 물론 여성정책에 대한 지지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단체의 경우는 영향력은 2위였으나 지지도는 3위였다. 대중매체는 영향력은 3위였으나 지지도는 4위로 영향력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역여성은 영향력은 4위였으나 지지도는 2위로 지역 여성문제나 여성정책에 대한 지역여성들의 관심은 매우 크다고 생각되나 이러한 관심을 행정기관의 정책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영향은 미약함을 알 수 있다. 타 행정부서의 경우는 영향력도 낮고 지지도도 낮게 나타났다.

라.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종합적 분석

■ 여성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성

여성정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영향요인들의 중요성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한 결과,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8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예산 및 인력규모 75.0%, 부서장의 관심과 지지 72.0%, 부서장의 리더십 56.0%, 지역 여성들의 지지와 관심 55.8%, 외부단체들의 지지 53.6%, 담당 부서의 법적·공식적인 권한 46.4%, 관할 업무의 전문성 45.1%, 부서 내부의 응집성 37.9%, 유관 부서들의 협조 33.2% 순으로 나타났다.

■ 여성정책 추진 영향요인들의 영향력 순위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함은 기존 연구 결과(한국여성개발원, 2000)와 일치하며 예산 및 인력, 부서장의 관심과 지지도에 대한 중요성도 기존 연구(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2002)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 행정체제 내에서 여성업무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부서간의 협조와 조정이 중요함에도 중요성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함을 볼 때 그 보다는 여성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인력이나 예산 등 기반체제 구축과 단체장과 부서장의 적극적인 여성정책 수행의지가 우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에도 나타나고 있다.

■ 여성정책 추진시 겪는 문제의 심각성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위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 것은 예산 및 인력규모의 부족으로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하겠다. 다음으로는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법적·공식적인 권한의 부재로 나타나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지위 및 권한 확보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역량강화 요인

마지막으로 향후 여성정책 담당 부서의 역량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서는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예산 및 인력규모를 꼽았다. 2순위 역시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 항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예산 및 인력 규모가 꼽혀, 다른 항목에 비해 이 두 항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순위를 묻는 질문에서는 지역여성들의 지지와 관심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4·5순위에는 부서장의 리더십과 담당 부서의 전문성이 비슷한 빈도를 보였다. 6순위에는 유관 부서들의 지지가, 7·8순위에는 부서 내부의 응집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아래와 같다.

5. 정책적 제언

■ 전담조직의 설치 및 인력·예산의 지원 증대

여성정책의 목표는 법적,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인 모든 측면이 관련되는 다측면성을 갖는 특징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여성문제에 대한 공공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정으로서 의식화와 교육이 중요하며 이를 통하여 전통적사고와 편견의 변화, 그리고 심리적, 문화적 모순의 제거가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지방차원에서 국가정책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지방차원에서의 여성이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설치가 요망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설치하는 이 기구를 통하여 지역차원에서 목표하는 가능한 여성발전을 위한 조치와 발전모델을 개발하고 사회구조의 변화의식을 주민과 근거리에서 고취하며, 법제도의 변화를 준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새로운 틀도 마련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며 능률적인 방법이 된다.

그리고 현재 여성정책관련 부서들은 인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성정책관련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70%이상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인력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진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정책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의 사업에 대한 현실화는 필수적이다.

■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여성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여성정책이 수시로 바뀔 수 있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나마 지역 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사업의 목적성 있는 추진과 사업효과의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위기관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여성정

책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은 자체 평가 및 상위기관의 개별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지방자치단체별 여성발전기본조례의 구비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있다는 응답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의 공무원이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높고,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여성정책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는 곳에서나 아닌 곳에서나 높게 나타남으로써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추진체계, 관련부서의 의무, 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위원회, 예산사용상의 고려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전반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게 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 여성발전기금조성 확대

여성발전기금이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비율은 조상응답자의 61.3%를 차지한다. 시에서는 조성중이거나 조성된 비율이 91.8%를 차지하고, 군은 58.8%, 구는 31.7%를 차지함으로써 시군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면에서 시가 공무원 스스로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여성발전기금도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단체활동을 활성화하거나 시의성 있는 사업개발, 민간과의 협력 등을 진작해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여성발전위원회 또는 여성위원회의 설치

여성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교환 및 정책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로서 여성주민대표, 전문가대표, 공무원, 의회의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서 기능한다.

여성발전위원회는 시에 가장 많은 비율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발전위원회가 여성정책추진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다. 여성발전위원회의 제안사항이 다소는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 있기는 하지만, 일년에 정기적으로 지역여성발전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여성정책이 공무원 단독의 정책집행이 아닌 지역민의 의견이 투영된 주민대응적 정책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의 제약에서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의 정책개발을 위해서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필요하다.

■ 기초자치단체장에 대상 여성정책연찬회 개최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와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 남녀평등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와 남녀평등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및 관련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여성부나 행정자치부가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여성정책연찬회를 매년 1회 정도는 최소한 개최하고, 개최 시에는 여성부 산하 양성평등교육진흥원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일정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여성정책 교육을 받도록 하여 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관심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다.

■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현재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평가,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의 합동평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평가가 주된 평가이긴 하나 이는 여성정책이 갖는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여성정책을 전반적, 체계적으로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성정책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상위기관에서 제공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은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 여성정책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실시

여성정책담당공무원의 조사응답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의 특수한 전문정책영역으로서 이에 대한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기 곤란하다.

여성의 욕구와 사회발전의 목표를 연결하는 가치의 통합을 위해서는 여성정책담당공무원들이 여성정책이 사회발전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으며, 여성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왜 중요한지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고, 집행방식과 효과성을 감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직무에 관련한 여성정책 교육과 부가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정책의 활성화가 전국적 지방조직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 지역 여성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본 연구결과에서 여성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간의 순위를 보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여성단체를 꼽았다. 그 만큼 여성단체는 지역 사회에서 지역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행정기관에 여성정책을 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한다. 현재까지는 여성정책과 관련한 행정기구와 NGO와의 관계가 관이 주도하고 NGO는 행정기구에 의존하거나 혹은 배타적, 중립적 입장이었다면 앞으로의 관계는 상호 협력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성단체가 여성의 참여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 담당하고 행정기관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행정적, 시설적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방향으로의 협조체제 구축이다. 이러한 여성단체에 대한 활성화 지원과 여성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은 특히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안고 있는 인력과 재정난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지역 대중매체를 통한 여성정책 홍보 및 협조체제 구축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현대사회는 다매체 다채널의 시대가 되었다. 특히 정보사회라 불리는 21세기에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새로운

미디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리라 생각된다. 특히 현 사회에서 지식의 힘은 정보의 힘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는 대부분 대중매체를 통해서 얻어진다. 따라서 대중매체가 힘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매체에서 어떤 문제들을 포커스로 다루는가에 따라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 사안에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녀평등 문제를 논설, 신문, 잡지, 라디오, TV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들이 의제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 대중매체들이 지속적으로 남녀평등의 중요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의 필요성, 여성의 복지증진을 통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의 중요성,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등을 홍보 한다면 한층 지방의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효율성을 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여성정책담당부서와 여성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여성편집인(언론인) 수의 증대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중매체와의 접촉을 시도하고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 상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광역자치단체와 도는 5년마다 기초자치단체들과 협력하여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매년 12월까지 시·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업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시·도에서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시 기본지침을 기초자치단체에 주고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검토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면서 여성정책을 연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정책이 갖는 특수성으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하여 여성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성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할 여성정책담당관 내지 여성정책과를 두어 시도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내 여타 부서와 여성정책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 지역 여성들의 여성정책 주체로서의 인식 고취

여성문제 및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행정기관과 주민 역시 이에 대한 인식이 취약한 상태이므로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권익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여성들의 관심과 참여가 강조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 여성들의 참여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참여의식이란 공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 스스로의 자각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여성들이 지방 여성정책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효과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한 사회교육방안으로는 지역사회 내 널리 퍼져 있는 소모임을 활용을 통해 행정기관에서 나오는 소책자나 팸플릿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정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여성관련 사업들을 파악하는 방안 또는 자치단체의 업무나 사업정부를 지방의회나 행정기관과 같이 공유하는 방안도 있다.

■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정책기능 확대

여성정책프로그램의 수행, 여성정책의 집행 내용이 주로 여성의 평생교육참여건강화, 여성의 문화활동기회확대 등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으나 향후 정책의 방향이 여성의 직업능력개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여성정책이 지역여성의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야 한다. 직업능력의 개발은 평생교육기회의 제공, 문화활동기회의 제공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 것으로 사료되나, 여성정책이 형식적인 사업으로 전시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산증액과 인력증원을 전제로 한 여성 직업능력개발에 비중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방법	6
II. 이론적 고찰	9
1. 지방자치의 개념	11
2.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12
3.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중요성	16
4.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
III.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기반체계 현황	37
1. 여성정책 담당기구 및 인력 현황	39
2.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현황	46
3. 여성발전기금 조성	51
4. 여성위원회 설치 현황	56
5. 여성정책 사업내용	61
IV. 여성정책 기반체계 및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65
1. 조사개요	67
가. 조사대상자	67
나. 조사기간	67
다. 분석방법	67
라. 조사내용	68
2. 조사결과 분석	69
가.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기반체계에 대한 인식	69
(1) 전담조직	69

(2) 여성정책업무에 대한 전문성	71
(3) 여성발전기본조례	73
(4) 여성정책의 자치단체내 정책적 지위	75
(5) 여성부문 중장기 발전계획	78
(6) 여성발전기금	81
(7) 여성발전위원회	83
(8) 여성정책의 기여도 및 효율적 추진에 대한 평가	86
(9) 여성정책 기반체제와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	88
나.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내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	90
(1) 여성정책담당부서의 독자적 영역	90
(2) 여성정책 업무 수행의 헌신도	91
(3) 여성정책 담당부서 구성원간의 결속력	92
(4) 부서장의 여성정책 관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정도	93
(5) 여성정책 담당 부서장의 내·외부 조직들과의 활동의 적극성 ..	94
(6) 여성정책이 다루어지는 비중	95
(7)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 분석	96
다.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에 대한 외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 ...	97
(1)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	97
(2) 여성단체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	98
(3) 여성정책담당부서와 지역 여성단체와의 협조 유지	99
(4)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영향력	100
(5) 지역 대중매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	101
(6) 각 주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지지도	102
(7) 각 주체가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104
(8) 각 주체의 지지도와 영향력의 비교	106
(9)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 분석	107
V.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종합적 분석	109
1. 여성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성	111
2. 여성정책 추진 영향요인 간의 영향력 순위	113

3. 여성정책 추진시 겪는 문제의 심각성	114
4. 여성정책 담당부서 역량 강화요인	118
VI. 결 론	123
1. 요약	125
2. 정책적 제언	131
3. 향후 과제	142
참고문헌	145
부 록	149

표 목 차

<표 III-1>	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여부 현황	47
<표 III-2>	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여부 현황	49
<표 III-3>	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여부 현황	51
<표 III-4>	시 여성발전기금 조성여부 현황	52
<표 III-5>	군 여성발전기금 조성여부 현황	54
<표 III-6>	구 여성발전기금 조성여부 현황	56
<표 III-7>	시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현황	57
<표 III-8>	군 여성발전위원회 설치여부 현황	59
<표 III-9>	구 여성발전위원회 설치여부 현황	60
<표 III-10>	지방자치단체 여성 업무와 법적 근거에 따른 업무 유형	63
<표 IV-1>	인구통계학적 특성	68
<표 IV-2>	여성정책을 전담으로 하는 조직 유무	69
<표 IV-3>	여성정책 전담 조직이 있는 경우 전담공무원의 수	70
<표 IV-4>	현재의 전담직원 수에 대한 의견	70
<표 IV-5>	전담조직 규모와 여성정책 효율적 추진과의 상관계수	71
<표 IV-6>	여성정책관련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의 요구정도	72
<표 IV-7>	자신에 대한 여성정책 수행관련 전문성 보유 평가	72
<표 IV-8>	업무부서의 공무원에 대한 여성정책 수행관련 전문성 보유 평가	73
<표 IV-9>	소속 시·군·구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여부	74
<표 IV-10>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하지 않은 이유	74
<표 IV-11>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여성정책 추진에 기여 여부	75
<표 IV-12>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 집단과 조례제정의 기여 인식정도	75
<표 IV-13>	지역 여성발전을 중요한 행정수행목표로 삼는가 여부	76
<표 IV-14>	지역의 여성발전을 중요한 행정목표로 삼는지 여부와 효율적 추진에 대한 인식의 교차분석	76

<표 IV-15>	소속 시·군·구가 현재 여성정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문	77
<표 IV-16>	향후 여성정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문	78
<표 IV-17>	여성정책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유무	79
<표 IV-18>	중장기발전계획 보유와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 상관계수	79
<표 IV-19>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증원 비율	80
<표 IV-20>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증액예산비율	80
<표 IV-21>	소속 시·군·구의 여성정책예산의 규모	81
<표 IV-22>	여성발전기금이 여성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의견	82
<표 IV-23>	여성발전기금 조성 여부	82
<표 IV-24>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의 활용 여부	83
<표 IV-25>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유무	83
<표 IV-26>	여성발전위원회 기능에 대한 인식	84
<표 IV-27>	여성발전위원회 연중 개최 빈도	84
<표 IV-28>	여성발전위원회 제안사항 수용정도	85
<표 IV-29>	여성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는 데 따른 제약요소	86
<표 IV-30>	여성정책이 지역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 정도	86
<표 IV-31>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동의	87
<표 IV-32>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삶의 질 제고와의 관계	87
<표 IV-33>	여성정책담당부서가 여성정책관련 사업들을 독자적으로 수립· 집행할 수 있는 범위의 정도	91
<표 IV-34>	여성정책 관련업무 수행시 헌신도 정도	92
<표 IV-35>	여성정책 담당 구성원간의 결속력 정도	93
<표 IV-36>	부서 내부의 여성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부서장의 노력정도	94
<표 IV-37>	부서장의 내·외부 조직들과의 활동의 적극도	95
<표 IV-38>	여성정책이 다루어지는 비중 정도	96
<표 IV-39>	내적 요인과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	97
<표 IV-40>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 정도	98
<표 IV-41>	여성단체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의 정도	99
<표 IV-42>	소속 부서의 지역 여성단체와의 협조관계 유지 정도	100

<표 IV-43>	여성정책관련 예산확보, 여성정책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영향력 정도	101
<표 IV-44>	지역 대중매체의 여성문제 및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 정도 ...	102
<표 IV-45>	각 주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지지도	103
<표 IV-46>	각 주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지지도 평균	104
<표 IV-47>	각 주체의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105
<표 IV-48>	각 주체의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순위	106
<표 IV-49>	각 주체의 여성정책에 미치는 지지도와 영향력 비교	107
<표 IV-50>	외부적 영향요인과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	108
<표 V-1>	여성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성 정도	112
<표 V-2>	여성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순위	114
<표 V-3>	여성정책 수행시 겪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정도	117
<표 V-4>	여성정책 수행시 겪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순위	118
<표 V-5>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역량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인	120
<표 V-6>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역량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인 순위 ...	121

그 림 목 차

<그림 II-1>	지방자치단체 구조	13
<그림 II-2>	여성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35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방법	6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새로운 21세기는 정보통신의 발달 및 문명이기의 발달로 상당한 변화 속도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 문명이기의 발달과 같은 하드웨어 적인 변화뿐만이 아니라 인간관계와 같은 소프트한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낳고 있는데 가족간, 조직간, 그리고 남녀간 관계도 재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성 평등 문제는 거의 모든 사람들의 일상 속에 파고들어 영향을 미칠 정도로 지난 몇 년 사이에 큰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기존의 성 평등 개념은 남성과 여성 양쪽을 파트너로 인식하기보다는 한쪽 성이 갖고 있는 이익을 빼앗아 다른 한쪽의 성에게 넘겨주는 win-lose의 의미로 받아들여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현재의 성 평등 개념은 win-win의 개념을 갖는 것으로 여성과 남성에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고, 경제활동 내에서 제공되는 물질적 정신적 보상도 공정하게 배분하며 사회문화적인 부분에서도 남녀가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며 혜택도 공정하게 수혜하여 양성 모두가 행복해 지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 남녀에게 모든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함과 동시에 잠재되어 있던 여성인력을 활용함으로써 국가 전체적으로도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성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차별철폐를 시민의식에만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시민의식이 상당히 높아 저절로 성 평등 문화가 형성된다면 문제는 훨씬 쉽겠지만 우리나라처럼 가부장적 문화 잔재가 뿌리 깊게 남아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시민들, 특히 여성들의 몫으로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면 당연히 무리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를 사회문제화 시켜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국내외 정부들이 꾸준히 노력을 지속하여 왔다. 1985년 나이로비 세계여성대회 결의문 채택에서는 여성 지위의 개선과 감독을 위한 국가기구설치를 의무화하였고 UN도 정치적 결정

과정에 여성정책적 관심을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들을 전개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초기의 노력들은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의 여성정책 관련 담당기구 설치를 통해 수행되다가 점차 지방정부 여성정책 관련 담당기구로 확대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1980년대부터 여성들의 권익향상에 큰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여성정책전담기구들을 신설하였고, 1988년에는 정무장관 제2실을 설치하여 여성정책을 종합·조정하도록 함으로써 종합적인 여성정책의 수립과 추진이 가능하게 하였다. 1990년대에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권익향상이 더욱 두드러지게 증대되었고 2001년부터는 여성정책만을 전담하는 여성부가 신설되어 여성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방 또한 1980년대 각 시·도에 가정복지국을 신설하여 여성정책의 추진을 위한 조직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가정복지국장을 여성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여성공무원의 권익증진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아울러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지역 여성의 요구와 필요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선거를 통해 정책결정자인 자치단체장에게 정치적인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여성의 목소리가 보다 직접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여전히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책 환경과 추진체계가 미약한 실정이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여성관련 정책들의 집행 사업들을 살펴보면 중앙의 여성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시책시달 사항에 역점을 두고 있었다.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성정책들이 지역여성들의 욕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여성정책의 개발과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도나 광역자치단체를 벗어나 기초자치단체로 내려 갈수록 그 정도는 심각하다.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직접 정책의 수혜를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일차적인 행정조직체계로서 주민과 행정이 가장 밀접하게 연계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와 도에 비해 여성정책이 상위정부에 의한 선언적 정책에 머무를 수 있는 위험성의 소지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왜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는

가? 향후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요인들은 무엇인가? 이에 대한 답은 여러 각도에서 설명될 수 있겠지만,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가지고 있는 기반체계와 조직 내·외부 영향 요인으로 하여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먼저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가지고 있는 기반체계, 즉 행정적·재정적·법적인 내용들이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는가가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담당부서에 게 법적·공식적 권한과 관할 업무 영역을 확보해 주기 때문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조직내부의 영향요인은 여성정책담당 부서의 조직원들이 얼마나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관심을 갖고 있는가, 여성정책 담당 구성원들 상호간의 응집력은 있는가, 부서장은 여성정책 업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 조직들과 얼마나 적극적으로 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가 등을 살펴봄으로써 여성정책 담당조직의 내적 역량을 분석하는 것이다.

아울러 여성정책 담당부서에 영향을 미치는 외적 영향요인들, 즉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여성들, 지역 대중매체, 지역 여성단체, 타 행정부서들이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또한 어느 정도 지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이는 어떠한 부서라도 그 부서가 정책과정상의 본연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그 부서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들의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현대 정책과정이 통상 힘이 있는 부서에 의해 주도되고, 이들 부서의 정책결정은 상호작용이라는 여과장치를 거쳐 이루어진다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외부환경들과의 관계를 통한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위치를 파악하는 일은 앞으로 기초자치단체내에서 실효성 있게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현재까지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과 관련된 기존 연구는 단체장의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설치, 담당공무원들의 성인지적 관점에 대해 부분적으로 분석한 정도로, 매우 미흡하며 거의 실태 파악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가지고 있는

기반체계 및 내적 역량과 외부적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한 실태가 제대로 파악할 때 개선되어야 할 부분과 아울러 적실성 있는 정책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갖고 있는 기반체계 및 내적 역량을 파악함과 동시에 외부환경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내용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분석되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내부적 특성에 관한 사항들을 분석하였다.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내부적 특성으로는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예산, 인력, 법령, 여성위원회, 여성발전기금)이 얼마나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는가와 여성정책 담당조직이 갖는 업무의 전문성, 조직구성원간의 결속력, 그리고 조직 리더의 수완 등을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외부적인 영향 요인에 대한 분석인데, 여성정책 담당부서와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외부적인 영향요인들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이다. 여성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에는 여타 환경과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둘러싼 환경들이 얼마나 호의적으로 여성문제나 정책에 관심을 갖고 있는가는 여성정책 담당부서에 상당한지지 세력으로 등장하여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을 수행하는데 수월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을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식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조사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각 기초자치단체의 기반체계에 대한 조사와 향후 기초자치단체가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내용에 대한 조사이다.

우선 기반체계에 대한 조사는 232개 기초자치단체 중 222개 단체를 조사하였다. 조사내용은 각 기초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여부, 여성정책 담당기구 형태, 여성정책 담당 인력 수, 여성위원회 설치여부, 여성발전기금 조성 여부를 검색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이 홈페이지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 각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 담당직원과 전화로 통화하여 조사하였다. 홈페이지 검색과 전화 통화는 2003년 3월 3일 -3월 21일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기초자치단체를 시·군·구로 나누어 분석하였는데 이는 각 기초자치단체도 인구나 재정, 행정기구 수가 시·군·구가 다르기 때문에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체계도 다르다고 간주하였기 때문이다.

기초자치단체가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요인에 관한 조사는 232개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지 발송은 2003년 8월 초 -말까지 우편으로 발송하여 이루어졌으며 464부를 발송하여 364부를 회수하였다. 분석기법은 SPSS11.0을 사용하여 빈도분석과 상관관계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지방자치의 개념	11
2.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12
3.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중요성	16
4.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0

1. 지방자치의 개념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국가의 일정한 감독 아래 그 지역 안의 공동문제를, 자기부담에 의하여, 스스로(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뜻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측면이 있다. 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와의 관계의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지방자치단체안의 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측면이다.

지방자치를 지방자치단체와 국가(중앙정부)와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즉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중심으로 이해할 때 이를 단체자치라 하고, 지방자치를 지방자치단체 안의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즉 주민의 자치행정에의 참여에 중점을 두고 이해할 때 이를 주민자치라고 한다.

단체자치는 이를 법률적 의미의 자치라고도 하는 바, 일정한 지역과 주민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중앙)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된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아 일정한 공공사무에 관하여 국가(중앙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처리하는 것을 말하고, 주민자치는 이를 정치적 의미의 자치라고도 하는 바, 자치행정이 단연히 주민의 참여 속에(주민이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하여 그 자신의 의사에 따라)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는 항상 단체자치와 주민자치의 두 측면의 결합 위에 성립되는 것이며 두 측면이 각각 별개로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즉,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가 대외적으로 국가(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하여 구 자산의 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하되, 그것을 대내적으로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처리할 때에 비로소 완전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단체자치를 대외적·형식적 측면의 자치라고 한다면 주민자치를 대내적·내용적 측면의 자치라고 할 수 있는바, 지방자치는 대외와 대내, 그리고 형식과 내용의 두 측면의 종합 위에서만 가능하다.

2.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가.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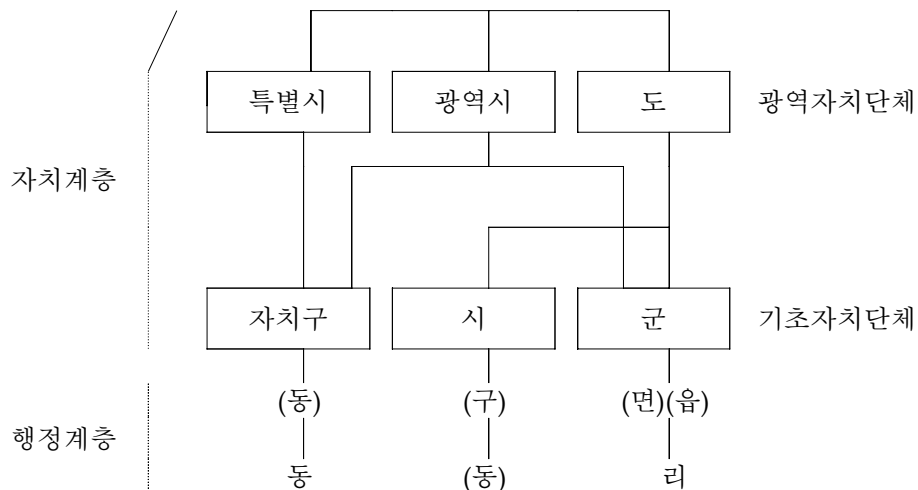
지방자치단체란 국가의 일정한 구역 내의 주민에 대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행사하는 법인격 있는 단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영토의 일부를 구역으로 하여 국가로부터 주어지는 권한을 자주적으로 행사하는 지역단체로서 일정한 구역, 주민 그리고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공법인인 것이다. 즉 자치단체는 국가와는 별개의 독자적인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법인격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로는 ①장소적 요소로서의 구역(area)과 ②인적요소로서의 주민(residents, population) 및 ③법제적 요소로서의 자치권(rights of autonomy)의 세 가지라고 하겠다(손재식, 1971; 66).

지방행정업무는 복잡하고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어느 하나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행정기관이 모두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가 없다. 어떤 업무는 비교적 좁은 지역을 단위로 수행할 수 있는데 비하여, 어떤 업무는 보다 광역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서만 처리될 수 있는 것이 있다. 좁은 지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나 행정기관들이 광역을 관할하는 자치단체나 행정기관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되어 광역행정업무를 수행하는 바, 그것이 현실적으로는 상급단체 또는 상급기관과 하급단체 또는 하급기관의 계층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계층(tier)은 성격상 크게 두 가지로 나누인다. 그 하나는 행정계층이고 다른 하나는 자치계층이다.

행정계층이란 지역행정기관간의 상·하 수직적인 지휘·복종관계의 체계를 말한다. 한편 자치계층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상·하관계의 체계를 말한다. 원래 각 지방자치단체는 법적으로 상호 대등한 지위에 있으며, 그들 간에는 상·하관계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고 있는 바,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지방자치단체도 상급감독기관의 지시와 통제를 받으므로 그 감독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상·하관계가 성립하며,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도 그 자치단체의 처분이 위법하거

나 현저히 부당한 경우에는 감독기관이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으므로 그 감독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상·하관계가 성립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 경우 감독기관이란 보통 좁은 지역 자치단체에게는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게는 국가가 되기 때문에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와 좁은 지역 자치단체 사이에 상·하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①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와 ②시와 군과 자치구의 2종으로 하고 있는데, 특별시와 광역시 및 도는 중앙정부의 직할하에 두고, 시는 도의 관할구역 안에, 군은 광역시와 도의 관할구역 안에 두며, 자치구는 특별시와 직할시의 관할구역 안에 두고 있는 바 이들이 감독관계에 따라 상·하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II-1> 지방자치단체 구조

나.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와 기능

이상과 같은 지방자치단체 구조에 있어서 본 연구의 중심을 이룰 기초자치단체의 지위와 기능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이다. 지방자치란 원래 주민들이 오랫동안 일상적으로 접촉하면서 생활을 함께 해가는 가운데 공통적인 경험을 가지게 되고 이런 경험을 공유해 나가는 동안에 그들 사이에 '우리의식(we-feeling)'을 키워, 그들 사이에 공통적인 문제를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는데서 성립한 것이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gross-root democracy)'라고 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렇게 볼 때 그러한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일 것이 요청되는 바, 그 요청에 가장 적합한 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이다.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한다. 지방자치에 있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가장 본래적인 자치단체로서 모든 지방적 사무는 그에 관한 특별한 제한조치가 없는 한 당연히 이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다.

2003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자치단체 현황을 보면, 광역자치단체는 1특별시, 6광역시, 9도로 구성되어 있고, 기초자치단체는 총 232개로 72시, 91군, 69자치구로 되어 있다.

<표 II-1>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현황

	기초지방자치단체			
	총계	시	군	자치구
전국	232	72	91	69
서울특별시	25			25
부산광역시	16		1	15
대구광역시	8		1	7
인천광역시	10		2	8
광주광역시	5			5
대전광역시	5			5
울산광역시	5		1	4
경기도	31	23	8	
강원도	18	7	11	
충청북도	11	3	8	
충청남도	15	6	9	
전라북도	14	6	8	
전라남도	22	5	17	
경상북도	23	10	13	
경상남도	20	10	10	
제주도	4	2	2	
구 분			실 · 과 · 담당관	
시	인구 20만 미만		17개 이내	
	인구 20만 이상 50만 미만		22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25개 이내	
군	특별시 자치구		22개 이내	
	광역시 자치구	인구 50만 미만	14개 이내	
		인구 50만 이상	15개 이내	
구	인구 5만 미만		9개 이내	
	인구 5만 이상 15만 미만		13개 이내	
	인구 15만 이상		15개 이내	

3.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중요성

가.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중요성

지방자치의 실시는 우리나라의 정치·경제·사회·문화·행정의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무엇보다 지방정부가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됨으로써 각 지방의 현실과 특성에 맞는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증대된 점은 지역 여성정책 전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95년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 제1조는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제5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책무를 진다라고 하여 지방자치단체 또한 개인의 존엄을 기초로 하여 남녀평등의 촉진, 모성의 보호, 성차별적 의식의 해소 및 여성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의 구현과 복지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결국 여성발전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듯이 지역 여성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도 또한 남녀평등 사회를 구현하는 것인데, 남녀평등은 성별에 의해 능력이나 역할을 고정화시키는 의식과 제도를 변화시키고 성에 의한 차별과 폭력을 철폐 함으로써 가정과 사회의 모든 부분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개성과 능력을 자유롭고 대등하게 발휘하게 함으로써 남녀모두의 인권과 삶의 질을 보장하고 여성인력의 경제사회적 활용과 개발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가정의 목지와 국가 및 지역사회 기타 모든 사회조직의 민주화와 발전을 이루도록 하는데 있다.

남녀평등의 이러한 의미와 기능에 대한 자각과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법과 정책의 고안 및 환경의 조성은 20세기 인류가 이룩한 최대의 성과 중 하나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실질화시키는 것은 전 세계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통된 발전전략이자 과제가 되고 있다¹⁾.

그런데 남녀평등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1995년에 채택된 제4차 세계여성회의의 행동강령(북경행동강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정책을 기획, 시행, 평가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증대하여 남녀의 관심과 경험, 관점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성 평등의 주류화(mainstreaming of gender equality)”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성 평등의 주류화는 다양한 사회구성원이 균등하게 사회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그로 인한 혜택과 부담을 함께 나누게 함으로써 진정한 대의 민주주의의 실현과 정책결정의 질적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방안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세계 많은 국가에서 여성정책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다(김엘림 외, 1999).

1998년 지방자치단체의 세계적인 연합체인 지방자치단체국제연맹(IULA, International Union of Local Authorities)도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성에 관한 세계선언문』을 채택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생활에 가장 근접한 정부조직이자 서비스 제공자, 생활환경조성자, 고용주로서 ‘성 평등의 주류화’와 여성의 기본적 인권보장의 실현에 의해 남녀가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또한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한 민주주의와 발전에 필수적인 요건임을 강조하고 있다(서울특별시, 2000).

이러한 동향에 부응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여성 개인의 문제가 지역여성 문제로 발전시켜 여성정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1995년 민선자치단체제도의 출범과 더불어 과거 특수계층 곧 요보호여성 및 취약계층 여성을 대상으로 하던 잔여적(residual-welfare) 복지 중심의 정책으로부터 일반 여성들의 사회참여 욕구를 강조하는 제도적 복지정책(institutional-welfare)으로 의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일부 단체장들은 새로운 여성정책의 접근을 표방하는데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지역여성들을 위한 정책을 통해 여성들에게 잠재해 있던 능력을 개발하고 개발된 여성들의 능력을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인적자원

1) UNDP(2000), Human Development Report 2000-Human Rights and Human Development; 유엔개발계획 한국대표부, 서울대학교 법학 21연구단 공익·인권법센터(2000), 인권과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 Report 2000 한국어판); 김엘림·윤덕경·박현미(2001), 『20세기 여성인권법제사』 참조; 김엘림·김혜영(2001), 『남녀평등도시 모델개발 연구』, p.5.

개발 차원으로 여성정책을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성정책들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나.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위상과 권한

지방 행정 조직 내에서 여성정책이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기 위해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떠한 위상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여성정책 업무와 여성복지 업무 등 여성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여성정책 담당부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다양한 형태로 존재 하지만 몇 가지 공통적인 성격을 갖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부서의 신설 및 개편이 자치단체장의 의지나 중앙정부의 지침²⁾ 혹은 지방에 여성정책이 확산되는 전국적인 흐름에 의해 이루어 졌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성정책은 지역여성들이 본인들의 실질적 인 삶 속에서의 차별이나 불평등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의 결정과정을 통해 도입되었기 때문에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존재나 여성업무의 필요성이 행정조직 내의 충분한 인식의 공유를 통해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설치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상부의 지시를 통한 또는 분위기에 휩싸여 이루어진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신설이나 개편은 여성정책 담당 부서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대부분의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여성정책 업무는 여성정책개발과 남녀평등문화사업, 여성 포럼 및 세미나, 여성발전기금조성 및 운영, 여성정책 홍보교육, 중장기발전계획 등 지역 여성들의 다양한 문제와 관련된 정책 자료들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업무들은 대부분이 집행과는 거리가 먼 조사·연구 사업이다.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집행력을 가지지 못할 경우 조사한 자료나 개발한 정책 과제가 연결되지 못한다. 집행부서가 아닌 여성정책 담당부서는 ‘포럼’ 혹은 ‘홍보’이상을 수행하지 못하고, 연구결과를 정책화할 수 있는 제도

2)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도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가 마련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책의 시책으로의 반영여부도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이루어진다. 또한 여성정책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성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여성과 관련되거나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업무가 여성정책 담당 부서의 업무로 잘못 인식되어 타부서의 업무는 여성과 관련이 없다는 인식을 정당화시키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여성업무가 여성정책 담당부서만의 업무라는 사고로 여성문제가 전체 행정 조직 내에서 주류적인 문제로 발전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된다.

뿐만 아니라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예산은 타부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당히 미흡³⁾하며 부서 간에 서열이 존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부서가 말단에 위치함으로써 비중 있는 부서나 업무를 통해 개인의 승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공무원들에게 여성정책 업무에 대한 사기를 저하시킨다. 부서의 서열과 책정된 예산액으로 볼 때 여성정책 담당부서는 위상과 권한에 있어 조직 내에서 가장 미약한 부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사실 여성정책 담당 부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들이 담당하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핵심적인 업무라고 받아들여지고 타 부서에서도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행하는 업무들이 무겁게 받아들여지느냐가 조직내에서의 위상에 권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런 면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성정책 담당부서들의 위상과 권한은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적 규모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직접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 내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기구가 존재하고 그 일을 담당하는 인력들이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그 일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그리고 지역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여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정에 참여한다면, 아울러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여성정책에 대한 명백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있다면 중앙에서 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의 집행은 훨씬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3) 2002년 원주시 여성정책과 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0.28%, 진주시 0.18%, 도봉구 0.65%였음.

4.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조직 내에서 미약한 권한과 낮은 지위를 갖게 되는 원인은 무엇일까?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 부서의 권한과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대는 정책 영역들 간에 구분이 어렵고, 한 부서의 정책 활동이 여타 부서들의 정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이 특징이다. 이 때문에 어떤 한 부서의 정책결정과 집행에는 문제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각기 달리하는 여러 유관 부서들이 연루되어 상호작용을 펼치는 것이 보통이다(Peters, 1981).

정책결정과정에서 자신의 소관영역에서는 물론이고 타부서의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스스로의 정책선호를 반영시킬 수 있는 강력한 부서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의 소관영역에서조차도 타부서들의 압력의 굴레 속에서 종속적으로 기능해야 하는 나약한 행정부서들도 적지 않다.⁴⁾ 그렇다면 이러한 현상은 왜 발생하는가? 이러한 현상은 조직 내부의 문제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영향 요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여성정책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산이나 인력, 업무의 전문성(bureaucratic expertise, knowledge), 조직구성원의 결속력(organizational *esprit*, cohesion), 리더의 수완(administrative statecraft, leadership) 등과 같은 조직내부가 안고 있는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외부 집단들로부터의 지지와 견제 때문일 수도 있다. 하나의 부서는 그 부서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영향 세력으로부터 받는 지지와 견제간의 불균형의 규모와 방향 여하에 따라 그 부서가 갖는 힘이 강화 또는 위축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으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우선,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행정기반체계이다.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이라는 가시적 성과인 결과물을 가지고 그 결과가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인지를 찾아낸다면 바람직하겠으나 여성정책의 가시적 성과물이 수량

4) Meier(1993: 57), Rourke(1984: 77), 최병선(1992: 205) 참조.

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투입요소인 전담조직유무와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위원회운영이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요인으로 가정하였다. 즉 전담조직이 있고, 전담인력이 여성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가며, 이를 지원하는 여성발전조례의 법적 제도화가 보다 더 여성정책을 원활하게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된다고 보는 것이다. 여성발전기금조성과 여성발전위원회의 활용은 여성정책을 보다 활성화하고 보다 더 지역여성의 요구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장치로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조직 내부적인 특성이다. 조직내부적인 특성은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가지고 있는 기반이 얼마나 단단하게 구축되어 있는가 외에도 여성정책 조직이 갖는 업무의 전문성, 조직구성원간의 결속력, 그리고 조직 리더의 수완 등은 여성정책을 수행하는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조직내부적인 특성이 강할 때 기초자치단체 내에서 여성정책은 유명무실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환경과의 관계이다. 만약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여성문제나 정책에 관해 자신의 문제 인식과 시각을 반영·관철시킬 수 있다면 그것은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가지고 있는 역량이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역량보다 크다⁵⁾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인 현대 행정에서는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외부세력이 그 사안에 대한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또한 상당히 크다. 따라서 하나의 부서가 여러 부서에 걸쳐져 있는 사안에 대해 자기 부서에 유리한 방향으로 정책을 결정하였다면 그것은 그 부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조직들과의 관계가 우호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5)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Kelman(1987), Bachrach & Baratz(1963), Rourke(1972), Allison(1972B) 참조.

가.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기반체계 요인

(1) 전담조직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 정책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집행조직으로서 작동된다. 정책은 사회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에 대하여 정부가 해결할 방향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 정책수단을 통하여 집행이 되어야 효과를 발생한다. 즉, 정책의 효과는 정책집행의 결과로서 나타나고, 정책집행은 정책을 구체화시키고 확산하는 중요한 단계이다. 또한 정책집행이란 정책이 형성되어 실제로 업무가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일상화 내지 정형화 될 때까지의 과정을 의미한다.⁶⁾ 따라서 성공적인 정책집행은 정책추진체계와 조직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되어있는가와 집행주체로서 담당공무원의 역할이 어떠한가에 달려있다.⁷⁾

Smith는 집행담당이 집행에 미치는 요인으로 정책을 집행하는 구조의 안정성과 인원의 자질과 집행담당조직의 리더십, 그리고 집행담당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나 프로그램의 양과 담당기관의 일반적 능력, 그리고 일반적인 행정능력 등이라고 하고 있다.⁸⁾ 집행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집행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집행조직 전체가 집행에 대한 의욕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여성정책은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하는데 일반적 조직의 타성은 정책의 확산과 효율적 추진에 장애적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지방조직은 업무의 한계성과 조직내의 굳어진 SOP(표준운영절차) 때문에 전례 학습적인 정책이 기계적으로 추진되는 경향이 많다. 따라서 확고한 전담조직이 있지 않고서는 여성정책이 끼어들 자리는 거의 없다.

또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일선에서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집행주체인 공무원들이 중요하다. 그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책 내용에 대한 태도가 어떠하며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6) Schneider, Allen L. (1982), "Studying Policy Implementation: A Conceptual Framework," *Evaluation Review*, Vol 6:6 p. 715.

7) 조우철(1998), 여성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실증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8) Thomas B. Smith.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Policy Sciences*, June 1973, p. 202.

정책의 성공여부가 좌우되기 때문이다. 정책의 성공여부는 첫째, 집행담당공무원이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태도로 임할 때 정책이 성공적으로 집행될 수 있고, 둘째 문제해결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문제해결능력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판단력이 있어야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축성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처리능력도 중요하다. 일선 공무원들은 특정한 정책을 집행할 때 어떤 시민과 접촉할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광범한 재량권을 행사한다는 점과 일선관료의 개인적 행동은 정부당국의 행태를 의미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집행조직은 대개의 경우 정부관료 조직의 한단위로 되어 있다. 정책집행을 집행조직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세 가지 변수는 첫째, 집행조직의 구조와 인적 속성, 둘째, 집행조직의 리더십, 셋째, 집행프로그램과 프로그램을 수행할 능력을 들 수 있다.⁹⁾

(2) 여성발전기본조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하는 법이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이나 기타 행정규칙과는 구별된다. 조례란 형식적 개념으로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 형식으로서 지방법규이며, 실질적 개념으로 보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권에 의하여 자주적으로 정립한 법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이라 할 수 있다.

조례의 법적 지위와 한계로는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지방자치법 제15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방자치제의 조례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사항

9) 조우철(1998), 전계서, p. 35.

을 제한하고 있다. 관계법령에 의하면 자치입법권의 범위는 매우 협소하다. 헌법은 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헌법 제117조 제1항)고 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고 있고, 이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은 자치입법으로 조례와 규칙의 두 가지 형식을 인정하고 있으므로(지방자치법 제15조~제21조) 자치입법권의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조례의 규율대상이 되는 자치사무의 범위가 사실상 한정되어 있으며, 중요성이 낮은 사무에 관해서만 조례와 규칙으로 정하는 실정이다.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예를 들면,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여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조례를 금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정할 수 있다고 하여 조례가 정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자치입법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주민의 복지사무와 재산의 관리 사무를 위한 것이며 따라서 자치입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는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7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고려해 볼 문제는 법률의 공백, 즉 법률이 침묵을 지키고 있는 경우의 조례제정 문제와 법령과 조례가 상충될 때의 조례제정 가능성의 문제이다. 법률과 조례가 상충될 때 법률우위의 원칙을 존중하면서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법률추가조례와 법률초과조례의 제정이 가능한가 하는 점과,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될 것인가의 문제이다.

법질서의 안정 및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률의 위임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법령의 전국적 최저기준(national minimum) 이론은 국가의 법령을 전국적 최저기준으로 파악하여 그 최저기준에 위반하지 않는다면 폭 넓은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론이다. 사회복지 등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헌법 제34조 제2항)을 인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책임이 있

다면 최저생활 이상의 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은 정책의지의 표출로 필요하다.

법률의 공백이라 함은 규제대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미처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 국법의 미비인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판례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 즉, 국가의 입법미비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조례제정권의 행사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고 했다. 판례는 법률의 공백 부분에 대하여 조례제정권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여성정책을 수행할 의지의 표출로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3) 여성발전기금

예산 혹은 재정활동은 일반회계의 세출을 뛰어넘어 특정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구현하는 수단으로서 오늘날 특별회계나 기금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 가운데서 기금제도는 특별회계와는 달리 예산회계제도의 구속을 받지 않으면서도 동일한 재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일종의 변형된 재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기금제도는 예산총계주의가 갖는 경직성에서 벗어나 자금관리의 자율성과 자금운용의 탄력성을 확보하는 데 존재의의가 있다. 기금관리제도가 갖는 이러한 성격은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다. 1964년 생활보호기금을 설치한 이후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 관리기금의 역할과 기능은 부단히 확대·심화되어 왔으며 제도취지에 부합하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열악한 재정형편과 물량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대한 재정의 관심도는 낮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틈새를 기금제도를 통하여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여성발전기금도 일반예산과 달리 특별재원으로 일부의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이다. 여성발전기금은 지역의 창의성 있는 프로그램의 지원이나 아이디어의 경쟁적인 창달을 통한 지역의 문화변동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4) 여성발전위원회

여성발전위원회는 시민참여제도로서의 기제이다. 시민참여기제로서는 그 종류가 30개가 넘는다. 이 가운데 투표나 국민소환과 같은 전통적 정치참여제도를 제외하면 정부과정에서 가장 보편화되어 있는 것이 공청회와 위원회이다. 위원회는 특정분야의 전문가나 정부정책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대표를 통하여 참여하는 제도이다.

위원회는 영구적이던 임시적이던 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¹⁰⁾ 첫째는 시민으로 하여금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둘째는 시민과 공무원들간의 상호 의사전달을 증진시키는 것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기능적 분야에서 시민의 전문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공청회와는 달리 비교적 쉽게 정부조직에 통합될 수 있고, 구성원들로 하여금 주제에 대한 전문성과 제도에 대한 수용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위원회는 시간과 노력에 따른 제약점과 주로 사회에서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게 된다는 폐단을 낳기도 한다. 그러나 위원회는 잘 구조화된다면 단순히 가치선호를 표명하는 공청회보다 정책의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참여매체가 될 수 있다. 여기서 잘 구조화 된다는 것은 주로 위원들이 제공하는 지식에 근거를 두고 이들의 선정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확보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원회의 효과는 다양한 상황적 요인에 따라 가변적으로 나타난다. 기존 문헌에 의하면, 위원회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크게 인적, 제도적, 그리고 환경적 요인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인적변수는 참여에 관여하는 당사자들에 관련된 변수로서 참여자의 성분, 태도, 가치관, 그리고 참여자의 선정방법 등을 의미한다. 제도적 변수는 참여제도 자체의 구조적 특성뿐만 아니라 제도운영상에 나타나는 제반 절차상의 조건을 포함한다. 전자의 경우는 목표, 기능, 역할, 그리고 권한 등이 주요 변수로 지적되고 있고, 후자는 참여과정, 정보 및 자료, 안건 등을 그 내용으로 한다. 환경적 변수는 참여체제를 둘러싼 혹은 참여가 일어나는 상황적 배경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참여제도를 설치·운

10) Zimmerman(1986), *Participation Democracy: Populism Revived*. New York: Praeger.

영하는 정부조직의 특성이나 정치적, 문화적 환경 등을 포함한다. 위원회의 효과의 일반화가 어려운 다른 하나의 이유는 효과분석의 주된 대상인 참여목표가 불명확하고 다양하다는 점이다. 위원회의 설치를 정당화하는 법적, 제도적 근거는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이 대체로 제도를 구성하는 기본요건은 차치하고서라도 참여의 목표마저도 명확히 규정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시민들은 참여를 주로 의사결정권한을 재배분하거나 자신들의 이익 또는 견해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제도적 장치로 보는 데 비해, 공무원들은 시민으로부터 지식이나 지지를 확보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반감을 분산시키거나 까다로운 시민을 흡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¹¹⁾ 위원회도 참여제도이므로 이상적 목표들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위원회는 다양한 목표 가운데 비교적 한정된 목표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목표의 선택도 위원회의 기능이나 성격, 참여가 일어나는 정부의 수준, 위원회가 다루는 문제의 성격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나.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내부적 요인

각기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부서간에도 어떤 부서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부서도 존재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는가? 바꿔 말해 특정 행정부서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며 어떤 원인에서 그 힘은 증대 또는 축소되는가? 행정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힘은 흔히 생각되듯이 행정기관의 공식명칭이나 예산(또는 인력)의 규모로서만 설명되는 것은 아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을 가진 부처나 부서도 업무 효율성에서는 저조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요인으로는 인력이나 재정력 뿐만 아니라 부서가 담당하는 업무의 전문성(bureaucratic expertise, knowledge)이나 조직구성원간의 결속력(organizational esprit,

11) Reagan and Fedor-Thurman(1987), Public Participation: Reflections on the California Energy Policy Experience, *Citizen in Public Decision Making*, p.104, New York: Geenwood Press.

cohesion), 부서장의 수완(administrative statecraft, leadership) 등도 중요하다. 이러한 요인에 대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부서가 지니고 있는 행정력(인력규모)과 재정력(예산의 규모, 기금)에 대한 역량도 중요하다. 인력과 예산은 함께 가는 부분으로 한 조직의 인력과 예산만을 보더라도 그 조직의 중요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행정부서는 그 부서의 전문지식의 수준에 따라 상이한 힘을 갖는다. 행정부서는 모두가 그 수행하는 기능과 관련하여 일정한 전문성을 지니나, 모든 전문성이 똑같은 비중으로 사회에서 존중받는 것은 아니다. 사회의 생존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거나 사회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매우 기술적인(technical) 것이거나, 아니면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tangible achievement)를 가져오는 전문성만이 정치사회에서 높이 평가되고 권력원천이 될 수 있다(Rourke, 1972).

셋째, 조직구성원들간에 결속력이 강한 행정부서일수록 부서의 힘이 강하다. 조직구성원들의 결속력은 조직 또는 조직목표에 대한 조직구성원들의 헌신성과 충성심을 말하며, 이를 형성시키는 것은 조직구성원들의 가치관이다. 행정부서는 사회화(socialization), 조직이념의 주입, 선별적 충원 등의 방법을 통해 구성원들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모든 행정부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을 똑같이 갖추고 있지는 않다(Meier, 1993: 72; Rourke, 1972).

넷째, 행정부서의 힘은 리더에 따라서 달라진다. 리더는 조직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여 정치적 동맹세력을 육성·규합하는 구심점이 될 수 있다. 리더가 행정부서의 힘을 증대시키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은 상당수 사례연구에 의해 이미 확인된 바 있다.¹²⁾

다.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에 대한 외부적 영향요인

국내·외 사회는 지난 세기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고 이러한 지속적인 변화는 더 이상 계층제적 지배와 공식조직만으로 설명할 수 없으며 전통적으로

12) 이에 관해서는 Meier(1993:75-77), Rourke(1972), Poveda(1990), Vig & Kraft(1984) 참조.

정부가 차지해 온 지위와 역할이 새로운 세계화와 정보화의 시대에는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 행위나 주체도 종래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통치나 정부에서 벗어나 정부 이외에 시장과 시민사회와의 파트너십 및 네트워크 형성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으로 수행해온 공동체의 공익활동이나 공공재의 생산이 정부 외에 시장 및 시민사회와의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수행하도록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된 것이다. 이는 국가차원의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수준에서 나타나는 정책결정과 집행능력의 변화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정치·경제·사회 분야에 있어서의 변화는 조정(coordination)과 조종(steering), 조절(regulation)을 통한 새로운 질서를 형성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운영의 새로운 방식을 요구하게 되었다(Kooiman 1993; Kooiman & Vliet, 1993).

현재는 정부의 활동이 과거처럼 공식적 권위에 의해 지지되기 보다는 공유된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집단들이 상호조정이라는 형식으로 의견을 모으고 협력하는 형태를 취한다. 다양한 집단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상호 작용에 관계하는 다양한 조직과 집단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집단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세력으로 등장한다. 따라서 이러한 조직들과의 네트워크는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를 동반할 수 있으며, 행정기관이 이러한 집단들과 긍정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할 때 그 집단은 행정기관의 지지 세력으로 등장하는 것이다. 이는 행정기관 수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서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행정부서의 잠재적인 지지 세력은 일반국민·이익집단·대중매체·기관장·타 행정부서들로 나누어 질 수 있다(Rourke, 1984: 49; Meier, 1993: 57-68).

(1) 국민여론

여성정책처럼 정치성을 띠는 정책영역에서는 국민여론이 행정기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여론은 쉽게 변하는 탓에 행정기관이 이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정책을 추진하기는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처럼 성차별적 해소를 통한 평등사회 실현이 12대 국정과제에 속해 있는 상황에서는

여성문제와 관련된 여론은 결코 연성여론이라 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여성문제에 대한 의식은 1980년대 이전까지는 요보호여성을 중심으로 한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전개되다가 1980년대에 와서 일반여성에 대한 업무를 포함하게 되었다. 요보호여성과 일반여성은 복지행정에서 서로 다른 성격을 지닌 대상 집단으로 간주되었으나, 두 집단 모두 가정 중심성과 사회통합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다. 일반여성이 행정의 대상으로 고려되기 시작함으로써 부녀행정의 대상 확대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대상의 확대가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함께 이루어졌다고는 보기 어렵다.

1980년대 이후 중앙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성정책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여성정책이라는 용어의 도입은 지방단위에서는 1990년대의 새로운 현상으로 성별의식을 반영하는 의제를 형성시키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이렇듯 잔여적이고 사회통합적인 관점을 중심으로 한 여성복지 개념이 성별의제로 전환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 실시가 큰 역할을 하였다. 따라서 여성정책은 지방자치의 실시와 여성들의 표 의식이 동시에 이루어지면서 확인되었다, 국민의 여론은 여성정책 담당기구의 정치권력을 단기적으로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으나 신뢰할만한 여성정책 담당기구의 정치권력기반이 되자면 좀더 김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아직은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성별 대립구조의 양상을 띠는 것처럼 인식되어 여성의 문제로만 여겨지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여성문제 관련 집회나 시위도 여성 집단에 한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권위적인 남성중심적인 기본정책 기조 하에서 그나마 여성부와 여성정책이 오늘의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래도 국민여론의 덕분이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2) 이익집단

조직화된 이익집단들은 그 성격과 활동 여하에 따라 특정 행정부서의 힘을 증감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 동안 정책과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영향력은 전반적으로 미약한 편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민주화 과정을 통하여 군부권위주의 국가권력으

로부터 자율성을 갖는 시민운동이 출현하였고, 민주화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인 결사를 제약하던 억압적 사회분위기가 약화되면서 탈(脫)정치화 된 시민운동단체들이 활발하게 부상하여 급성장하게 되었다.

여성문제 또한 표면으로 부상되지 못한 채 내면적으로 소수 집단을 통해 작은 움직임이 보이다가 근대화/산업화로 인한 인구의 도시 집중, 여성교육의 증대, 그리고 여성의 공적영역 참여 확대와 더불어 특별히 유엔 주도 하에 추진된 '세계여성의 해'선포와 함께 국제적으로 여성문제가 이슈화되면서 우리나라에도 여성단체가 창립되는 수적 증대를 보였다.

그러나 조직력과 전문성을 갖춘 본격 단체는 드물고 대중적 기반이 미약하거나 재정력이 취약한 영세단체들이 대다수이다. 다수의 여성들이 조직구성원으로서 시민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지위 향상 및 성차별 극복을 목표로 하는 성(gender)평등운동은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 여성단체 이외의 시민단체가 독자적으로 성 평등운동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는 전무하다. 다만 극소수의 시민단체가 성 평등운동을 주도하는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 평등운동을 주도해 온 여성단체들은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꾸준히 벌이고 있으며,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활동내용을 다각화하고 운동방법을 다변화하려는 노력을 상대적으로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여성부의 조직은 통치권자의 의지와 지속적인 여성단체들의 활동이 결합되어 탄생한 조직으로 여성정책 담당기구와 여성단체와의 관계는 상호 협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라 하겠다.

현 여성부 장관은 "아주 다행스러운 점은 우리 참여정부의 여성정책이 '여성이 행복한 나라'인데, 참여정부 여성정책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제가 최근까지 몸담아 왔던 여성단체에서 주장했던 바를 그대로 수용한 정책이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성운동을 해 오면서 요구했던 내용과 제가 장관으로서 집행하는 것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없습니다(청와대 매거진 제16호)"라고 하여 정부와 여성단체와의 관계가 아주 돈독함을 보여주고 있다.

(3) 대중매체

대중매체는 특정 행정기관의 힘에 보탬이 될 수도 있고 그에 제약을 가할 수도 있다. 행정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중요성이나 행정기관이 처한 정책과 정상의 애로점을 부각시키는 보도가 전자의 경우라면, 행정기관에 불리한 정보(권력남용, 직무유기, 실책 등)를 기사화하는 것은 후자의 경우이다(Linsky, 1986: 19, 22; Rourke, 1984: 197-198). 대중매체가 초점을 맞추는 사건들은 일반적으로 ①시각적 흥미(visual interest)가 있고, ②줄거리가 강력(a strong story line)하며, ③사람들로 하여금 그 결과에 일체감(identification with its outcome)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들이다.

여성문제에 대한 대중매체의 관심은 1998년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지식 기반 사회의 여성 경쟁력 강화’¹³⁾, ‘여성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기반구축’¹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및 지원’¹⁵⁾과 같은 정책과제 관련, 일간신문과 방송에서 여러 차례 보도되기 시작하였고, 2003년 참여정부에서는 보육문제를 여성과 직접 연계하여 보도함으로써 여성문제의 심각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여론을 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여성과 관련한 대중매체의 보도가 극히 일부였으나 최근 들어서는 여성문제를 전담하는 여성부가 정책결정상 처한 현실적 한계(정치권력의 빈곤, 예산 부족 등) 및 여성문제의 사회화에 초점을 맞추는 보도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

(4) 지방자치단체장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은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보다 단체장의 권한이 강한 구도를 가지고 있으며 단체장에게 지방

13) 중앙일보(1997/7/15), 경향신문(1998/10/2), 조선일보(2000/9/28), 한국경제(1999/2/2) 참조.

14) 한국경제(1998/11/2), 경향신문(1998/4/30), 중앙일보(1999/9/16), 경향신문(1999/9/16), 조선일보(2000/8/28), 한겨레(2000/4/3) 참조.

15) 중앙일보(1999/9/16), 경향신문(1999/10/11), 중앙일보(1999/5/8), 조선일보 (1998/1/15), 조선일보(1999/6/28) 등 참조.

의회 의결에 대한 거부권과 지방의회 사무국 직원의 임명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자치단체장은 기구와 정원에 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기구를 만들고 정원을 확보하는 데는 도지사와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수반되나 단체장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기구와 정원을 배정하는 것은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상황이 이런 만큼 지방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게 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그 지역에 존재하는 여성문제 자체가 의제화되거나 여성정책화 된다고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문제 인식 여하가 여성의제 도입과 여성정책화에 절대적인 영향요인이 된다고 할 수 있다(한국여성개발원, 2000: 19). 김애령(1999)도 지방에서 성인지적 여성정책을 시도하는 행위 주체를 단체장으로 보고 있다. 곧 단체장은 자신의 권한을 강화하고 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해 개혁적인 의제를 주장하게 되는데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성인지적 의제가 제시된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에서는 1999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평가 분류는 공무원인사 및 복지 등, 지방여성정책 추진, 여성공무원의 노력도 3가지로 구분된다. 각 분류에 따른 세부 항목은 1999년에는 공무원 승진과 주요보직에 대한 인사제도가 120점, 기관장의 관심도가 70점, 정보화 예절이 50 등 인사제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2001년에는 인사제도와 기관장의 관심도를 130점으로 상향조정하였다.

행정자치부가 1999년과 2001년에 실시한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종합평가 보고서에 의하면, 시·도의 여성정책 종합 평가 결과 순위가 각 시도의 기관장의 관심도 평가항목 순위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최고관리자인 기관장의 관심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여타 행정부서

비슷한 계층적 위치에 있는 다른 행정부서들로부터의 수평적 지원도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힘이 될 수 있다. 여성정책은 여성이 소속되어 있는 집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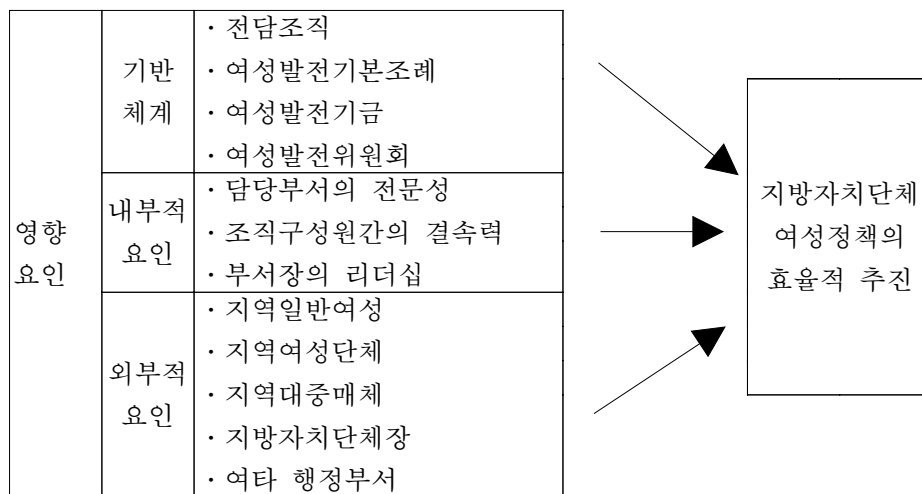
단체, 시설이 다양하고 이들을 관장하고 있는 중앙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부서가 다양하기 때문에 행정부서간의 고도의 협력성을 특징으로 한다. 따라서 여성관련 업무는 특정부서의 독단적인 수행으로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부서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여성관련 업무는 다양한 분야로 분류되어 있어 업무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주체들이 정책을 수행하고 있어 업무의 중복 위험성이 있으며 여성정책 또는 여성관련 업무에 대한 성격의 구명 역시 모호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관련 있는 행정부서간의 협조체계가 필요하며 이러한 협조체계가 구성되어야만 여성정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이 행정기관 내에서 힘을 갖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들 환경들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해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로 거의 모든 조직들은 환경에 적응하는 정도만큼 그들의 역량을 발휘하여 정책에 반영된다.

하나의 조직이 생존하고 힘을 갖기 위해서 관건이 되는 것은 자원을 획득하고 관리하는 능력이다. 만일에 조직이 자신의 운영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간단해 질 수 있지만 어떤 조직이라도 완전히 자족적일 수 없다. 조직은 다른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 둘러싸여 있다. 조직은 자신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자원을 그와 같은 조직들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논리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지방정부 조직도 마찬가지이다.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조직 또한 자원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이들 조직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는 지역주민과 가장 밀접한 상호작용을 행한다. 여성정책의 경우 지역여성들이 여성정책 담당부서에서 행한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직접적으로 피드백 받을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면 이는 상위정부에서의 여성정책이 상징성과 추상적인 의미에서의 여성정책으로 머물 수 있는 것을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중요

하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 내외부의 영향요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II-2> 여성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Ⅲ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기반체계 현황

1. 여성정책 담당기구 및 인력 현황	39
2.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현황	46
3. 여성발전기금 조성	51
4. 여성위원회 설치 현황	56
5. 여성정책 사업내용	61

A decorative horizontal bar with a dense, repeating geometric pattern at the bottom of the page.

1. 여성정책 담당기구 및 인력 현황

가. 여성정책 담당기구 현황

지방자치제도 실시 및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행정조직을 신설하고 개편할 수 있는 권한이 지방정부에게 주어졌다. 이에 따라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이후 각 시·도에서는 기존의 여성복지 부서를 여성정책 조직과 통합하거나 여성정책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등 여성조직을 정비하였다. 지방자치제도와 세 번의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를 거치면서 여성정책 관련 조직의 변화 특징은 부서의 명칭과 조직 유형의 변화로 요약된다. 부녀복지과에서 여성복지과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한 지역의 경우에도 여성정책계(담당)를 신설하여 여성정책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는 여성정책을 개발하고 집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게 되었으며 여성정책은 여성복지와 더불어 여성부서의 중요한 업무가 되었다(1999, 김소연; 33). 이에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명칭과 유형을 살펴본다.

(1) 시 여성정책 담당 기구

시 단위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 유형은 문화·사회·환경·복지·산업(경제)·자치행정·시민봉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여성복지국(복지여성국 등)과 같이 여성을 명시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복지환경국에서 여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시가 8곳이었으며, 사회환경국 6곳, 총무국 6곳, 자치행정국 6곳이었다. ‘과’수준에서 여성정책과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곳은 강원도 원주시와 춘천시 2곳뿐이다. 대부분 여성정책 업무가 사회복지과나 복지여성과 내 여성복지담당에서 수행되고 있어 기존 복지업무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구와 군에 비해 여성정책담당(팀)이 구성되어 있는 곳이 많았다(<부록-1>참조).

(2) 군 여성정책 담당기구

우리나라 군 단위여성정책 담당기구를 과와 담당(팀)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군 단위는 국이 없이 과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국 소속 기구로 여성정책 담당기구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부산광역시 기장군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2곳이 있다.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은 사회복지여성과를 두고 있었다.

80개의 기초자치단체 군을 조사한 결과, 사회복지과 소속 여성복지담당(팀)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이 48곳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정책담당 명칭을 사용하는 지역이 9곳이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군 단위 내에서 여성정책이 고유한 성격을 갖지 못한 채 일반 복지 속에 묻혀 다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기존의 여성복지라 함은 대부분이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한 정책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사회참여나 능력개발보다는 모자가정, 미혼모, 매춘여성들을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노력들로 이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사회적 복지 제공 차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향이 많다. 현재 여성정책도 그러한 내용들의 연계선상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 많아 기존의 요보호여성과 부녀복지 중심의 업무와 차별화할 수 있는 업무들이 아쉽다. 특히 기초자치단체는 생활현장과 가장 밀접한 행정기관으로 담당 부서가 갖는 명칭의 상징성도 크다. 지역여성업무의 새롭고 발전적인 이미지를 기대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도 또한 중요하다(<부록-2>참조).

(3) 구 여성정책 담당기구

구 단위에서는 복지·환경·지역개발(경제)·문화관광·총무 기능을 담당하는 국 산하 부서에서 대부분 여성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산업국 소속으로 여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구가 22개 지역이었으며, 생활복지국 소속으로는 18개 지역이었다. 사회경제국 소속 2곳, 사회문화산업국 소속 1곳, 사회문화국 소속 1곳, 문화복지국 소속 1곳, 복지경제국 소속 1곳으로 되어 있다. 대부분이 사회산업국과 생활복지국 소속이었다. 과 수준으로는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명칭은 사회복지과였다.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구가 16개 지역이었고,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에서 담당하는 구는 13개 지역이었다. 여성이라는 용어를 표기하여 명칭을 사용하는 곳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여성과)와 서울시 양천구(여성정책과) 2곳이었고 여성정책 전담과를 둔 곳은 양천구 단 한 곳이다.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복지행정과나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와 같은 명칭을 사용하였다(<부록-3>참조).

종합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의 여성정책 담당기구를 살펴 본 결과 현재 국 수준에서 여성정책 업무 전담기구를 두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한 곳도 없었다.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여성정책 전담국을 설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도 과 수준에서 여성정책 전담기구(여성정책과, 여성과)를 갖추고 있는 시(원주시, 춘천시, 전주시, 남양주시, 고양시, 안양시, 순천시), 군(없음), 구(양천구, 부평구)가 존재하고 있음을 비추어 볼 때 시, 구 기초자치단체에서 과 단위의 여성정책 업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현재 국 단위 명칭에서는 ‘여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는 거의 없고 과 단위의 명칭에서 ‘여성’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일부 존재하고 있다. 이에 과 수준 정도에서라도 ‘여성○○과’ 또는 ‘○○여성과’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여성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라는 것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많았는데, 이를 ‘사회복지여성과’로 할 수 있을 것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역여성들은 민원인으로서의 역할도 커지고 지역행정에 참여하는 기회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들의 업무가 어느 부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부서명을 통해서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서비스라 할 수 있다. 또한 명칭이 갖는 상징성의 의미도 크다. 사회복지과에서 여성업무를 취급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명칭 하에서는 성 중립적인 사회복지 업무가 우선될 수 있으나 사회복지여성과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범위에서는 사회복지와 여성 업무가 같은 비중의 업무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실질적으로 여성업무를 사회복지 업무와 균형 있게 집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초자치단체에서의 여성정책 업무가 본 궤도에 올라서지 못

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명칭이 갖는 상징성도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 있어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설치가 아직 충실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여성정책을 전담할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과 수준에서 여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명칭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명칭으로 통일을 시키든지, 아니면 ‘여성’이라는 단어를 붙여 명칭을 사용하게 할 때 명칭의 일치를 통해서 업무상의 일치도 도모할 수 있고 기초자치단체간 업무협조상의 이해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기초자치단체 행정기구에 접근한 사람들의 해당기구에 대한 이해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나. 인력 현황

지역 여성들의 욕구와 문제점, 그리고 그에 대한 대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이 역할을 수행할 인력이 필요하다. 지방정부에서 여성정책에 대한 이러한 역할은 여성정책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수행하고 있다. 예전에는 여성정책이 사회복지 개념 속에 두루 망설하게 포함되어 있었다. 정부로부터 수동적으로 수혜를 받는 요보호여성 집단 속에 여성을 포함시켜 복지 차원에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였다. 그러나 현재는 요보호 여성과 일반여성을 분리하여 여성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고자 한다. 이러한 여성정책은 여성정책의 목표를 이해하고 적극 추진하려는 적극성을 지닌 담당자를 필요로 하며 성인지적 관점을 지닌 전문 인력이어야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우리나라 여성정책은 초기 단계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인력의 양적인 차원도 중요하다. 다음은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을 담당 인력에 대해 살펴보았다.

(1) 시 여성정책 담당 인력

총 74개의 시를 100으로 보았을 때, 43.2%가 여성정책업무담당자를 3명으로 배치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다. 6명을 배치한 곳은 2.7%로 가장 낮았으며, 5

명을 배치한 시 또한 5.4%로 10% 이하의 비율로 나타났다. 담당자가 1명인 시는 21.6%였으며, 2명을 배치한 시는 14.9%, 4명을 배치한 시는 12.2%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시별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광역자치단체별로 살펴보면, 먼저 경기도의 시는 44.0%가 1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있었다. 3명을 배치한 시가 다음으로 20.0%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4명과 2명을 배치한 시의 비율은 각각 16.0%, 12.0%로 나타났다. 또한 5명, 6명을 배치한 시는 4.0%로 같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강원도에서는 3명을 배치한 시가 42.9%의 가장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으며, 4명 및 5명을 배치한 시는 14.3%로 나타났다. 1명을 배치한 시는 28.6%의 같은 비율을 보여주었으며, 2명과 6명을 배치한 시의 비율은 볼 수 없었다.

10개의 군이 있는 경상북도에서는 3명의 인력 배치가 60.0%로 가장 많았으며, 2명과 5명을 배치한 군이 20.0%로 같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1명, 4명, 6명을 배치한 군은 보이지 않았다.

경상남도에도 10개의 군이 있는데, 그 중 3명의 인력을 배치한 군이 70.0%로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2명을 배치한 군은 20.0%, 1명을 배치한 군은 10.0%의 순을 보여주고 있다. 4~6명의 인력을 배치한 군은 찾아볼 수 없었다.

전라북도에는 6개의 군이 있는데, 3명의 인력을 배치한 군이 66.7%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으며, 2명과 4명을 배치한 군이 16.7%로 같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1명, 5명, 6명의 인력을 배치한 군은 없었다.

전라남도 또한 5개의 군 중에서 3명의 인력을 배치한 군이 40.0%로 반을 넘지는 못했으나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2명, 4명, 6명의 인력을 배치한 군은 각각 20.0%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1명과 5명을 배치한 군은 없었다. 충청북도에는 3개의 군이 있는데, 각각 1명, 3명, 4명을 배치하였다. 비율로는 각각 33.3%로 나타났다.

충청남도에는 6개의 군 중 절반인 50%가 3명의 인력을 배치하였다. 이어서 2명을 배치한 군이 33.3%로 나타났으며, 1명을 배치한 군은 16.7%로 분석되었다. 2개의 군이 있는 제주시의 경우, 각각의 군은 3명, 4명의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부록-4>참조).

(2) 군 여성정책 담당 인력

군에서도 여성정책업무담당자의 배치 비율은 시와 비슷한 수위를 보여주었다. 즉, 3명을 배치한 군이 47.7%로 가장 많았다. 그리고 5명~6명을 배치한 군은 각각 2.3%, 1.1%로 나타나 합을 하여도 5%를 넘지 못하는 실정이다. 1명과 2명을 배치한 군은 각각 20.5%로 나타났으며, 4명을 배치한 군은 8.0%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광역자치단체내의 기초자치단체별 비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6개의 군이 있는 경기도는 1명 및 2명의 인력을 배치한 군이 각각 33.3%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고, 나머지 비율 중 3명, 5명의 인력을 배치한 군으로 16.7%의 같은 비율로 나뉘었다.

인천시에는 2개의 군이 있으며, 각각 1명 3명의 인력을 배치하였다.

1개의 군이 있는 대구시와 부산시는 각각 3명, 1명의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상남도의 군의 수는 10개이다. 그 중 3명의 인력을 배치한 군이 70.0%로 가장 높았으며, 1명의 인력배치는 20.0%, 2명의 인력배치는 10.0%로 나타났다. 8개의 군이 있는 전라북도에서는 3명의 인력을 배치한 군이 3개(37.5%)로 가장 높았으며, 2명과 4명의 인력을 배치한 군으로는 각각 25.0%, 1명의 인력배치 한 군으로는 12.5%로 각각 조사되었다.

강원도 내에는 11개의 군이 있으며, 그 중 3명의 인력을 배치한 군이 45.5%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라북도와 마찬가지로 2명을 배치한 군이 27.3%로 3명을 배치한 군 다음으로 높았으며, 1명을 배치한 군은 18.2%로 나타났다. 군이 가장 많은 전라남도에서는 3명의 인력배치가 64.7%를 차지하였다. 4명의 인력을 배치한 군도 17.6%로 나타났으며, 2명의 인력배치 비율은 11.8%로 조사되었다. 1명의 이력을 배치한 비율은 5.9%로 가장 낮았다. 5명, 6명을 배치한 군은 보이지 않았다.

경상북도에서도 역시 3명의 인력을 배치한 군이 61.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중에서 1명과 2명을 배치한 군이 각각 15.4%의 같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4명을 배치한 군은 7.7%였으며, 5~6명을 배치한 군은 없었다. 충청북도는 1명의 인력을 배치한 군이 6개(75.0%)로 아주 높았다. 2명을

배치한 군이 나머지 12.5%를 차지하면서, 대부분이 1명의 인력만을 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를 살펴보면, 3명의 인력을 배치한 군의 비율은 44.4%, 즉 9개의 군 중 4개의 군이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2명의 인력을 배치한 군이 33.3%로 보여 졌으며, 4명, 5명을 배치한 군은 11.1%의 같은 비율로 조사되었다(<부록-5>참조).

(3) 구 여성정책 담당인력

여성정책에 관련된 업무를 하는 인력의 수를 분석한 결과는 <부록-4>와 같다. 60개 구의 총 인력 수는 220명으로, 4명의 인력을 배치한 구가 40.0%(24개)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3명을 배치한 구가 15.0%를, 6명을 배치한 구는 13.3%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2명, 4명을 배치한 구는 가장 낮은 10.0%로 분석되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서울시에서는 4명을 배치한 구가 44.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6명(20.0%), 5명(12.0%)의 순을 보여주었다. 1명, 2명, 3명을 배치한 곳은 각각 8.0%로 같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부산, 인천, 대구시 또한 4명의 인력을 배치한 구가 각각 33.3%, 50.0%, 42.9%로 다른 인력배치 수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부산시의 구에서는 1명의 배치가 26.7%로 4명의 배치인력 수 다음으로 많았으며, 3명을 배치한 구는 20.0%, 2명을 배치한 구는 13.3%, 마지막으로 5명을 배치한 구는 12.5%였으며, 6명을 배치한 구는 없었다.

인천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4명의 인력 수 이외에 1명, 3명, 5명, 6명의 인력수를 배치한 구가 각각 12.5%를 보여주었으며, 2명을 배치한 구는 보이지 않았다. 대구시에서는 4명의 인력수를 배치한 구가 42.9%를 차지하였다. 2명, 3명, 5명, 6명을 배치한 구는 각각 14.3%를 보여주었으며, 1명을 배치한 구가 없었다. 대전시의 2개 구에서는 3명의 인력을 배치하여 40.0%의 비율을 보였으며, 나머지 3개의 구들은 각각 2명, 4명, 6명을 배치하였다(<부록-6> 참조).

전반적으로 시·군·구 모두 여성관련 부서의 인력이 평균 3~4명 혹은 그

이상으로 분석되었으나, 실질적 여성정책의 업무를 하는 인력은 팀장을 제외한다면 1~2명이라고 할 수 있다. 인력 수가 많은 팀(담당)이라면 그 중 팀장과 여성정책이 아닌 보육, 노인 혹은 청소년담당자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222개의 기초자치단체로 전화조사를 한 결과이며, 일부는 인력부족에 대한 호소를 하기도 하였다.

시·군·구 별로 여성정책 담당인력 평균을 살펴본다면, 구에서는 4명의 인력을 배치한 경우가 38.0%를 보여주었으며, 구 전체의 비율 중 가장 컸다. 시와 군에서는 3명의 인력배치가 많았으며, 각각 48.1%, 41.9%의 비율을 나타냈다. 시·군·구 종합평균으로 보았을 때 3명의 인력배치가 36.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4명의 인력배치가 19.9%로 나타났다. 1명의 인력배치는 17.2%, 2명의 배치는 15.7%로 각각 나타났으며, 5명과 6명의 인력배치를 한 시·군·구는 각각 5.2%와 5.6%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3명의 인력배치에 비해 6명의 인력을 보유한 기초자치단체는 약 1/7 일 뿐이었다.

2.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현황

가. 시 여성발전기본조례 현황

시의 경우, 13.6%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의 일부 3개의 시를 제외한 22개의 시들이 제정을 하였으며, 제정이 되어있지 않은 일부 시들도 올해 안에 제정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강원도는 7개의 시 중 71.4%를 차지하고 있는 5개의 시에서 제정이 되어있으며, 2개의 시에서 아직 제정이 되어있지 않았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90%는 제정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또한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100% 제정이 되어있다. 전라남도에서는 두 개의 시에서 조례제정을 하였고, 나머지 3개의 시에서는 제정이 되어있지 않았다. 종합적으로 86.5%에 달하는 64개의 시에서 조례제정을 한 상태이며, 나머지 10개의 시에서는 아직 제정이 되어있지 않았다.

<표 Ⅲ-1> 시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여부 현황

	경기도																				
기초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광주시	화성시	파주시	이천시	구리시	김포시	안성시	
조례	○	○	○	○	○	○	○	○	○	×	○	○	○	×	○	○	○	○	×	○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기초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동두천시	과천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조례	○	○	○	○	○	○	○	○	×	○	○	×	○	○	○	○	○	○	○	○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제주시			
기초	문경시	경산시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제주시	서귀포시	
조례	×	○	○	○	○	○	○	○	○	○	○	×	○	○	○	○	○	○	○	○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기초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조례	○	×	×	×	○	○	○	○	○	○	○	○								○	○

나. 군 여성발전기본조례 현황

먼저 부산광역시의 유일한 군인 기장군에는 조례제정이 되어있는 상태이며, 대구광역시의 유일한 군인 달성군에는 제정이 되어있지 않다.

전라북도의 8개 군과 제주도의 2개 군에서는 모두 조례제정을 하였다. 인천

광역시·시의 경우 2개의 군이 있는데 모두 제정이 되어있지 않았으며, 전라남도의 경우에도 모두 제정이 되어있지 않았다. 경기도의 경우 제정이 된 군과 되지 않은 군이 3개씩 반반이었다. 강원도는 81.8%인 9개의 군에서 조례제정을 하였으며, 나머지 2개의 군에는 아직 되어있지 않았다. 경상남도의 60%를 차지하는 6개의 군에서는 제정을 하였으며, 40%는 제정이 되어있지 않았다.

〈표 III-2〉 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여부 현황

	부 산 시	대 구 시	인 천 시		경기도						강원도											
	기 창 군	달 성 군	강 화 군	웅 진 군	가 평 군	연 천 군	포 천 군	양 주 군	여 주 군	양 평 군	홍 천 군	횡 성 군	영 월 군	평 창 군	정 선 군	철 원 군	화 천 군	양 구 군	인 제 군	고 성 군	양 양 군	
조례	○	×	×	×	×	×	○	×	○	○	○	○	×	○	×	○	○	○	○	○	○	
	경상북도												전라북도									
	군 위 군	의 성 군	청 송 군	영 양 군	영 덕 군	청 도 군	고 령 군	성 주 군	칠 곡 군	예 천 군	봉 화 군	울 진 군	울 릉 군	완 주 군	진 안 군	무 주 군	장 수 군	임 실 군	순 창 군	고 창 군	부 안 군	
조례	×	×	×	×	×	×	×	×	×	×	○	×	×	○	○	○	○	○	○	○	○	
	경상남도										전라남도											
	의 령 군	함 안 군	창 녕 군	고 성 군	남 해 군	하 동 군	산 청 군	함 양 군	거 창 군	합 천 군	담 양 군	곡 성 군	구 례 군	고 흥 군	보 성 군	화 순 군	장 흥 군	강 진 군	해 남 군	영 암 군	무 안 군	
조례	×	○	○	○	○	○	×	×	○	×	×	×	×	×	×	×	×	×	×	×	×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함 평 군	영 광 군	장 성 군	완 도 군	진 도 군	신 안 군	청 원 군	보 은 군	옥 천 군	영 동 군	진 천 군	괴 산 군	음 성 군	단 양 군	금 산 군	연 기 군	부 여 군	서 천 군	청 양 군	홍 성 군	예산 군	
조례	×	○	×	×	×	×	×	○	○	○	×	○	○	○	○	×	○	×	×	○	○	
	충청 남도		제주도																			
	태 안 군	당 진 군	북 제 주 군	남 제 주 군																		
조례	○	○	○	○																		

이에 반해 경상북도는 7.7% 즉, 13개의 군 중 1개의 군만이 제정을 하였으며, 92.3%가 제정을 하지 않은 상태이다. 충청도의 경우 북도에서는 75%가 제정을 하였으며, 남도의 경우 33.3%인 3개의 군만이 제정을 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제정을 한 군은 40개 구(45.5%)였으며, 그렇지 않은 구는 48개 군으로 54.5%를 차지하였다. 경상북도와 경상남도의 90%는 제정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또한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북도, 충청남도는 100% 제정이 되어있다. 전라남도에서는 두 개의 시에서 조례제정을 하였고, 나머지 3개의 시에서는 제정이 되어있지 않았다.

다. 구 여성발전기본조례 현황

서울시 25개 구 중에 32%는 제정이 되어있는 상태이나, 68%에 달하는 17개 구에서는 아직 제정이 되어있지 않았다. 부산시의 경우는 100% 제정이 되어있으며, 대전광역시의 대덕구를 제외한 모든 구와,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의 모든 구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 구의 40%, 24개 구에서 조례제정이 되어있는 상태이며 나머지 36개 구에서는 제정이 되어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3> 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여부 현황

	서울시																			
기초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중구	종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양천구	마포구
조례	×	○	×	○	×	○	×	×	×	○	×	×	×	○	×	×	○	×	○	×
	서울시						부산시													
기초	광진구	성동구	동작구	관악구	종로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조례	×	×	×	×	○	○	○	○	○	○	○	○	○	○	○	○	○	○	○	○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기초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조례	×	×	×	×	×	×	×	×	×	×	×	○	×	×	×	×	×	×	×	×

3. 여성발전기금 조성

가. 시 여성발전기금 조성 현황

경기도는 4개의 시를 제외한 21개의 시(84.0%)에서 기금조성이 되어 있었다. 100% 조성이 된 곳을 먼저 살펴본다면, 전라북도, 제주도, 충청남도 및 북도가 있다. 강원도의 71.4%인 5개의 시에서는 기금조성을 하였으며, 나머지 2개의 시에서는 기금조성이 되어있지 않았다. 또한 경상북도의 80%에 해당하는 8개의 시와, 경상남도의 90%에 해당하는 9개의 시에서는 기금조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전라남도는 100%되어있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는 81.1%에 해

당하는 60개의 시에서 기금조성을 하고 있으며, 나머지 14개의 구에서는 기금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표 III-4> 시 여성발전기금 조성여부 현황

	경기도																				
기초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광주시	화성시	파주시	이천시	구리시	김포시	안성시	
조례	○	○	○	○	○	○	○	○	○	×	○	○	○	×	○	○	○	○	×	○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기초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동두천시	과천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조례	○	×	○	○	○	○	○	○	×	○	○	×	○	○	○	×	○	○	○	○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제주시		
기초	문경시	경산시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제주시	서귀포시	
조례	×	○	○	○	○	○	○	○	○	○	○	×	○	○	○	○	○	○	○	○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기초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조례	×	×	×	×	×	○	○	○	○	○	○	○	○	○							

나. 군 여성발전기금 조성 현황

군의 경우, 부산광역시의 기장군에서는 기금조성이 이루어져있고, 대구광역시의 달성군에는 기금조성이 이루어져있지 않은 상태이다. 인천광역시의 2개 군 또한 기금조성이 이루어져있지 않았다. 다음으로 경기도의 경우 33.3%인 2개의 군에서만 기금이 조성되고 있으며, 나머지 66.7%를 차지하는 4개의 군에서는 조성이 되고 있지 않았다.

〈표 Ⅲ-5〉 군 여성발전기금 조성여부 현황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기초	기장군	달성군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여주군	양평군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조례	○	×	×	×	×	×	×	×	○	○	○	○	×	○	×	○	○	○	○	○	○	
	경상북도												전라북도									
기초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조례	×	×	×	×	×	×	×	×	×	×	×	○	×	○	○	○	○	○	○	○	○	
	경상남도											전라남도										
기초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거창군	합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조례	×	○	○	○	○	○	○	×	○	×	○	○	○	○	○	○	○	○	○	○	○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기초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조례	○	○	○	○	○	○	×	○	○	×	×	○	○	○	×	×	×	×	×	×	○	
	충청남도		제주도																			
기초	태안군	당진군	북제주군	남제주군																		
조례	○	○	○	○																		

강원도에서는 81.8%를 차지하는 9개의 군에서 조성중이며, 나머지 2개의 군에서는 조성되고 있지 않다. 경상북도의 13개 군 중에서 단 1개의 군만이 기금조성 중에 있으며, 92.3%에 해당하는 나머지 군에서는 조성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상남도에서는 10개의 군 중에서 7개의 군이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전라북도와 남도의 경우 100% 기금조성을 하고 있다. 충청북도의 경우 62.5%의 비율에 해당하는 5개의 군에서 조성 중에 있으며, 충청남도의 경우에는 3개의 군 즉, 33.3%만이 기금 조성을 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자면, 62.5%를 차지하는 55개의 군이 기금 조성 중에 있으며, 37.5%에 해당하는 33개의 군에서는 기금조성이 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구 여성발전기금 조성 현황

여성발전기본조례에 따른 여성발전기금의 조성이 되어있는 지에 대한 조사 결과, 서울시의 경우 기금조성이 되어있는 구는 5개로 20%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80%에 달하는 20개의 구에서 아직 기금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부산의 15개 구에서는 조례제정과 마찬가지로 100% 기금조성이 이루어졌거나 조성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대전광역시의 대덕구를 제외한 4개의 구와 대구광역시의 7개 구, 인천광역시의 8개 구들은 모두 기금조성이 되어있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35.0%에 해당하는 21개의 구에서 기금조성이 이루어졌거나 진행 중인 상태이며, 나머지 65.0%를 차지하는 39개의 구에서는 기금조성이 되어있지 않았다.

<표 Ⅲ-6> 구 여성발전기금 조성여부 현황

	서울시																			
기초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랑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양천구	마포구
조례	×	○	×	○	×	○	×	×	×	○	×	×	×	×	×	×	×	×	○	×
	서울시						부산시													
기초	광진구	성동구	동작구	관악구	종로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조례	×	×	×	×	×	○	○	○	○	○	○	○	○	○	○	○	○	○	○	○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기초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조례	×	×	×	×	×	×	×	×	×	×	×	○	×	×	×	×	×	×	×	×

4. 여성위원회 설치 현황

가. 시 여성위원회 설치 현황

경기도는 76.0%를 차지하는 19개의 시에서 여성발전위원회 설치를 하였으며, 나머지 6개의 시에는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다. 강원도의 경우 42.9%인 3개의 시에서는 위원회 설치를 하였으며, 57.1%에 해당하는 4개의 시에는 위원회설치가 되어있지 않았다.

경상북도는 설치가 되어있는 곳과 안 되어있는 곳이 각각 50%로 조사되었다. 경상남도의 7개시는 위원회 설치를 하였으나, 나머지는 그렇지 않았다. 전

라북도를 살펴보면 66.7%에 해당하는 4개의 시 만이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는 그렇지 않은 상태이다. 전라남도는 5개의 시 모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충청북도와 남도는 같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위원회를 설치한 비율은 66.7%이며 그렇지 않은 비율은 33.3%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경우에는 2개의 시 모두 설치가 되어있었다.

전반적으로는 62.2%에 해당하는 46개의 시에 위원회 설치가 되어있고, 37.8%로 조사된 28개의 구에서는 위원회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다.

<표 Ⅲ-7> 시 여성발전위원회 설치 현황

	경기도																			
기초	수원시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평택시	광명시	시흥시	군포시	광주시	화성시	파주시	이천시	구리시	김포시	안성시
조례	○	○	○	○	○	○	○	○	○	×	○	○	○	×	○	○	○	○	×	○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기초	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동두천시	과천시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동해시	태백시	속초시	삼척시	포항시	경주시	김천시	안동시	구미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조례	○	×	○	×	×	○	○	×	×	×	○	×	○	○	×	×	○	○	×	×
	경상북도		경상남도										전라북도						제주시	
기초	문경시	경산시	창원시	마산시	진주시	진해시	통영시	사천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	제주시	서귀포시
조례	×	○	○	○	○	○	○	○	○	×	×	×	○	×	○	○	×	○	○	○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기초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조례	×	×	×	×	×	○	×	○	○	○	×	○	○	×						

나. 군 여성위원회 설치 현황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의 군은 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16.7%인 1개의 군에서만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83.3%를 차지하는 5개의 군에서는 위원회 설치를 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63.6%를 차지하는 7개의 군이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나머지 4개의 군은 설치가 되어있지 않다. 경상북도의 13개 군 중에서 1개의 군이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92.3%에 해당하는 나머지 군에서는 설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상남도는 10개의 군 중에서 6개의 군이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전라북도를 살펴보면 75.0%인 6개의 군이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전라남도는 위원회 설치가 100% 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다. 충청북도의 경우 37.5%의 비율에 해당하는 3개의 군에서 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62.5%는 설치를 하지 않았다. 충청남도는 2개의 군 만이 위원회를 설치하고, 77.8%는 설치하지 않았다.

위원회 설치현황을 전체적으로 알아보면, 31.8%를 차지하는 28개의 군이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68.2%에 해당하는 60개의 군은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Ⅲ-8〉 군 여성발전위원회 설치여부 현황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기초	기장군	달성군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	포천군	양주군	여주군	양평군	홍천군	횡성군	영월군	평창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조례	×	×	×	×	×	×	×	×	○	×	×	○	×	○	×	○	○	○	○	○	×		
	경상북도													전라북도									
기초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청도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울진군	울릉군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고창군	부안군		
조례	×	×	×	×	×	×	×	×	×	×	○	×	×	×	○	○	○	○	○	○	×		
	경상남도										전라남도												
기초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고성군	남해군	하동군	산청군	함양군	기창군	합천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장흥군	강진군	해남군	영암군	무안군		
조례	×	○	○	○	○	○	×	×	○	×	×	×	×	×	×	×	×	×	×	×	×		
	전라남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기초	함평군	영광군	장성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청원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금산군	연기군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조례	×	×	×	×	×	×	×	○	○	×	×	○	×	×	×	×	×	×	×	×	×		
	충청남도			제주도																			
기초	태안군	당진군	북제주군	남제주군																			
조례	○	○	○	○																			

다. 구 여성위원회 설치 현황

앞에서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 및 여성발전기금조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았다.

먼저 서울시의 경우 기금조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위원회가 설치되어있는 구는 5개로 20%를 차지하였다. 나머지 80%에 달하는 20개의 구에서 아직 기금 조성 뿐만이 아니라 위원회 설치 역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부산의 15개 구에서는 조례제정과 마찬가지로 100%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대전광역시와 대구광역시의 대덕구를 제외한 4개의 구와 인천광역시의 8개 구들 또한 모두 위원회 설치가 되어있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35.0%에 해당하는 21개의 구에서 위원회 설치가 되었으며, 나머지 65.0%를 차지하는 39개의 구에서는 위원회설치가 되어있지 않았다.

<표 III-9> 구 여성발전위원회 설치여부 현황

	서울시																			
기초	강남구	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구로구	도봉구	서대문구	성북구	서초구	송파구	영등포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금천구	노원구	동대문구	양천구	마포구	
조례	×	○	×	○	×	○	×	×	×	○	×	×	×	×	×	×	×	○	×	
	서울시						부산시													
기초	광진구	성동구	동작구	관악구	종로구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사상구
조례	×	×	×	×	×	×	×	×	×	×	○	○	×	×	×	○	×	×	○	○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기초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조례	×	×	×	×	×	×	×	×	×	×	×	○	×	×	×	×	×	×	×	×

5. 여성정책 사업내용

여성정책은 기본적으로 여성발전기본법과 기타 여성관련 법에 근거를 두고 실시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정의하는 여성정책이라 함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대통령이 정하는 정책”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업무라 함은 “여성관련 제반 법률 및 제반 계획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내용과 이행의무의 구축정도로 나누어 살펴보면 <표 Ⅲ-10>과 같다.

이행업무의 구축정도는 ‘하야야 한다’, ‘한다, 둔다’, ‘노력하야야 한다’, ‘할 수 있다’로 분류되어 있다. 이 가운데 ‘하야야 한다’와 ‘한다, 둔다’는 강제적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여성업무이며 ‘노력하야야 한다’와 ‘할 수 있다’는 선택적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업무수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위의 <표 Ⅲ-10>에서는 여성관련 사무를 그 법적 성격에 따라 강제적 업무와 선택적 업무로 구분하였으나, ‘가정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및 ‘푸드뱅크’ 업무의 경우 보건복지부 업무지시로 사업이 수행되기 때문에 그 성격을 규정하기 어려운 사무도 있다.

법적 기준에 따른 업무분류를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업무와 임의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구분이 가능하다. 그러나 ‘여성정책시행계획수립·수행’과 ‘보육정보센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적 기준을 통해서 광역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여성업무와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여성업무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라서 법적 기준 외에 사무배분의 일반원칙들과 업무 수행율을 통해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여성 업무를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의 원칙에 따라 광역사무와 기초사무를 구분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대부분의 사무가 광역과 기초에서 공통적으로 수행되는 경향이 있으며, 여성 업무 역시 광역과 기초에서 동시에 수행되

는 비율이 매우 높다(여성부, 2001).

특히 여성정책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여성정책들은 지역적 특성에 맞게 계획된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획일적으로 수립하여 내려보내지기 때문에 지역에서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인 정책(여성일자리 창출, 여성공무원임용목표제 등)들이 존재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선언적인 수준에서 머무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중앙에서 여성정책기본계획 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담당자들도 공동으로 참석하여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여성정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의 여성정책기본계획을 토대로 연계성을 가지면서 체적으로 여성정책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여성정책을 집행하는 것도 바람직 할 것이다.

<표 Ⅲ-10> 지방자치단체 여성 업무와 법적 근거에 따른 업무 유형

업무분류	업무의 유형
1. 통계·자료의 성별구분 및 지역여성통계·자료작성, 발간	강제(국가만)
2. 여성 주간의 실시	강제
3. 여성백서	선택
4. 여성발전위원회	선택
5. 여성발전기금조성	선택
6. 여성정책관련 조례, 규칙 정비	강제
7. 여성정책시행계획 수립, 수행	강제(광역만)
8. 남녀차별개선 유공자 표창 및 여성상 시상	선택
9. 여성인재은행 운영(전문인력명부)	강제
10. 각종 정부위원회 여성참여확대	강제
11.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지원	선택
12.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강제
13. 남녀차별적 법령 발굴 개선	강제
14. 여성정보제공 (여성 관련 홈페이지 운영 등)	선택
15. 남녀평등의식의 확산 (여아 출생 기념사업 등)	선택
16. 대중매체의 성차별 개선	강제
17. 특정 부문에 대해 잠정적 우대 조치 실시	선택
18. 국공립연수기관 및 사회교육기관에서 남녀평등교육실시	선택
19. 직장내 평등한 근로환경조성 (성희롱 예방교육)	강제
20.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사항 (신고센터, 신고접수처리 등)	선택
21. 여성사회교육지원 (성차별 사례집, 여성 법률교실 등)	선택
22. 여성관련 교육원 (여성수련원, 여성의 집 등)	선택
23. 여성인력개발센터 지도, 감독	강제
24. 여성지도자 연수, 교육	선택
25. 여성공무원재교육	선택
26. 여성취업정보센터(구인·구직 알선, 취업확대)	강제
27. 직장 가정 양립 지원체제 확립 (육아휴직제 등)	강제
28. 여성근로자 근로 여건 개선 (직장내 보육시설 등)	선택
29. 여성직업능력 개발 (여성취업직업훈련 등)	강제
30. 여성경제인지원 (여성 경제인 명부 발간 등)	선택
31. 여성 창업 및 기업활동지원	선택
32. 여성기업물품 우선 구매	강제
33. 여성모성보호 확대 (임신 출산 수유)	강제
34. 여성의 건강증진 (여성 건강 진단 확대 등)	강제
35. 성비불균형 해소 (태아 성감별 금지조치에 대한 홍보 등)	선택
36. 노인여성의 복지증진	선택
37. 여성장애인의 복지증진	선택
38. 성폭력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보호	강제

64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업무분류	업무의 유형
39. 가정폭력문제 시책 강구	강제
40. 일군위안부 생활안정지원	강제
41. 여성복지법인설립인가, 지도, 감독	강제
42. 여성회관, 여성발전센터 또는 복지관의 설치, 운영, 지도	강제
43. 여성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지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보호시설)	강제
44. 여성상담소 설치, 운영, 지도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상담소)	강제
45. 요보호여성을 위한 복지시설의 설치, 운영, 지도 (선도보호시설 등)	강제
46. 여성복지상담소의 설치, 운영, 지도	강제
47. 여성1366 지원	강제
48. 여성문화활동 지원 (여성문화제 개최 등)	선택
49. 여성단체활동 지원 (행정적, 재정적 지원)	선택
50.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 (여성자원봉사센터 설치, 운영 등)	강제
51. 통일대비 및 국제 협력 활성화	강제
52.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확립 (평등부부상 등)	선택
53. 맞벌이 가정 지원 시책 마련	강제
54. 편부모 가정 지원 시책 마련	강제
55. 가사노동가치평가 제도화 추진	선택
56. 가정내 남녀평등교육 실시	선택
57. 가정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운동	-
58. 푸드뱅크 (잉여식품 나눔은행)	-
59. 영유아보육시설의 확대 등	강제
60. 방과후 아동지도사업 확산	강제
61. 아동보호시설의 설치, 운영, 지도	강제
62. 아동상담소의 설치, 운영, 지도	강제
63. 소년소녀가장 및 결식아동지원에 관한 사항	선택
64. 요보호아동발생 예방 및 사후조치	선택
65. 사회복지법인(보육·아동)설립허가 및 운영 지도감독	강제
66. 보육정보센터	강제(기초자치단체만)
67. 보육종사자 교육 및 보육교사교육원	선택

IV

여성정책 기반체계 및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

1. 조사개요	67
2. 조사결과 분석	69

1. 조사개요

가. 조사대상자

조사대상은 여성정책에 대한 경험이 있어 어느 정도 여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므로 현재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232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 중 관리자급 1명과 부서원 1명에게 설문을 하였다. 관리자급은 여성정책을 수행하는데 따른 조직내부의 응집력이나 리더십, 외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서원은 여성정책 전반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데 도움이 되었다.

나. 조사기간

설문지 배부는 2003년 7월 28일부터 8월 20일까지 실시되었다. 232개 기초자치단체에 우편으로 발송하여 회수하였다. 총 464부의 설문지가 배포되어 이 가운데 384부가 회수 되었으나 설문응답이 불성실하거나 기한이 넘어 코딩에 사용할 수 없었던 20여부를 제외하고 364부만 분석에 이용하였다. 이를 시·군·구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시 110부, 군 153부, 구 101부였다.

다. 분석방법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반체계, 내부적 영향요인 그리고 외부적 영향요인으로 두고 이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질문에 대한 응답을 구함에 있어서는 Likert 5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실증적인 분석은 SPSS for WINDOWS 11.0을 이용한 빈도분석, 상관관계(correlation),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이용하였다.

라. 조사내용

연구의 내용은 우선,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갖는 기반체계가 구축되어 있어야 하므로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조직구성원간의 결속력, 그리고 관리자의 리더십 등을 조사하였다. 두 번째는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외부적인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여성정책 담당부서와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둘러싸고 있는 외적 영향요인들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여성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데에는 여타 환경과의 관계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둘러싼 환경들이 얼마나 호의적으로 여성문제나 정책에 관심을 갖고 협조관계를 유지하는가는 여성정책 담당부서에 상당한 지지가 된다. 이러한 지지는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여성정책을 수행하는데 수월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내용들을 설문지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을 현재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인식을 통해 파악하였다.

<표 IV-1> 인구통계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성별	여자	87(79.1)	133(86.9)	83(82.2)	303(83.2)
	남자	22(20.0)	19(12.4)	17(16.8)	58(15.9)
	무응답	1(0.9)	1(0.7)	1(1.0)	3(0.8)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여성정책 업무담당 경력	1년 미만	44(40.0)	48(31.4)	48(47.5)	140(38.5)
	1년-2년 미만	14(12.7)	27(17.6)	23(22.8)	64(17.6)
	2년-3년 미만	9(8.2)	12(7.8)	12(11.9)	33(9.1)
	3년-4년 미만	4(3.6)	6(3.9)	6(5.9)	16(4.4)
	4년 이상	38(34.5)	59(38.6)	11(10.9)	108(29.7)
	무응답	1(0.9)	1(0.7)	1(1.0)	3(0.8)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2. 조사결과 분석

가.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기반체계에 대한 인식

(1) 전담조직

여성정책을 전담으로 하는 조직이 있는 가에 대하여 전체응답 중 78.8%가 전담조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를 시군구를 구분하여 살펴보면 전담조직이 있는 비율이 시가 90.9%로 가장 높고, 다음이 구로서 77.2%, 군은 71.2%로 나타났다. 전담조직유무는 시군구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p=.001$).

<표 IV-2> 여성정책을 전담으로 하는 조직 유무

(단위: 명, %)

구분	전담조직 유	전담조직 무	전체
시	100(90.9)	10(9.1)	110(100.0)
군	109(71.2)	44(28.8)	153(100.0)
구	78(77.2)	23(22.8)	101(100.0)
계	287(78.8)	77(21.2)	364(100.0)

$$\chi^2=14.359 \text{ df}=2 \text{ p}=.001$$

여성정책 전담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정규직, 별정직, 계약직을 포함한 전담공무원의 인원수가 몇 명인가에 대하여는 전체응답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전담직원수가 2인 이하로 32.4%로 나타났다. 다음은 3인을 가지고 있는 비율은 28.8%, 4인은 11.3%, 5인 이상에는 7.1%로 60%이상의 시군구가 3인 이내의 여성정책 전담공무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차분석결과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p=.000$)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데, 특히 군 지역에서는 44.4%가 2인 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시와 구보다도 가장 열악한 인력상태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시 지역에서 전담인력 수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3인으로 38.2%를 차지하고, 다음은 2인 이하(22.7%), 그리고 5인 이상(18.2%), 4인(11.8%)으로 나타났다. 3인 이상의 전담인력은

갖는 비율이 시는 68.2%이고, 군은 28.8%, 구는 52.4%로 나타나 시와 구의 도시지역은 어느 정도는 여성정책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군은 인력상태가 열악한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3> 여성정책 전담 조직이 있는 경우 전담공무원의 수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2인 이하	25(22.7)	68(44.4)	25(24.8)	118(32.4)
3인	42(38.2)	35(22.9)	28(27.7)	105(28.8)
4인	13(11.8)	9(5.9)	19(18.8)	41(11.3)
5인 이상	20(18.2)	0(0.0)	6(5.9)	26(7.1)
무응답	10(9.1)	41(26.8)	23(22.8)	74(20.3)
전체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위와 같은 응답에서, 현재의 전담직원 수에 대한 의견으로 ‘부족한 편이다’는 응답비율이 56.3%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적정하다’에 26.6%, ‘매우부족하다’에 14.0% 응답하였다. 충분하다는 의견은 2.5%에 불과하다. 현재의 전담직원 수에 대하여 부족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타난 곳은 군으로 71.9%이고, 다음으로는 구는 67.3%, 시는 31.8%가 동의하였다. 충분하다는 의견은 시에서 30.8%가 나타나 군이나 구 보다는 시가 여성정책전담인력 수에 있어서는 비교적 양호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IV-4> 현재의 전담직원 수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매우충분하다	20(18.2)	1(0.7)	0(0.0)	1(0.3)
충분한 편이다	13(11.8)	4(2.6)	2(2.0)	8(2.2)
적정하다	42(38.2)	37(24.2)	30(29.7)	97(26.6)
부족한 편이다	25(22.7)	85(55.6)	57(56.4)	205(56.3)
매우부족하다	10(9.1)	25(16.3)	11(10.9)	51(14.0)
무응답	-	1(0.7)	1(1.0)	2(0.5)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앞에서 살펴본 전담조직유무와 전담조직의 충분성을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 인식도와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 모두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고 인식하는 것과 유의미한 정도로 상관성이 있는 것($p<.05$)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담조직이 있고, 인원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어서 인력부족감을 크게 느끼지 않는 정도에서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5> 전담조직 규모와 여성정책 효율적 추진과의 상관계수

구분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
전담조직 유무	.176*** p=.001
전담조직을 가진 경우 전담직원수	-.253*** p=.000
전담직원수에 대한 과부족 의견	-.122** p=.022

* 상관계수는 전담조직유무 ①전담조직유 ②전담조직무/ 전담직원수 ① 2인이하, ②.3인, ③ 4인, ④ 5인이상/ 과부족의견 ① 매우부족함 ②부족한편 ③적당한편 ④ 충분한편 ⑤ 매우 충분한편으로 코드화하고 효율적추진정도를 ① 매우 효율적임 ② 효율적인편 ③ 효율적이지 않은편 ④ 전혀 효율적이지 않음 으로 구분하여 상관관계를 분석함.

(2) 여성정책업무에 대한 전문성

여성정책과 관련한 업무에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높은 정도의 전문성 요구함’에 54.1%가 응답을 하였고, 12.1%는 ‘매우 높은 정도의 전문성 요구함’에 응답을 하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9.7%로 나타났다.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부정적 응답은 4.1%로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 여성정책이 전문성을 요구한다는 응답은 66.2%로 전문분야임을 인정하고 있다.

여성정책이 높은 정도의 전문성 요구된다는 응답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시로 72.7%를 차지한다. 군은 66.7%, 구는 58.4%가 높은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응답을 하였다.

<표 IV-6> 여성정책관련 업무에 필요한 전문성의 요구정도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매우 높은 전문성 요구함	15(13.6)	22(14.4)	7(6.9)	44(12.1)
높은 정도의 전문성 요구함	65(59.1)	80(52.3)	52(51.5)	197(54.1)
보통임	24(21.8)	45(29.4)	39(38.6)	108(29.7)
그다지 전문성이 필요치 않음	6(5.5)	5(3.3)	3(3.0)	14(3.8)
전혀 전문성을 필요치 않음	0(0.0)	1(0.7)	0(0.0)	1(0.3)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이렇게 여성정책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로 인식하고 있음에 대하여 여성정책담당공무원 자신의 여성정책 수행관련 전문성을 갖춘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가장 많은 비율인 37.1%가 ‘전문성이 부족한 편임’에 응답을 하였다. 다음은 ‘보통임’에 33.0%,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가졌음’에 24.7%, ‘전혀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 응답한 비율도 4.4%로 나타났다. 전체응답 중 전문성을 가졌다는 응답은 25.5%로 여성정책수행 전문성정도는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성을 가졌다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시에서 34.5%로 나타나고, 군은 28.2%, 구는 11.9%가 이에 응답하여 시 공무원이 여성정책전문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군이나 구로 갈수록 공무원 자신이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V-7> 자신에 대한 여성정책 수행관련 전문성 보유 평가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아주 높은 전문성을 가졌음	1(0.9)	1(0.7)	1(1.0)	3(0.8)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가졌음	37(33.6)	42(27.5)	11(10.9)	90(24.7)
보통임	33(30.0)	42(27.5)	45(44.6)	120(33.0)
전문성이 부족한 편임	35(31.8)	60(39.2)	40(39.6)	135(37.1)
전혀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음	4(3.6)	8(5.2)	4(4.0)	16(4.4)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조사응답자가 동일한 행정기관내의 소속 시·군·구의 여성정책 전담 공무원의 업무관련 전문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편’에 39.0%, ‘보통임’에 33.8%,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음’에 22.3%, ‘전혀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음’에 3.6%가 응답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응답은 23.7%에 지나지 않았다. 앞의 질문에서 자신의 업무전문성을 평가한 것과 거의 동일한 평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8> 업무부서의 공무원에 대한 여성정책 수행관련 전문성 보유 평가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아주 높은 전문성을 가졌음	2(1.8)	2(1.3)	1(1.0)	5(1.4)
전문성을 어느 정도 갖추었음	36(32.7)	35(22.9)	10(9.9)	81(22.3)
보통임	32(29.1)	50(32.7)	41(40.6)	123(33.8)
전문성이 부족한 편	38(34.5)	61(39.9)	43(42.6)	142(39.0)
전혀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음	2(1.8)	5(3.3)	6(5.9)	13(3.6)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응답은 시의 경우는 34.5%, 군은 24.2%, 구는 10.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비율이 낮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시군의 경우보다도 구의 경우 전문성에 있어서 매우 낮은 비율로 여성정책에 인력의 전문성 및 업무의 전문화가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3) 여성발전기본조례

소속 시·군·구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제정되어 있다는 응답이 37.6%, 제정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61.5%로 제정되어 있지 않은 곳이 더 많다.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비율은 군이나 구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데, 제정되어 있지 않은 비율이 시는 44.5%, 군은 63.4%, 구는 77.2%로 나타났다. 이는 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 것($p=.000$)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IV-9> 소속 시·군·구의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여부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제정되어 있음	61(55.5)	53(34.6)	23(22.8)	137(37.6)
제정되어 있지 않음	49(44.5)	97(63.4)	78(77.2)	224(61.5)
무응답	-	3(2.0)	0(0.0)	3(0.8)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다음은 소속 시·군·구가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하지 않은 이유를 어떻게 인식하는 지에 대하여 묻은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여성발전기본조례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시각’이 39.2%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담당공무원의 인식 부족’에 28.1%, ‘단체장의 의지부족’에 23.1%, ‘의회의원의 의지부족’에 9.5% 동의를 하였다.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없는 시군구가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에서 여성정책기본조례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시각에 대한 비율이 높은 것은 여성정책발전의 저해요인으로 간주되는 데, 여성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하게 정책으로 자리 잡아 단체장의 정책의지를 펼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발전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시민이 주체가 되어 제기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0>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하지 않은 이유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담당공무원의 인식부족	16(38.1)	26(29.5)	14(20.3)	56(28.1)
의회의원의 활동부족	7(16.7)	9(10.2)	3(4.3)	19(9.5)
단체장의 의지부족	8(19.0)	22(25.0)	16(23.2)	46(23.1)
여성발전기본조례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는 시각	11(26.2)	31(35.2)	36(52.2)	78(39.2)
계	42(100.0)	88(100.0)	69(100.0)	199(100.0)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여성정책 추진에 기여한다고 보는가에 대하여는 조사 대상 공무원 68.7%가 기여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IV-11>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여성정책 추진에 기여 여부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여성정책에 기여함	80(72.7)	105(68.6)	65(64.4)	250(68.7)
여성정책에 기여하지 않음	28(25.5)	41(26.8)	33(32.7)	102(28.0)
무응답	2(1.8)	7(4.6)	3(3.0)	12(3.3)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여성정책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은 소속 시군구가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한 경우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집단보다 이에 조례의 기능성을 더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조례가 제정되어 있을 경우 보다 더 적극적으로 여성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인식이다.

<표 IV-12> 여성발전기본조례제정 집단과 조례제정의 기여 인식정도
(단위: 명, %)

구분	여성발전조례 제정	여성발전조례 제정 안함	전체
여성정책추진에 기여	115(87.1)	125(60.1)	240(70.6)
여성정책추진에 기여 안함	17(12.9)	83(39.9)	100(29.4)
계	132(100.0)	208(100.0)	340(100.0)

* $\chi^2=2.408$ df=1 p=.000

(4) 여성정책의 자치단체내 정책적 지위

조사응답자에게 소속 시군구가 지역의 여성발전을 중요한 행정수행 목표로 삼는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응답자의 54.9%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였다. 이를 시군구별로 보면, 시에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군, 구 순으로 나타났다. 시는 61.8%가 지역의 여성발전을 중요한 수행목표로 삼는 다라는 응답을 하고, 군은 53.6%, 구는 49.5%가 이에 응답을 하였다.

<표 IV-13> 지역 여성발전을 중요한 행정수행목표로 삼는가 여부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그렇다	68(61.8)	82(53.6)	50(49.5)	200(54.9)
그렇지 않다	41(37.3)	69(45.1)	48(47.5)	158(43.4)
무응답	1(0.9)	2(1.3)	3(3.0)	6(1.6)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소속시군구가 여성발전을 중요한 행정목표로 삼는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여성정책의 효율성인식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데, 이와 같은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래와 같다. 즉, 소속 시군구가 여성정책을 중요한 행정목표로 삼는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소속 시군구의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86.5% 이고, 그렇지 않은 집단에서는 49.4%를 나타내어 응답분포에서 유의미한 차이($p=.000$)를 보여주고 있다.

<표 IV-14> 지역의 여성발전을 중요한 행정목표로 삼는지 여부와 효율적 추진에 대한 인식의 교차분석

(단위: 명, %)

구분	여성정책을 중요한 행정목표로 삼음	여성정책을 중요한 행정목표로 삼지 않음	전체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0.5)	10(6.4)	11(3.2)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25(13.0)	69(44.2)	94(27.0)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에 동의하는 편이다	147(76.6)	73(46.8)	220(63.2)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19(9.9)	4(2.6)	23(6.6)
계	192(100.0)	156(100.0)	348(100.0)

* $\chi^2=59.546$ df=3 $p=.000$

조사응답자에게 소속 시군구가 현재 여성정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여성의 평생교육참여 여건 강화’에 31.9%의 응답을 보였으며, 다음은 ‘여성의 문화활동참여확대’에 26.1%, ‘여성의 건강과 빈곤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18.4%,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17.0%,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근절’에 5.8%가 응답을 하였다.

시군구별로 보면, ‘여성의 평생교육참여 여건강화’는 시와 군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구에서는 ‘여성의 문화활동참여확대’와 ‘여성의 건강과 빈곤 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차이를 보여주었다.

<표 IV-15> 소속 시·군·구가 현재 여성정책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문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여성의 건강과 빈곤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	18(16.4)	21(13.7)	28(27.7)	67(18.4)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20(18.2)	31(20.3)	11(10.9)	62(17.0)
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13(11.8)	3(2.0)	5(5.0)	21(5.8)
여성의 평생교육참여 여건강화	40(36.4)	56(36.6)	20(19.8)	116(31.9)
여성의 문화활동참여확대	16(14.5)	42(27.5)	37(36.6)	95(26.1)
무응답	3(2.7)	0(0.0)	0(0.0)	3(0.8)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한편, 조사응답자에게 향후 소속 시군구가 여성정책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물은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여성의 직업능력개발’로 42.0%로 나타났다. 다음은 ‘여성의 평생교육참여 여건강화’에 22.8%, ‘여성의 건강과 빈곤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17.6%의 비율을 보였다.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중요성 지적은 시군구 모두에서 높게 나타나 여성정책의 중요부문으로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 여건강화도 중요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표 IV-16> 향후 여성정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문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여성의 건강과 빈곤여성에게 대한 경제적 지원	20(18.2)	25(16.3)	19(18.8)	64(17.6)
여성의 직업능력개발	54(49.1)	60(39.2)	39(38.6)	153(42.0)
여성에게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5(4.5)	5(3.3)	6(5.9)	16(4.4)
여성의 평생교육참여 여건강화	19(17.3)	39(25.5)	25(24.8)	83(22.8)
여성의 문화활동참여확대	10(9.1)	22(14.4)	12(11.9)	44(12.1)
무응답	2(1.8)	2(1.3)	0(0.0)	4(1.1)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소속 시군구가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과 향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보는 부분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데 위의 표에서 시에서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여성의 평생교육 참여여건강화’인 것과 비교하여, 향후의 방향으로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이 지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군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향후 여성정책은 직업능력 개발이 중요한 정책부분이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5) 여성부문 중장기 발전계획

조사응답자에게 소속 시군구가 여성정책 추진을 위한 중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하여 물은 결과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비율은 39.3%로 나타났다. 중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비율은 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중장기발전계획 유무는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다.

<표 IV-17> 여성정책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 유무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중장기 발전계획(3-5년 정도)을 가지고 있다	2(1.8)	66(43.1)	30(29.7)	143(39.3)
당해연도 계획만을 가지고 있다	47(42.7)	65(42.5)	60(59.4)	179(49.2)
계획에 의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수행한다	54(49.1)	21(13.7)	10(9.9)	38(10.4)
무응답	0(0.0)	1(0.7)	1(1.0)	4(1.1)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즉, 중장기발전계획(3-5년 정도)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데 동의하는 비율은 80.2%이고, 당해연도 계획만을 가지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율이 62.8%, 계획에 의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수행한다고 응답한 경우에는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비율은 54.0%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계성을 상관관계를 통하여 알아보면 유의미한 상관성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p=.001$).

<표 IV-18> 중장기발전계획 보유와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 상관계수

구분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 인식정도
중장기발전계획의 보유	.170*** $p=.001$

조사응답자가 중장기발전계획 또는 당해연도계획을 가지고 있을 경우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인력증원이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가장 많은 응답이 현재의 150%가 필요하다는 응답으로 37.2%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 응답비율도 31.4%로 높게 나타났다. 200%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군은 200% 또는 150%의 인력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19>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증원 비율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130%	27(29.7)	15(11.7)	22(24.4)	64(20.7)
150%	28(30.8)	49(38.3)	38(42.2)	115(37.2)
180%	7(7.7)	11(8.6)	6(6.7)	24(7.8)
200%	27(29.7)	49(38.3)	21(23.3)	97(31.4)
기타	2(2.2)	4(3.1)	3(3.3)	9(2.9)
계	91(100.0)	128(100.0)	90(100.0)	309(100.0)

그리고 중장기발전계획 또는 당해연도계획을 가지고 있을 경우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예산증원이 필요한가에 대하여는 가장 많은 응답이 200%로 57.2%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150%에 22.7%가 응답을 하였다. 앞에서 살펴본 인력에 대한 증원비율보다도 예산에 대한 증액비율이 높게 요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데, 이는 시군구 모두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성정책의 실제적 집행을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다.

<표 IV-20> 여성정책 중장기 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증액예산비율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현재의 130%	6(6.8)	7(5.7)	6(6.7)	19(6.4)
현재의 150%	20(22.7)	22(18.0)	26(29.2)	68(22.7)
현재의 180%	5(5.7)	15(12.3)	7(7.9)	27(9.0)
현재의 200%	54(61.4)	70(57.4)	47(52.8)	171(57.2)
기타	3(3.4)	8(6.6)	3(3.4)	14(4.7)
계	88(100.0)	122(100.0)	89(100.0)	299(100.0)

소속 시군구의 여성정책예산규모는 가장 많은 응답비율이 5천만원미만으로 26.4%이다. 다음은 5천만원미만-1억원 미만으로 20.9%로 나타났다. 따라서 1억원 미만의 여성정책예산을 갖고 있는 비율은 47.3%에 이른다.

<표 IV-21> 소속 시·군·구의 여성정책예산의 규모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5천만원 미만	15(13.6)	45(29.4)	36(35.6)	96(26.4)
5천만원미만-1억원미만	9(8.2)	47(30.7)	20(19.8)	76(20.9)
1억원이상-2억원미만	20(18.2)	23(15.0)	6(5.9)	49(13.5)
2억원이상-3억원미만	13(11.8)	13(8.5)	14(13.9)	40(11.0)
3억원이상	46(41.8)	19(12.4)	16(15.8)	81(22.3)
기타	2(1.8)	2(1.3)	5(5.0)	9(2.5)
무응답	5(4.5)	4(2.6)	4(4.0)	13(3.6)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특히 1억원 미만의 예산은 군에서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데, 군의 60.3%가 1억원 미만이다. 이와 같은 비율이 시에서는 21.8%, 구에서는 55.4%이다. 또한 3억원 이상의 예산규모는 시는 41.8%, 군은 12.4%, 구는 15.8%로 나타났다.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시와 군이나 구는 차이가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6) 여성발전기금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여성발전기금이 기여할 수 있는 부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하여는 가장 많은 의견이 ‘특화된 사업 실행’으로 31.6%로 나타났다. 다음은 ‘창의성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지원’에 30.8%를 응답을 하였다.

특히, 시는 창의성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지원 의견에 40.9%의 응답률을 보여 여성발전기금이 행정기관의 사업진행으로 부족한 지역발전의 선도적 역할부문에 민간단체를 지원함으로써 기여한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화된 사업실행과 창의성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지원의 응답을 합할 경우 62.4%의 응답비율을 차지함으로써 여성발전기금은

일반예산과는 달리 특별한 용도로서 여성정책활성화를 위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표 IV-22> 여성발전기금이 여성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한 의견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보충적 역할	18(16.4)	40(26.1)	15(14.9)	73(20.1)
특화된 사업 실행	31(28.2)	46(30.1)	38(37.6)	115(31.6)
예산삭감이 있더라도 사업의 지속성 유지	13(11.8)	20(13.1)	23(22.8)	56(15.4)
창의성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지원	45(40.9)	45(29.4)	22(21.8)	112(30.8)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소속 시군구에 대하여 여성발전기금 조성여부를 묻은 결과 가장 많은 응답은 ‘조성 중’이라는 응답으로 43.7%를 차지하였다. 17.6%는 ‘이미 조성된 상태’라는 응답을 하였다. 시군구가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비율은 37.4%이다. 조성된 상태에 있어서도 시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고 조성중인 비율도 시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발전기금은 구에서는 조성상태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3> 여성발전기금 조성 여부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이미 조성된 상태	30(27.3)	27(17.6)	7(6.9)	64(17.6)
조성 중	71(64.5)	63(41.2)	25(24.8)	159(43.7)
조성을 고려 중	6(5.5)	32(20.9)	17(16.8)	55(15.1)
조성계획 없음	3(2.7)	26(17.0)	52(51.5)	81(22.3)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시군구가 여성발전기금을 이미 조성하였거나 조성중인 경우,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는 지에 대하여는 25.0%만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24>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의 활용 여부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활용	21(22.1)	27(32.1)	5(15.2)	53(25.0)
미활용	74(77.9)	57(67.9)	28(84.8)	159(75.0)
계	95(100.0)	84(100.0)	33(100.0)	212(100.0)

(7) 여성발전위원회

조사응답자에게 소속 시군구가 여성발전위원회를 구성하였는가에 대하여 알아본 결과, 구성되어 있다는 비율은 전체의 28.1%로 나타났다.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는 비율이 높은 것은 시로서 53.9%이며, 군은 22.8%, 구는 9.8%에 지나지 않았다.

<표 IV-25> 여성발전위원회 구성 유무

(단위: 명, %)

구분	구성	비구성	전체
시	55(53.9)	47(46.1)	102(100.0)
군	33(22.8)	112(77.2)	145(100.0)
구	10(9.8)	92(90.2)	102(100.0)
계	98(28.1)	251(71.9)	349(100.0)

* $\chi^2=52.631$ df=2 p=.000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여성발전위원회의 기능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의견으로는 가장 많은 것은 ‘여성정책 추진의 방향 및

정책개발 자문'으로 58.8%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여성정책에 대한 사업심의'에 40.2% 응답하였다. 응답이 차지하는 순위에서 시군구가 동일하게 나타났다. 여성발전위원회는 여성정책의 방향 및 정책개발에 그 기능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6> 여성발전위원회 기능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여성정책에 대한 사업심의	25(46.3)	11(34.4)	3(27.3)	39(40.2)
여성정책 추진의 방향 및 정책개발자문	28(51.9)	21(65.6)	8(72.7)	57(58.8)
필요한 연구사업의 제안	1(1.9)	0(0.0)	0(0.0)	1(1.0)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	-	-	-
계	54(100.0)	32(100.0)	11(100.0)	97(100.)

또한,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여성발전위원회 개최빈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는 66.0%가 연중 1-2회로 응답하였다. 다음으로 많은 응답은 3-4회로 26.8%를 차지하였다. 5회 이상 개최한다는 응답은 시에서 7.4%가 나타났고, 군이나 구에서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발전위원회는 연중 1-2회 정도의 회의가 개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IV-27> 여성발전위원회 연중 개최 빈도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1-2회	34(63.0)	25(78.1)	5(45.5)	64(66.0)
3-4회	15(27.8)	5(15.6)	6(54.5)	26(26.8)
5회 이상	4(7.4)	0(0.0)	0(0.0)	4(4.1)
기타	1(1.9)	2(6.3)	0(0.0)	3(3.1)
계	54(100.0)	32(100.0)	11(100.0)	97(100.0)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여성발전위원회의 제안사항이 어느 정도 수용되는지에 대하여는 가장 많은 응답이 ‘많은 부분을 수용한다’로 50.0%를 차지하였다. 다음은 ‘일부의견만 수용한다’ 36.2%, ‘의견으로만 참고한다’ 9.6%이다. ‘전적으로 수용한다’는 의견은 4.3%이다. 여성발전위원회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수용한다는 의견 54.3%이고, 일부의견수용 및 의견으로만 참고한다는 비율을 합하면 45.8%를 보임으로써 수용의사에 있어서 긍정적인 부분이 비수용측면보다는 약간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부수용과 의견으로만 참고한다는 비율도 낮은 비율이라고 하기에는 비율이 높다. 따라서 여성정책담당부서와 여성발전위원회와의 상호의존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표 IV-28> 여성발전위원회 제안사항 수용정도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전적으로 수용한다	4(7.5)	0(0.0)	0(0.0)	4(4.3)
많은 부분을 수용한다	26(49.1)	15(50.0)	6(54.5)	47(50.0)
일부의견만 수용한다	17(32.1)	13(43.3)	4(36.4)	34(36.2)
의견으로만 참고한다	6(11.3)	2(6.7)	1(9.1)	9(9.6)
계	53(100.0)	30(100.0)	11(100.0)	94(100.0)

그러면,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발전위원회의 제안사항을 받아들이는데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인지를 제약요소로 알아보면, 가장 많은 응답은 ‘예산의 부족’으로 52.1%를 차지한다. 다음으로는 ‘담당인력의 부족’의견도 13.5%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비현실적인 제안’이라는 의견도 11.5% 나타났다. 시군구를 나누어 예산, 인력의 부족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면, 시에서 66.7%, 군에서 58.0%, 구에서 81.8%로 대부분의 의견이 예산 및 인력의 부족이 여성발전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응답으로 보아 여성발전위원회는 더 많은 정책이 시군구의 여성정책부서가 담당하고 사업을 시행하기를 희망하나 예산 및 인력의 부족으로 시행할 수 없는 상황임을 짐작할 수 있다.

<표 IV-29> 여성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는 데 따른 제약요소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예산의 부족	29(53.7)	13(41.9)	8(72.7)	50(52.1)
담당인력의 부족	7(13.0)	5(16.1)	1(9.1)	13(13.5)
단체장의 무관심	2(3.7)	5(16.1)	0(0.0)	7(7.3)
관련부서의 협조부족	3(5.6)	4(12.9)	0(0.0)	7(7.3)
비현실적인 제안	8(14.8)	3(9.7)	0(0.0)	11(11.5)
기타	5(9.3)	1(3.2)	2(18.2)	8(8.3)
계	54(100.0)	31(100.0)	11(100.0)	96(100.0)

(8) 여성정책의 기여도 및 효율적 추진에 대한 평가

조사응답자 전체에게 소속 시군구의 여성정책이 지역 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 것을 인식정도에 의하여 알아본 결과, 가장 많은 응답으로 '어느 정도 기여한 편'이라는 응답에 78.6%이다. 그러나 '매우 크게 기여'에는 11.5%가 동의하였다. 또한 '기여하지 못한 편'에 15.7%, '전혀 기여하지 못함'에 1.6%의 응답을 보여 부정적 의견에서도 17.3%를 나타내었다.

<표 IV-30> 여성정책이 지역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 정도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매우 크게 기여	18(16.4)	16(10.5)	8(7.9)	42(11.5)
어느 정도 기여한 편	81(73.6)	108(70.6)	68(67.3)	257(70.6)
기여하지 못한 편	11(10.0)	24(15.7)	22(21.8)	57(15.7)
전혀 기여하지 못함	0(0.0)	4(2.6)	2(2.0)	6(1.6)
무응답	-	1(0.7)	1(1.0)	2(0.5)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위에서 살펴본 많은 응답을 하고 난 후 소속 시군구가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한다고 보는지에 대하여 의견을 물은 결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

다는 의견은 69.1%이다. 시군구를 나누어 살펴보면,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의견이 시에서는 78.9%, 군은 67.2%, 구는 61.8%로 나타나고 있다.

<표 IV-31>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동의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전적으로 동의한다	14(13.5)	5(3.4)	5(4.9)	24(6.8)
동의하는 편이다	68(65.4)	95(63.8)	58(56.9)	221(62.3)
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22(21.2)	41(27.5)	36(35.3)	99(27.9)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0(0.0)	8(5.4)	3(2.9)	11(3.1)
계	104(100.0)	149(100.0)	102(100.0)	355(100.0)

지역의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인식은 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평가와 상관관계가 유의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데(상관계수=.486, $p=.000$),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다는 내용에 동의할 경우 지역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응답은 필연적으로 높았다. 즉,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응답에서는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응답이 각각 95.9%, 92.7%로 높게 나타났다.

<표 IV-32>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삶의 질 제고와의 관계
(단위: 명, %)

구분	전적으로 동의함	동의하는 편	동의하지 않는 편	전혀 동의 안함	전체
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 크게 기여	10(41.7)	29(13.2)	1(1.0)	1(9.1)	41(11.6)
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한 편	13(54.2)	175(79.5)	57(58.2)	3(27.3)	248(70.3)
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지 않은 편	1(4.2)	16(7.3)	39(39.8)	2(18.2)	58(16.4)
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 전혀 기여안함	-	-	1(1.0)	5(45.5)	6(1.7)
계	24(100.0)	220(100.0)	98(100.0)	11(100.0)	353(100.0)

* $\chi^2=211.498$ df=9 $p=.000$

(9) 여성정책 기반체계와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

앞에서 여성정책기반체계의 분석변수로 전담조직, 여성발전기본조례, 자치단체내의 정책우선순위 차원의 지위, 중장기발전계획 유무, 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위원회, 여성정책의 기여도 등을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전담조직의 유무는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담조직이 있을 경우 72.2%가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고, 전담조직이 없을 경우는 58.4%만이 효율적 추진에 동의하였다. 전담조직의 전담공무원 수는 2인 이하가 32.4%, 3인 이상이 47.2%로 나타났다는데, 3인 이상의 전담공무원이 있는 비율은 시에서 높게 나타난다.

여성정책은 66.2%가 높은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자신이나 동료들의 전문성을 평가하는 데는 부족성을 인정하고 있었다. 자신들에게는 전문성을 가졌다는 응답이 25.5%, 조직 내 업무부서에 대하여는 23.7% 응답률을 보여 전문성평가에서는 매우 낮았다.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조사응답자의 68.7%가 여성정책 추진에 기여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여성발전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는 37.6%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는 여성발전기본조례가 필요하지 않다고 보는 시각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응답이 39.2%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공무원의 인식부족(28.1%)이나 단체장의 의지부족(23.1%)을 동일수준의 비율로 지적하였다.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여성정책추진에 기여한다는 인식은 이미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응답자집단에서 높게 나타나는 데,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집단에서는 87.1%가 여성정책에 기여한다고 응답하였다.

여성정책에 대하여 소속 시군구에서 중요한 행정목표로 설정되어 있는가에 대하여는 54.9%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시군구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 데, 시의 경우는 이에 대한 응답이 61.8%이다. 여성정책을 중요한 행정목표로 삼을 경우 여성정책의 효율적 수행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는 데 전자의 경우는 86.5%가 효율적

추진에 동의하고, 후자의 경우는 49.4%가 효율적 추진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구의 여성정책은 현재 여성의 평생교육참여 여건강화 또는 여성의 문화활동참여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으로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현재의 정책수행과 향후 방향은 차이를 보였다.

시·군·구는 여성정책에 대하여 중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비율은 39.3%였고, 당해연도 계획만을 갖고 있는 경우는 49.2%, 계획이 없는 경우도 10.4%로 나타났다. 중장기발전계획유무와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은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중장기발전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150% 내지 200%의 인력 및 예산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인력 및 예산의 부족은 심각하다.

현재 시군구가 여성정책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 예산액은 5천만원 미만인 26.4%로 이는 시보다는 군이나 구에서 더 높은 비율이다. 5천만원 - 1억원 미만은 20.9%로 마찬가지로 군이나 구에서 높은 비율이다. 1억원-2억원 미만은 13.5%,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은 11.0%, 3억원 이상은 22.3%이다. 3억원 이상 예산액은 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시' 중에서는 3억원 이상이 41.8%로 나타난다. 군은 같은 응답내용에서 12.4%, 구는 15.8%이다.

여성발전기금은 일반예산과는 달리 특화된 사업실행, 창의성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이미 조성된 비율은 17.6%이고, 43.7%는 조성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여성발전기금을 현재 활용하는 비율은 25.0%로 여성발전기금의 활용은 미약하다.

여성발전위원회는 여성정책추진의 방향 및 정책개발자문, 여성정책에 대한 사업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된 비율은 28.1%에 불과하다. 구성된 비율에서 시는 53.9%, 군은 22.8%, 구는 9.8%로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연중 개최빈도로서 가장 많은 것은 1-2회로 66.0%를 차지한다. 여성발전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수용정도

는 54.3%가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예산의 부족과 인력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발전위원회가 여성정책추진의 방향 및 사업에 대한 건의를 한다 해도 예산 및 인력의 제약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군·구는 여성정책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즉 남녀평등촉진, 여성의사회참여확대, 복지증진의 목표달성을 어느 정도 하였다고 평가하는가에 대하여는 82.1%가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은 시에서 가장 높아 90.0%가 여성의 삶의 질에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시·군·구 여성정책담당공무원의 여성정책추진에 대한 효율성 평가는 69.1%가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응답은 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응답과 무관하지 않다. 분석결과에서 효율적 추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교차분석결과에서 24명)에 95.9%가 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동의하고, 효율적 추진에 동의하는 편(교차분석결과에서 220명)에서 92.7%가 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응답하는 반면, 효율적 추진에 동의하지 않는 편(교차분석결과에서 98명)에서는 40.8%가 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지 않는 편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나타났다. 효율적 추진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의견(교차분석결과에서 11명)에서는 63.7%가 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나.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내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

(1) 여성정책담당부서의 독자적 영역

여성정책담당부서가 여성정책 관련 사업들을 독자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는 범위의 정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넓은 편 7.1%, 중간정도 29.4%, 좁은 편(좁은 편 44.8%, 아주 좁은 편 18.7%)63.5%로 응답하여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립·집행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담당공무원들은 상당히 좁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군·구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시의 경우 좁은 편이라는 응답이 36.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간 정도 33.6%, 아주 좁다 18.2%, 넓은 편 11.8% 순으로 나타났다. 군의 경우는 좁은 편이 52.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중간 정도 26.8%, 아주 좁다 16.3%, 넓은 편 4.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역시 좁은 편이 42.6%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으로 중간 정도 28.7%, 아주 좁다 22.8%, 넓은 편 5.9%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시의 응답이 군·구의 응답에 비해 독자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는 범위의 정도가 넓은 편이라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33> 여성정책담당부서가 여성정책관련 사업들을 독자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는 범위의 정도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넓은 편	13(11.8)	7(4.6)	6(5.9)	26(7.1)
중간정도	37(33.6)	41(26.8)	29(28.7)	107(29.4)
좁은 편	40(36.4)	80(52.3)	43(42.6)	163(44.8)
아주 좁은 편	20(18.2)	25(16.3)	23(22.8)	68(18.7)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2) 여성정책 업무 수행의 헌신도

다른 업무 수행 시와 비교하여 여성정책업무 담당자(응답자)의 여성정책 관련업무 수행의 헌신도 정도에 대한 질문에는 전체 61.0%가 높은 편(매우 높은 편 15.7%, 높은 편 45.3%)이라고 응답한 반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불과 4.4%(낮은 편 3.6%, 아주 낮은 편 0.8%)로 아주 낮았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4.6%였다. 여성정책 업무 담당공무원들은 다른 업무를 수행할 때와 비슷하거나 보다 더 헌신하여 여성정책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군·구별로 나누어 여성정책 업무 수행의 헌신도를 살펴보면, 시의 경우 높은 편이 53.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보통이 25.5%, 매우 높은 편이 19.1%의 순으로 높았다. 낮은 편은 1.8%로 낮았으며, 아주 낮은 편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군의 경우에도 높은 편이 47.7%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 33.3%로 높았다. 매우 높은 편도 16.3%를 차지하였으나, 낮은 편, 아주 낮은 편은 각각 2.0%, 0.7%의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구의 경우에는 보통이 46.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높은 편이 32.7%였다. 매우 높은 편은 10.9%, 낮은 편은 7.9%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아주 낮은 편은 2.0%의 비율이었다.

<표 IV-34> 여성정책 관련업무 수행시 헌신도 정도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매우 높은 편	21(19.1)	25(16.3)	11(10.9)	57(15.7)
높은 편	59(53.6)	73(47.7)	33(32.7)	165(45.3)
보 통	28(25.5)	51(33.3)	47(46.5)	126(34.6)
낮은 편	2(1.8)	3(2.0)	8(7.9)	13(3.6)
아주 낮은 편	0(0.0)	1(0.7)	2(2.0)	3(0.8)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3) 여성정책 담당부서 구성원간의 결속력

다른 부서와 비교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 구성원간의 결속력 정도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2.4%(매우 높은 편 20.1%, 높은 편 42.3%)로 낮은 편이라 응답한 비율 2.7%(낮은 편 2.2%, 아주 낮은 편 0.5%)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의 경우 높은 편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각각 3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매우 높은 편이 28.2%, 낮은 편이 4.5%, 아주 낮은 편과 무응답이 각각 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높은 편이 47.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 32.7%, 매우 높은 편 17.6%, 낮은

편, 아주 낮은 편, 무응답이 각각 0.7% 순으로 나타났다. 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높은 편이 43.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 38.6%, 매우 높은 편 14.9%, 낮은 편 2%, 아주 낮은 편 1%, 순으로 나타났다.

<표 IV-35> 여성정책 담당 구성원간의 결속력 정도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매우 높은 편	31(28.2)	27(17.6)	15(14.9)	73(20.1)
높은 편	37(33.6)	73(47.7)	44(43.6)	154(42.3)
보통	37(33.6)	50(32.7)	39(38.6)	126(34.6)
낮은 편	5(4.5)	1(0.7)	2(2.0)	8(2.2)
아주 낮은 편	0(0.0)	1(0.7)	1(1.0)	2(0.5)
무응답	0(0.0)	1(0.7)	0(0.0)	1(0.3)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4) 부서장의 여성정책 관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정도

여성정책 담당 부서의 관리자가 아니라고 대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여성정책 담당 부서장이 여성정책 업무 관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노력하는 편이 51.4%(아주 많이 노력함 12.0%, 노력하는 편 39.4%)였다.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5.6%, 노력하지 않는 편은 13.1%(노력하지 않는 편 10.6%, 전혀 노력하지 않음 2.5%)이었다. 대체로 여성정책 담당 부서장들은 전문적인 여성정책 업무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 여성정책 담당공무원들이 여성정책 업무에 대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시·군·구별로 부서장의 여성정책 관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정도를 보면, 시는 노력하는 편이 42.7%로 가장 높았고, 보통이 25.3%로 높았으며, 아주 많이 노력함이 22.7%의 비율을 보여주었다. 노력하지 않는 편(8.0)이나 전혀 노력하지 않는 편(1.3)이라는 응답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군의 경우에도 노력하는 편에 40.8%의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고, 보통이 다음으로

높은 33.6%이며, 12.0%의 아주 많이 노력하는 편과 10.4%의 노력하지 않는 편은 비슷한 비율을 보여주었고, 전혀 노력하지 않는 편이라는 비율은 3.2%로 낮았다. 구의 경우에는 보통이 47.6%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력이 34.5%로 높았고, 노력하지 않는 편도 13.1%의 비율로 나왔다. 아주 많이 노력하는 편과 전혀 노력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은 각각 2.4%로 낮았다.

<표 IV-36> 부서 내부의 여성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부서장의 노력정도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아주 많이 노력함	17(22.7)	15(12.0)	2(2.4)	34(12.0)
노력하는 편	32(42.7)	42(33.6)	29(34.5)	112(39.4)
보통	19(25.3)	51(40.8)	40(47.6)	101(35.6)
노력하지 않는 편	6(8.0)	13(10.4)	11(13.1)	30(10.6)
전혀 노력하지 않음	1(1.3)	4(3.2)	2(2.4)	7(2.5)
계	75(100.0)	125(100.0)	84(100.0)	284(100.0)

(5) 여성정책 담당 부서장의 내·외부 조직들과의 활동의 적극성

여성정책 부서장의 여성정책 부서의 역량강화를 위해 부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 조직들과의 활동에 대한 적극도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노력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8.7%(아주 많이 노력함 12.1%, 노력하는 편 36.6%)로 보통 39.6%, 낮은 편 11.7%(노력하지 않는 편 9.0%, 전혀 노력하지 않음 2.7%)보다 높았다. 따라서 여성정책 담당 부서장들은 부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 조직들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보통이나 노력하지 않은 편의 비율이 51.3%임을 고려할 때 부서장들의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시·군·구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시의 경우 노력하고 있음이 42.1%로 가장 높았으며, 보통이 28.9%, 아주 많이 노력하는 편이 21.1%의 순으로 높았다. 전혀 노력하지 않는 편이라는 응답은 없었으며, 노력하지 않는 편은 7.9%

에 그쳤다. 군의 경우에는 노력이 38.3%, 보통이 37.5%로 비슷하게 높았으며, 아주 많이 노력하는 편이 11.7%, 노력하지 않는 편이 8.6%, 전혀 노력하지 않는 편이 3.9%의 순이었다. 구의 경우에는 보통이 52.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력이 29.1%의 비율을 보였다. 노력하지 않는 편은 10.5%의 비율로 나타났고, 아주 많이 노력하는 편이나 전혀 노력하지 않는 편은 각각 4.7%, 3.5%로 낮게 나타났다.

<표 IV-37> 부서장의 내·외부 조직들과의 활동의 적극도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아주 많이 노력함	16(21.1)	15(11.7)	4(4.7)	35(12.1)
노력하는 편	32(42.1)	49(38.3)	25(29.1)	106(36.6)
보 통	22(28.9)	48(37.5)	45(52.3)	115(39.6)
노력하지 않는 편	6(7.9)	11(8.6)	9(10.5)	26(9.0)
전혀 노력하지 않음	0(0.0)	5(3.9)	3(3.5)	8(2.7)
계	76(100.0)	128(100.0)	86(100.0)	290(100.0)

(6) 여성정책이 다루어지는 비중

여성정책이 다른 부문의 정책들에 비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비중의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응답비율 8.5%보다 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음 37.1%, 전혀 중요하지 않게 다룸이 8.2%로 여성정책 업무가 다른 부문의 업무들에 비해 덜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들의 사기와 관련될 수 있는 것으로, 비중 있는 업무와 그렇지 못한 업무로 구분되어 비중 있는 업무만이 선호되는 조직의 분위기나 구성원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며 행정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어떠한 업무라도 정책수혜자들에게는 가치 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시의 경우 비슷한 정도로 다루고 있다는 응답이 47.3%로 가장 높았고, 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이 34.5%로 다음

으로 높았다. 더 중요하게 다룬다는 응답은 13.6%로 나타났으며, 전혀 중요하게 다루지 않음은 2.7%,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0.9%의 비율이었다. 군의 경우에도 비슷한 정도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응답이 37.9%로 높았다. 전혀 중요하지 않게 다루고 있다는 응답은 13.1%, 더 중요하게 다룬다는 응답은 7.8%로 나타났다. 구의 경우에도 비슷한 정도가 49.5%로 가장 높았으며, 덜 중요하게 다루어진다는 응답도 38.6%로 높았다. 더 중요하게 다룬다는 응답은 4.0%에 그쳤으며, 전혀 중요하지 않게 다룬다는 응답과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6.9%의 같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표 IV-38> 여성정책이 다루어지는 비중 정도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더 중요하게 다룸	15(13.6)	12(7.8)	4(4.0)	31(8.5)
비슷한 정도로 다룸	52(47.3)	63(41.2)	50(49.5)	165(45.3)
덜 중요하게 다룸	38(34.5)	58(37.9)	39(38.6)	135(37.1)
전혀 중요하지 않게 다룸	3(2.7)	20(13.1)	7(6.9)	30(8.2)
잘 모르겠음	1(0.9)	0(0.0)	7(6.9)	2(0.5)
무응답	1(0.9)	0(0.0)	0(0.0)	1(0.3)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7)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 분석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여성정책 관련 전문성과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여성정책 관련 사업들을 독자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여성정책 담당부서 구성원간의 결속력, 여성정책 담당부서 부서장의 내·외부 보직들과의 활동과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여성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어느 정도 전문성을 갖추었는가와 효율적 추진과의 관련성을 살펴 본 결과 상관계수가

.247, 유의도는 .000으로 두 변수간의 관계가 유의미함을 보였다. 그리고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여성정책 관련 사업들을 독자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는 범위와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는 상관계수가 0.367, 유의도는 0.000이었다.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구성원간의 결속력과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는 상관계수가 .171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여성정책부서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부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 조직들과의 활동에 어느 정도로 적극적인가와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를 살펴 본 결과 상관계수가 .351 유의도는 .000으로 부서장이 내·외부 조직들과의 활동에 적극적일수록 효율적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표 IV-39> 내적 요인과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의 여성정책 관련 전문성	.247 .000
여성정책의 독자적 수립·집행	.367 .000
구성원간의 결속력	.171 .001
부서장의 내·외부조직들과의 활동	.351 .000

p=0.01

다.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에 대한 외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

(1)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

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 정도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높은 편이 54.1%(아주 높음 11.8%, 높은 편 42.3%), 보통 32.4%, 낮은 편 13.1%(낮은 편 11.5%, 아주 낮은 편 1.6%)로 응답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성정책에 관

심을 보이고 있는 비율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시·군·구별로 살펴보면, 시의 경우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4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 23.6%, 아주 높은 편 16.4%, 낮은 편 10.0%, 무응답 0.9%, 아주 낮은 편 0%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높은 편이 39.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 32.7%, 낮은 편 15.7%, 아주 높은 편 9.2%, 아주 낮은 편 2.6%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시·군과 달리 보통이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높은 편 38.6%, 아주 높은 편 10.9%, 낮은 편 6.9%, 아주 낮은 편 2.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 정도에 있어 시가 군·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응답(아주 높은 편, 높은 편)이 높은 비율(65.5% : 49.1%·49.5%)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40>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아주 높음	18(16.4)	14(9.2)	11(10.9)	43(11.8)
높은 편	54(49.1)	61(39.9)	39(38.6)	154(42.3)
보통	26(23.6)	50(32.7)	42(41.6)	118(32.4)
낮은 편	11(10.0)	24(15.7)	7(6.9)	42(11.5)
아주 낮음	0(0.0)	4(2.6)	2(2.0)	6(1.6)
무응답	1(0.9)	0(0.0)	0(0.0)	1(0.3)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2) 여성단체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

여성단체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의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높은 편이 44.3%(아주 높음 8.0%, 높은 편 36.3%)로 낮은 편 14.0%(낮은 편 11.8%, 아주 낮음 2.2%)보다 응답비율이 높았다.

시의 경우 높은 편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보통 37.3%, 낮은 편 11.8%, 아주 높은 편 5.5%, 아주 낮은 편 0% 순으로 나

타났다. 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높은 편 38.6%, 낮은 편 9.8%, 아주 높은 편 8.5%, 아주 낮은 편 2.0%로 나타났다. 구의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46.5%로 군과 마찬가지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높은 편 23.8%, 낮은 편 14.9%, 아주 높은 편 9.9%, 아주 낮은 편 5.0%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적으로는 여성단체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의 정도에 대해 구의 응답 비율이 시와 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의 비율(19.9%: 11.8%: 11.8%)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IV-41> 여성단체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의 정도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아주 높음	6(5.5)	13(8.5)	10(9.9)	29(8.0)
높은 편	49(44.5)	59(38.6)	24(23.8)	132(36.3)
보 통	41(37.3)	63(41.2)	47(46.5)	151(41.5)
낮은 편	13(11.8)	15(9.8)	15(14.9)	43(11.8)
아주 낮음	0(0.0)	3(2.0)	5(5.0)	8(2.2)
무응답	1(0.9)	0(0.0)	0(0.0)	1(0.3)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3) 여성정책담당부서와 지역 여성단체와의 협조 유지

소속 부서가 지역 여성단체와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정도에 대해 묻는 질문에는 93.4%가 여성단체와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편(매우 그렇다 33.8%, 그런 편이다 59.6%)이라고 응답한 반면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1.9%(그렇지 못한 편이다 1.6%, 전혀 그렇지 못하다 0.3%)로 시군구 여성정책 담당부서는 지역 여성단체와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의 경우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52.7%로 가장 높았고,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41.8%로 매우 높았다. 그렇지 못한 편은 4.5%로 낮은 편이었고 전혀 그

렇지 못한 편이라는 응답은 없었다. 군의 경우에도 그런 편이라는 응답이 60.8%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그렇다는 응답도 35.3%로 높았다. 그렇지 못한 편은 3.3%, 전혀 그렇지 못한 편이라는 응답은 0.7%로 나타났다. 구의 경우에도 그런 편이 65.3%로 가장 높았으며,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2.8%의 비율로 나타나 다음으로 높았다. 그렇지 못한 편은 6.9%, 전혀 그렇지 못한 편은 5.0%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지역 여성단체와의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시·군의 경우에는 90%이상이었으며, 구의 경우에도 약 88%의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표 IV-42> 소속 부서의 지역 여성단체와의 협조관계 유지 정도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매우 그렇다	46(41.8)	54(35.3)	23(22.8)	123(33.8)
그런 편이다	58(52.7)	93(60.8)	66(65.3)	217(59.6)
그렇지 못한 편이다	5(4.5)	5(3.3)	7(6.9)	17(4.7)
전혀 그렇지 못하다	0(0.0)	1(0.7)	5(5.0)	6(1.6)
무응답	1(0.9)	0(0.0)	0(0.0)	1(0.3)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4)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영향력

여성정책관련 예산확보, 여성정책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영향력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전체적으로 영향력이 강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39.0%(아주 강함 4.4%, 강한 편 34.6%), 약한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0.4%로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여성정책을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는데 있어 자유롭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시의 경우 약한 편이 51.8%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강한 편 37.3%, 아주 강한 편 5.5%, 아주 약한 편 4.5% 순으로 나타났다. 군의 경우에 있어서는 약한 편이 4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

며, 다음으로 강한 편 36.6%, 아주 약한 편 7.8%, 아주 강한 편 5.2% 순으로 나타났다. 구의 경우는 시·군과 마찬가지로 약한 편이 60.4%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강한 편 28.7%, 아주 약한 편 8.9%, 아주 강한 편 2.0%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담당 부서의 영향력 정도는 구의 경우가 시·군의 경우에 비해 부정적인 응답(약한 편, 아주 약한 편) 비율(69.3% : 56.3%·57.5%)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3> 여성정책관련 예산확보, 여성정책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영향력 정도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아주 강함	6(5.5)	8(5.2)	2(2.0)	16(4.4)
강한 편	41(37.3)	56(36.6)	29(28.7)	126(34.6)
약한 편	57(51.8)	76(49.7)	61(60.4)	194(53.3)
아주 약함	5(4.5)	12(7.8)	9(8.9)	26(7.1)
무응답	1(0.9)	1(0.7)	0(0.0)	2(0.5)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5) 지역 대중매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

지역신문이나 방송(대중매체)이 지역여성들의 문제점이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어느 정도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적으로는 높은 편이 26.1%, 낮은 편이 10.8%, 보통이 52.7%였다. 시·군·구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시의 경우 높은 편이 29.1%, 낮은 편이 16.4%, 보통이 53.6%였다. 군은 높은 편이 24.2%, 보통 51.6%, 낮은 편 24.2%였다. 구의 경우는 높은 편이 25.8%, 낮은 편이 20.8%, 보통이 53.5%로 나타났다. 대체로 지역대중매체는 지역여성정책이나 여성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4> 지역 대중매체의 여성문제 및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 정도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아주 높음	3(2.7)	4(2.6)	1(1.0)	8(2.2)
높은 편	29(26.4)	33(21.6)	25(24.8)	87(23.9)
보통	59(53.6)	79(51.6)	54(53.5)	192(52.7)
낮은 편	17(15.5)	32(20.9)	21(20.8)	70(19.2)
아주 낮음	1(0.9)	5(3.3)	0(0.0)	6(1.6)
무응답	1(0.9)	0(0.0)	0(0.0)	1(0.3)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6) 각 주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지지도

각 주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지지도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지방자치 단체장과 여성단체의 경우 약간 높다는 응답이 각각 35.4%,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여성, 대중매체, 타 행정부서에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각각 54.7%, 57.4%, 43.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단체와 타 행정부서의 응답이 매우 부족의 경우 2.5% : 15.9%, 약간 부족의 경우 7.7% : 29.9%, 보통의 경우 31.6% : 43.7%, 약간 높음의 경우 41.5% : 9.6%, 매우 높음의 경우 16.5% : 0.5%로 매우 상반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지지도 정도가 지역여성의 여성정책에 대한 지지도 정도 보다 높다는 응답 비율이 50.5% : 30.2%로 나타났다.

지방자치 단체장의 경우 시에서 지지도 정도가 높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구·군에 비해 높게 나왔으며, 지역여성의 경우에는 구에서 지지도 정도가 부족하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표 IV-45> 각 주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지지도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지방자치단체장	매우 높음	22(20.0)	17(11.1)	16(15.8)	55(15.1)
	약간 높은 편	48(43.6)	52(34.0)	29(28.7)	129(35.4)
	보통	26(23.6)	60(39.2)	42(41.6)	128(35.2)
	약간 부족	12(10.9)	12(7.8)	10(9.9)	34(9.3)
	매우 부족	1(0.9)	12(7.8)	4(4.0)	17(4.7)
	무응답	1(0.9)	0(0.0)	0(0.0)	1(0.3)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지역여성	매우 높음	11(10.0)	6(3.9)	6(5.9)	23(6.3)
	약간 높은 편	25(22.7)	37(24.2)	25(24.8)	87(23.9)
	보통	63(57.3)	87(56.9)	49(48.5)	199(54.7)
	약간 부족	10(9.1)	13(8.5)	15(14.9)	38(10.4)
	매우 부족	0(0.0)	10(6.5)	6(5.9)	16(4.4)
	무응답	1(0.9)	0(0.0)	0(0.0)	1(0.3)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여성단체	매우 높음	20(18.2)	27(17.6)	13(12.9)	60(16.5)
	약간 높은 편	51(46.4)	59(38.6)	41(40.6)	151(41.5)
	보통	34(30.9)	51(33.3)	30(29.7)	115(31.6)
	약간 부족	4(3.6)	11(7.2)	13(12.9)	28(7.7)
	매우 부족	0(0.0)	5(3.3)	4(4.0)	9(2.5)
	무응답	1(0.9)	0(0.0)	0(0.0)	1(0.3)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대중매체	매우 높음	4(3.6)	3(2.0)	0(0.0)	7(1.9)
	약간 높은 편	24(21.8)	23(15.0)	22(21.8)	69(19.0)
	보통	65(59.1)	85(55.6)	59(58.4)	209(57.4)
	약간 부족	13(11.8)	37(24.2)	17(16.8)	67(18.4)
	매우 부족	3(2.7)	5(3.3)	3(3.0)	11(3.0)
	무응답	1(0.9)	0(0.0)	0(0.0)	1(0.3)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타 행정부서	매우 높음	1(0.9)	1(0.7)	0(0.0)	2(0.5)
	약간 높은 편	12(10.9)	14(9.2)	9(8.9)	35(9.6)
	보통	55(50.0)	61(39.9)	43(42.6)	159(43.7)
	약간 부족	30(27.3)	45(29.4)	34(33.7)	109(29.9)
	매우 부족	11(10.0)	32(20.9)	15(14.9)	58(15.9)
	무응답	1(0.9)	0(0.0)	0(0.0)	1(0.3)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다음으로 여러 주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지지도의 평균을 살펴보았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이 평균 3.46으로 나타나 여성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역여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3.16의 평균을 보였다. 여성단체 또한 3.16의 평균으로 나타났으며, 대중매체는 2.98, 타 행정부서는 2.48로 나타나 여성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낮았다.

<표 IV-46> 각 주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지지도 평균

(순위)

구분	평균	표준편차
(1) 지방자치단체장	3.46	1.026
(2) 지역여성	3.16	.878
(3) 여성단체	3.16	.951
(4) 대중매체	2.98	.773
(5) 타 행정부서	2.48	.901
1. 매우 부족 5.매우 높음		

(7) 각 주체가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각 주체 즉,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여성, 여성단체, 대중매체, 타 행정부서의 영향력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 먼저 시의 경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약간 높거나 매우 높다는 응답이 91.8%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여성단체가 영향력이 약간 높거나 매우 높다는 응답률의 77.3% 비율을 보이며 두 번째로 높게 나왔다. 대중매체는 62.7%, 지역여성은 59%로 나타났으며, 타 행정부서는 보통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에 많은 비율(45.5%)을 보여주었지만, 영향력이 매우 높다는 응답은 7.3%로 낮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군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매우 높다는 응답이 59.5%로 가장 높았으며 약간 높다는 응답도 20.9%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높은 비율은 여성단체로 30.7%가 매우 영향력이 높다고 답하였고, 약간 높은 편이라는 응답도 41.8%의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대중매체와 지역여성은 매우 높다는 응답은 각각 18.3%, 17.6%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보통이나 약간 높다는 응답에 많은 비중의 응답을 얻었다(각각의 보통이라는 응답은

39.2%, 41.2%이고, 약간 높다는 응답은 33.3%, 41.8%임). 타 행정부서 또한 보통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이 47.1%를 차지하고 있으나, 영향력이 매우 높다는 응답은 10.5%의 낮은 비율로 그쳤다.

<표 IV-47> 각 주체의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정도

(단위: 명, %)

	구분	시	군	구	전체
지방자치단체장	매우 높음	68(61.8)	91(59.5)	51(50.5)	210(57.7)
	약간 높은 편	33(30.0)	32(20.9)	40(39.6)	105(28.8)
	보통	7(6.4)	26(17.0)	8(7.9)	41(11.3)
	약간 작은 편	2(1.8)	2(1.3)	0(0.0)	4(1.1)
	매우 작음	0(0.0)	2(1.3)	2(2.0)	4(1.1)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지역여성	매우 높음	27(24.5)	27(17.6)	12(11.9)	134(36.8)
	약간 높은 편	38(34.5)	54(35.3)	42(41.6)	134(36.8)
	보통	37(33.6)	63(41.2)	38(37.6)	138(37.9)
	약간 작은 편	8(7.3)	4(2.6)	7(6.9)	19(5.2)
	매우 작음	0(0.0)	5(3.3)	2(1.3)	7(1.9)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여성단체	매우 높음	44(40.0)	47(30.7)	21(20.8)	112(30.8)
	약간 높은 편	41(37.3)	64(41.8)	44(43.6)	149(40.9)
	보통	20(18.2)	35(22.9)	29(28.7)	84(23.1)
	약간 작은 편	4(3.6)	3(2.0)	4(4.0)	11(3.0)
	매우 작음	1(0.9)	4(2.6)	3(3.0)	8(2.2)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대중매체	매우 높음	32(29.1)	28(18.3)	14(13.9)	74(20.3)
	약간 높은 편	37(33.6)	51(33.3)	53(52.5)	141(38.7)
	보통	31(28.2)	60(39.2)	26(25.7)	117(32.1)
	약간 작은 편	9(8.2)	10(6.5)	6(5.9)	25(6.9)
	매우 작음	0(0.0)	4(2.6)	2(2.0)	6(1.6)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타 행정부서	매우 높음	8(7.3)	16(10.5)	6(5.9)	30(8.2)
	약간 높은 편	34(30.9)	33(21.6)	17(16.8)	84(23.1)
	보통	50(45.5)	72(47.1)	55(54.5)	177(48.6)
	약간 작은 편	14(12.7)	22(14.4)	15(14.9)	51(14.0)
	매우 작음	4(3.6)	10(6.5)	8(7.9)	20(6.0)
	계	110(100.0)	153(100.0)	101(100.0)	364(100.0)

구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력이 매우 높음에 50.5%의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으며, 약간 높은 편이라는 응답도 39.6%로 높게 나타났다. 여성단체와 대중매체는 약간 높은 편 혹은 매우 높다는 응답이 각각 64.4%, 66.4%의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지역여성은 53.5%로 나타났다. 또한 타 행정부서는 보통이라는 응답이 54.5%로 높은 반면, 영향력이 매우 높다는 응답은 5.9%의 낮은 비율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러 주체들이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을 응답에 대한 평균을 통하여 순서대로 살펴보았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장이 평균 4.41로 나타나, 여성정책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단체가 평균 3.95로 나타났으며, 3위로는 평균 3.68의 대중매체로 나타났다. 3위와 비슷한 평균인 3.64를 보여준 지역여성이 4위를 차지하여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보여 지고 있으며, 타 행정부서 또한 3.13의 평균으로 나타나 여성정책에 가장 영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48> 각 주체의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력 순위

(순위)

구분	평균	표준편차
(1) 지방자치단체장	4.41	.830
(2) 여성단체	3.95	.936
(3) 대중매체	3.68	.946
(4) 지역여성	3.64	.912
(5) 타 행정부서	3.13	.978
1. 매우 부족 5.매우 높음		

(8) 각 주체의 지지도와 영향력의 비교

다음으로 각 주체의 여성정책에 미치는 지지도와 영향력을 비교하여 보았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영향력은 물론, 지지도도 가장 높게 나왔다. 여성단체의 경우 영향력은 2위로 나타났으나, 지지도는 3위에 머물렀다. 대중매체는 영향

력이 3위로 나타났으며, 지지도는 4위로 영향력보다 낮게 나타났다. 지역여성의 경우 영향력은 4위로 낮았으나, 지지도는 2위를 차지하여 높게 나타났다. 타 행정부서의 경우 영향력도 낮게 나타났고, 지지도 또한 낮았다.

<표 IV-49> 각 주체의 여성정책에 미치는 지지도와 영향력 비교

구분	영향력 순위	지지도 순위
지방자치단체장	1	1
여성단체	2	3
대중매체	3	4
지역여성	4	2
타 행정부서	5	5

(9)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 분석

다음은 여성정책수행과 관련하여 내·외적 영향요인과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을 살펴본 결과 상관계수는 .5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유의도는 .000으로 두 변수간의 관계가 유의미함을 보였다. 그리고 지역여성과 여성정책수행의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는 상관계수가 0.340, 유의도는 0.000이었다. 여성정책과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는 상관계수가 .333, 유의도는 .000으로 나타났다. 대중매체와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는 유의도 .276으로 외부적 영향요인 중 가장 낮은 상관계수를 보여주었다. 타 행정부서와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는 상관계수 .319, 유의도 .000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여성정책수행의 효율적 추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50> 외부적 영향요인과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

구분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	.503 .000
지역여성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	.340 .000
여성단체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	.333 .000
대중매체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	.276 .000
타 행정부서의 관심	.319 .000

p=0.01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종합적 분석

1. 여성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성	111
2. 여성정책 추진 영향요인 간의 영향력 순위	113
3. 여성정책 추진시 겪는 문제의 심각성	114
4. 여성정책 담당부서 역량 강화요인	118



1. 여성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성

여기에서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내·외부영향요인들에 대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여성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요인들의 중요성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 모든 항목에서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전체적으로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8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예산 및 인력규모 75.0%, 부서장의 관심과 지지 72.0%, 부서장의 리더십 56.0%, 지역 여성들의 지지와 관심 55.8%, 외부단체들의 지지 53.6%, 담당 부서의 법적·공식적인 권한 46.4%, 관할 업무의 전문성 45.1%, 부서 내부의 응집성 37.9%, 유관 부서들의 협조 33.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의 경우는 모든 항목에서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평균 응답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구의 경우는 관할 업무의 전문성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평균 응답 보다 낮게 나와 대조를 이루었다. 시의 경우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에 91.8%의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예산 및 인력규모라는 응답이 82.7%의 비율로 나타났다. 또한 부서장의 지지 및 관심 그리고 부서장의 리더십도 각각 78.2%, 61.8%로 나타났으며, 외부단체의 지지에도 60%의 비율을 보여주었다. 지역여성들의 관심과 지지에는 56.4%의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또한 담당부서의 법적·공식적 권한은 50.9%, 관할업무의 전문성에는 48.2%, 부서 내부의 응집성은 39.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관부서의 협조가 34.5%로 가장 낮았다.

다음으로 군의 경우를 살펴보고자 한다. 군에서도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에 85.6%의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다음으로 예산 및 인력규모라는 응답이 74.5%의 비율로 나타났다. 부서장의 의지 및 관심은 71.9%로 나타났다.

<표 V-1> 여성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성 정도

(단위: 명, %)

구분		무응답	전혀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편	보통	약간중요	매우중요	전체
예산 및 인력 규모	시	0(0.0)	0(0.0)	0(0.0)	5(4.5)	14(12.7)	91(82.7)	110(100.0)
	군	1(0.7)	0(0.0)	0(0.0)	15(9.8)	23(15.0)	114(74.5)	153(100.0)
	구	1(1.0)	0(0.0)	0(0.0)	6(5.9)	26(25.7)	68(67.3)	101(100.0)
	계	2(0.5)	0(0.0)	0(0.0)	26(7.1)	63(17.3)	273(75.0)	364(100.0)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	시	0(0.0)	0(0.0)	0(0.0)	3(2.7)	6(5.5)	101(91.8)	110(100.0)
	군	0(0.0)	0(0.0)	1(0.7)	6(3.9)	15(9.8)	131(85.6)	153(100.0)
	구	1(1.0)	0(0.0)	0(0.0)	3(3.0)	13(12.9)	84(83.2)	101(100.0)
	계	1(0.3)	0(0.0)	1(0.3)	12(3.3)	34(9.3)	316(86.8)	364(100.0)
부서장의 관심과 지지	시	0(0.0)	0(0.0)	0(0.0)	4(3.6)	20(18.2)	86(78.2)	110(100.0)
	군	0(0.0)	0(0.0)	0(0.0)	7(4.6)	36(23.5)	110(71.9)	153(100.0)
	구	1(1.0)	0(0.0)	0(0.0)	3(3.0)	31(30.7)	66(65.3)	101(100.0)
	계	1(0.3)	0(0.0)	0(0.0)	14(3.8)	87(23.9)	262(72.0)	364(100.0)
담당부서의 법적·공식 적 권한	시	0(0.0)	0(0.0)	0(0.0)	14(12.7)	40(36.4)	56(50.9)	110(100.0)
	군	1(0.7)	1(0.7)	4(2.6)	20(13.1)	59(38.6)	68(44.4)	153(100.0)
	구	1(1.0)	0(0.0)	0(0.0)	20(19.8)	35(34.7)	45(44.6)	101(100.0)
	계	2(0.5)	1(0.3)	4(1.1)	54(14.8)	134(36.8)	169(46.4)	364(100.0)
지역여성들 의 지지와 관심	시	1(0.9)	0(0.0)	0(0.0)	10(9.1)	37(33.6)	62(56.4)	110(100.0)
	군	1(0.7)	1(0.7)	1(0.7)	15(9.8)	43(28.1)	92(60.1)	153(100.0)
	구	1(1.0)	0(0.0)	0(0.0)	11(10.9)	40(39.6)	49(48.5)	101(100.0)
	계	3(0.8)	1(0.3)	1(0.3)	36(9.9)	120(33.0)	203(55.8)	364(100.0)
부서장의 리더십	시	0(0.0)	0(0.0)	0(0.0)	7(6.4)	35(31.8)	68(61.8)	110(100.0)
	군	0(0.0)	0(0.0)	0(0.0)	13(8.5)	51(33.3)	89(58.2)	153(100.0)
	구	1(1.0)	0(0.0)	1(1.0)	14(13.9)	38(37.6)	47(46.5)	101(100.0)
	계	1(0.3)	0(0.0)	1(0.3)	34(9.3)	124(34.1)	204(56.0)	364(100.0)
관할업무의 전문성	시	0(0.0)	0(0.0)	0(0.0)	17(15.5)	40(36.4)	53(48.2)	110(100.0)
	군	0(0.0)	1(0.7)	1(0.7)	22(14.4)	64(41.8)	65(42.5)	153(100.0)
	구	1(1.0)	0(0.0)	1(1.0)	12(11.9)	41(40.6)	46(45.5)	101(100.0)
	계	1(0.3)	1(0.3)	2(0.5)	51(14.0)	145(39.8)	164(45.1)	364(100.0)
유관부서들 의 협조	시	0(0.0)	0(0.0)	1(0.9)	21(19.1)	50(45.5)	38(34.5)	110(100.0)
	군	0(0.0)	0(0.0)	2(1.3)	34(22.2)	63(41.2)	54(35.3)	153(100.0)
	구	1(1.0)	0(0.0)	1(1.0)	16(15.8)	54(53.5)	29(28.7)	101(100.0)
	계	1(0.3)	0(0.0)	4(1.1)	71(19.5)	167(45.9)	121(33.2)	364(100.0)
부서내부의 응집성	시	1(0.9)	0(0.0)	1(0.9)	19(17.3)	46(41.8)	43(39.1)	110(100.0)
	군	0(0.0)	0(0.0)	1(0.7)	43(28.1)	46(30.1)	63(41.2)	153(100.0)
	구	1(1.0)	0(0.0)	1(1.0)	22(21.8)	45(44.6)	32(31.7)	101(100.0)
	계	2(0.5)	0(0.0)	3(0.8)	84(23.1)	137(37.6)	138(37.9)	364(100.0)
외부단체들 의 지지	시	0(0.0)	0(0.0)	0(0.0)	14(12.7)	30(27.3)	66(60.0)	110(100.0)
	군	0(0.0)	0(0.0)	0(0.0)	19(12.4)	52(34.0)	82(53.6)	153(100.0)
	구	1(1.0)	0(0.0)	2(2.0)	16(15.8)	35(34.7)	47(46.5)	101(100.0)
	계	1(0.3)	0(0.0)	2(0.5)	49(13.5)	117(32.1)	195(53.6)	364(100.0)

지역여성들의 관심과 지지에는 60.1%의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부서장의 리더십은 58.2%의 응답률로 나타났으며, 외부단체의 지지에도 53.6%의 비율을 보여주었다. 담당부서의 법적·공식적 권한은 44.4%, 관할업무의 전문성에는 42.5%, 부서 내부의 응집성은 41.2%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유관부서의 협조가 35.3%로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구의 경우에도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가 83.2%의 높은 비율을 보여주면서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꼽혔다. 다음으로 예산 및 인력규모라는 응답이 67.3%의 비율로 높게 나타났다. 부서장의 지지 및 관심은 65.3%로 나타났다. 지역여성들의 관심과 지지에는 48.5%의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부서장의 리더십, 유관부서의 협조, 외부단체의 지지가 46.5%의 같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관할업무의 전문성에는 45.5%, 담당부서의 법적·공식적 권한은 44.6%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서 내부의 응집성이 31.7%로 가장 낮았다.

2. 여성정책 추진 영향요인 간의 영향력 순위

다음으로 여성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순위를 살펴보았다.

여성정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평균을 내어 순위를 살펴본 결과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가 평균 4.82로 가장 높았으며, .535의 표준편차를 보였다. 또한 부서장의 관심과 지지는 평균 4.67에 .595의 표준편차를 보이며 영향력 순위의 2위로 나타나, 단체장 및 부서장의 관심과 지지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3위로는 평균 4.66, 표준편차 .692의 예산 및 인력규모로 나타났으며, 4위로는 평균 4.45, 표준편차 .712로 나타난 부서장의 리더십이었다. 여성정책에 대한 지역여성들과 여성단체 등 외부단체들의 지지와 관심이 앞서 단체장이나 부서장 관심과 지지에 이어서 각각 5위와 6위로 나타났다. 5위로 나타난 지역여성들의 지지와 관심은 평균 4.41, 표준편차 .810을 보였고, 6위로 나타난 외부단체들의 관심과 지지는 평균 4.37, 표준편차 .771을 보여, 여성정책수행에 단체장, 부서장은 물론 지역 여성들과 외부단체들의 관심 및 지지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관할업무의 전문성을 영향

력으로 꼽았는데, 평균 4.28, 표준편차 .777을 보여주었다. 8위로는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법적·공식적 권한으로 평균 4.26, 표준편차 .838로 나타났다. 9위로는 부서 내부의 응집성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4.11, 표준편차 .849로 나타났으며, 마지막으로 유관부서들의 협조가 4.10, 표준편차 .779로 나타나 부서 내부의 응집성과 유관부서들의 협조가 여성정책수행에 가장 적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으로 나타났다.

<표 V-2> 여성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력 순위
(순위)

구분	평균	표준편차
(1)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	4.82	.535
(2) 부서장의 관심과 지지	4.67	.595
(3) 예산 및 인력규모	4.66	.692
(4) 부서장의 리더십	4.45	.712
(5) 여성정책에 대한 지역 여성들의 지지와 관심	4.41	.810
(6) 여성단체 등 외부단체들의 관심과 지지	4.38	.771
(7) 관할업무의 전문성	4.28	.777
(8)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법적·공식적 권한	4.26	.838
(9) 부서내부의 응집성	4.11	.849
(10) 유관부서들의 협조	4.10	.779
1. 전혀 중요하지 않음 5.매우 중요함		

3. 여성정책 추진시 겪는 문제의 심각성

여성정책 담당 부서가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겪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 먼저 시의 경우 담당부서의 법적·공식적 권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보통이 53.6%, 약간 심각이 26.4%로 나타났다. 예산 및 인력규모는 보통이 32.7%, 약간 심각하다는 응답이 40%로 나타나 심각성의 정도가 낮게 나타났다. 심각성을 보통이나 심각하

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을 높은 순 대로 살펴보면, 지역여성들의 지지와 관심이 보통 이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률을 약 75%정도의 비율로 보여주고 있으며,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에 대한 응답률은 보통이 39.1%, 심각하지 않은 편이 33.6%로 나타났다. 이어서 관할업무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통이 45.5%, 심각하지 않은 편이 38.2%로 나타났다. 부서 내부의 응집성에 대해서는 보통이 43.6%, 심각하지 않은 편이 38.2%로 나타났다. 부서장의 리더십은 보통이 46.4%, 심각하지 않은 편이 33.6%의 응답률을 보였다. 부서장의 관심과 지지는 보통이 42.7%, 심각하지 않은 편이 24.5%로 나타났으며, 유관 부서들의 협조에 대한 응답률은 보통이 40.9%, 심각하지 않은 편이 30%로 나타났다. 외부단체들의 지지에 대해서는 보통이 33.6%, 심각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40%로 나타났다.

군의 경우 예산 및 인력규모는 보통이 30.7%, 약간 심각하다는 응답이 39.2%, 지역여성들의 지지와 관심이 보통 이상으로 문제의 심각성을 가지고 있다는 응답률을 보통은 44.4%, 약간 심각이 24.8%로 나타났으며, 담당부서의 법적·공식적 권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보통이 46.4%, 약간 심각이 21.6%로 나타나 심각성의 정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보통이나 심각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률을 높은 순 대로 살펴보면, 부서 내부의 응집성에 대해서는 보통이 44.4%, 심각하지 않은 편이 37.9%로 나타났다. 관할업무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통이 47.1%, 심각하지 않은 편이 30.7%로 나타났다. 부서장의 리더십은 보통이 40.5%, 심각하지 않은 편이 35.3%의 응답률을 보였다. 외부단체들의 지지에 대해서는 보통이 43.8%, 심각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28.8%로 나타났다. 유관 부서들의 협조에 대한 응답률은 보통이 49.7%, 심각하지 않은 편이 21.6%로 나타났다. 부서장의 관심과 지지는 보통이 39.2%, 심각하지 않은 편이 29.4%로 나타났으며,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에 대한 응답률은 보통이 36.6%, 심각하지 않은 편이 26.8%로 나타났다.

구의 경우 유관 부서들의 협조에 대한 응답률은 보통이 48.5%, 약간 심각이 25.7%로 나타났다. 지역여성들의 지지와 관심에 대한 응답률은 보통이 56.4%, 약간 심각이 20.8%로 나타났으며, 예산 및 인력규모는 보통이 39.6%, 약간 심각이라는 응답이 37.6%이었다. 담당부서의 법적·공식적 권한에 대한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보통이 46.5%, 약간 심각이 21.8%로 군과 비슷하게 나타났다.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에 대한 응답률은 보통이 50.5%, 약간 심각이 16.8%로 나타나 심각성의 정도가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심각성의 정도에 대해 보통이나 심각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을 한 순으로 살펴보면, 부서 내부의 응집성에 대해서는 보통이 45.5%, 심각하지 않은 편이 31.7%로 나타났다. 외부단체들의 지지에 대해서는 보통이 51.5%, 심각하지 않은 편이라는 응답이 19.8%로 나타났다. 부서장의 리더십은 보통이 43.6%, 심각하지 않은 편이 29.7%의 응답률을 보였다. 관할업무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보통이 43.6%, 심각하지 않은 편이 26.7%로 나타났다. 부서장의 관심과 지지는 보통이 49.5%, 심각하지 않은 편이 20.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순위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 것은 예산 및 인력규모의 부족이었다. 이에 대한 평균은 2.25, 표준편차는 .889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예산 및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다음으로는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법적·공식적인 권한의 부재로 나타났으며, 평균 2.68, 표준편차 .946을 보이고 있다.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지위 및 권한 확보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3위로는 평균 2.91, 표준편차 .876의 여성정책에 대한 지역여성들의 관심과 지지부족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유관부서들의 협조 부족도 지역여성들의 관심과 지지부족과 같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5위로는 평균 3.09, 표준편차 1.075로 나타난 여성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의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이어서 6위로 평균 3.21, 표준편차 .974로 나타난 여성단체 등 외부단체들의 관심과 지지부족으로 나타나, 여성정책에 대한 외부단체들의 관심과 지지는 물론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가 요구되고 있다. 다음으로 부서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 부족이 평균 3.22, 표준편차 1.007로 나타나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보다는 덜 심각하게 나타났다. 8위로는 평균 3.18, 표준편차 .891을 보여주고 있는 기관업무의 전문성 부족으로 나타났으며, 9위로는 평균 3.36, 표준편차 .959를 보이고 있는 부서장의 리더십 부족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부서내부의 응집성 부족이 평균 3.38, 표준편차 .875로 나타나 심각성의 순위에서 가장 낮았다.

<표 V-3> 여성정책 수행시 겪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정도

(단위: 명, %)

구분		무응답	매우 심각함	약간 심각함	보통	심각하지 않은 편	전혀 심각하지 않음	전체
예산 및 인력규모	시	1(0.9)	20(18.2)	44(40.0)	36(32.7)	7(6.4)	2(1.8)	110(100.0)
	군	1(0.7)	33(21.6)	60(39.2)	47(30.7)	12(7.8)	0(0.0)	153(100.0)
	구	1(1.0)	20(19.8)	38(37.6)	40(39.6)	2(2.0)	0(0.0)	101(100.0)
	계	3(0.8)	73(20.1)	142(39.0)	123(33.8)	21(5.8)	2(0.5)	364(100.0)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	시	1(0.9)	3(2.7)	17(15.5)	43(39.1)	37(33.6)	9(8.2)	110(100.0)
	군	3(2.0)	13(8.5)	27(17.6)	56(36.6)	41(26.8)	13(8.5)	153(100.0)
	구	1(1.0)	8(7.9)	17(16.8)	51(50.5)	14(13.9)	10(9.9)	101(100.0)
	계	5(1.4)	24(6.6)	61(16.8)	150(41.2)	92(25.3)	32(8.8)	364(100.0)
부서장의 관심과 지지	시	0(0.0)	2(1.8)	14(12.7)	47(42.7)	38(34.5)	9(8.2)	110(100.0)
	군	0(0.0)	10(6.5)	19(12.4)	60(39.2)	45(29.4)	19(12.4)	153(100.0)
	구	2(2.0)	8(7.9)	14(13.9)	50(49.5)	21(20.8)	6(5.9)	101(100.0)
	계	2(0.5)	20(5.5)	47(12.9)	157(43.1)	104(28.6)	34(9.3)	364(100.0)
담당부서 의 법적·공 식적 권한	시	1(0.9)	10(9.1)	29(26.4)	59(53.6)	9(8.2)	2(1.8)	110(100.0)
	군	0(0.0)	19(12.4)	33(21.6)	71(46.4)	26(17.0)	4(2.6)	153(100.0)
	구	2(2.0)	14(13.9)	22(21.8)	47(46.5)	15(14.9)	1(1.0)	101(100.0)
	계	3(0.8)	43(11.8)	84(23.1)	177(48.6)	50(13.7)	7(1.9)	364(100.0)
지역여성 들의 지지와 관심	시	1(0.9)	3(2.7)	21(19.1)	60(54.5)	22(20.0)	3(2.7)	110(100.0)
	군	0(0.0)	7(4.6)	38(24.8)	68(44.4)	35(22.9)	5(3.3)	153(100.0)
	구	2(2.0)	6(5.9)	21(20.8)	57(56.4)	13(12.9)	2(2.0)	101(100.0)
	계	3(0.8)	16(4.4)	80(22.0)	185(50.8)	70(19.2)	10(2.7)	364(100.0)
부서장의 리더십	시	1(0.9)	1(0.9)	5(4.5)	51(46.4)	37(33.6)	15(13.6)	110(100.0)
	군	0(0.0)	5(3.3)	14(9.2)	62(40.5)	54(35.3)	18(11.8)	153(100.0)
	구	2(2.0)	6(5.9)	14(13.9)	44(43.6)	30(29.7)	5(5.0)	101(100.0)
	계	3(0.8)	12(3.3)	33(9.1)	157(43.1)	121(33.2)	38(10.4)	364(100.0)
관할업무 의 전문성	시	2(1.8)	3(2.7)	7(6.4)	50(45.5)	42(38.2)	6(5.5)	110(100.0)
	군	0(0.0)	3(2.0)	22(14.4)	72(47.1)	47(30.7)	9(5.9)	153(100.0)
	구	1(1.0)	4(4.0)	24(23.8)	44(43.6)	27(26.7)	1(1.0)	101(100.0)
	계	3(0.8)	10(2.7)	53(14.6)	166(45.6)	116(31.9)	16(4.4)	364(100.0)
유관부서 들의 협조	시	1(0.9)	6(5.5)	23(20.9)	45(40.9)	33(30.0)	2(1.8)	110(100.0)
	군	0(0.0)	12(7.8)	27(17.6)	76(49.7)	33(21.6)	5(3.3)	153(100.0)
	구	1(1.0)	7(6.9)	26(25.7)	49(48.5)	17(16.8)	1(1.0)	101(100.0)
	계	2(0.5)	25(6.9)	76(20.9)	170(46.7)	83(22.8)	8(2.2)	364(100.0)
부서내부 의 응집성	시	1(0.9)	2(1.8)	5(4.5)	48(43.6)	42(38.2)	12(10.9)	110(100.0)
	군	0(0.0)	2(1.3)	14(9.2)	68(44.4)	58(37.9)	11(7.2)	153(100.0)
	구	1(1.0)	4(4.0)	11(10.9)	46(45.5)	32(31.7)	7(6.9)	101(100.0)
	계	2(0.5)	8(2.2)	30(8.2)	162(44.5)	132(36.3)	30(8.2)	364(100.0)
외부단체 들의 지지	시	3(2.7)	1(0.9)	14(12.7)	37(33.6)	44(40.0)	11(10.0)	110(100.0)
	군	0(0.0)	5(3.3)	25(16.3)	67(43.8)	44(28.8)	12(7.8)	153(100.0)
	구	1(1.0)	5(5.0)	17(16.8)	52(51.5)	20(19.8)	6(5.9)	101(100.0)
	계	4(1.1)	11(3.0)	56(15.4)	156(42.9)	108(29.7)	29(8.0)	364(100.0)

<표 V-4> 여성정책 수행시 겪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 순위

(순위)

구분	평균	표준편차
(1) 예산 및 인력규모의 부족	2.25	.889
(2)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법적·공식적 권한 없음	2.68	.946
(3) 여성정책에 대한 지역여성들의 관심과 지지 부족	2.91	.876
(3) 유관부서들의 협조 부족	2.91	.918
(5) 여성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 부족	3.09	1.075
(6) 여성단체 등 외부단체들의 관심과 지지 부족	3.21	.974
(7) 부서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 부족	3.22	1.007
(8) 기관업무의 전문성 부족	3.18	.891
(9) 부서장의 리더십 부족	3.36	.959
(10) 부서내부의 응집성 부족	3.38	.875
1. 매우 심각함 5. 전혀 심각하지 않음		

4. 여성정책 담당부서 역량 강화요인

다음은 여성정책 담당 부서의 역량 강화에 가장 중요한 요인에 대한 우선 순위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반적으로 여성정책 담당 부서의 역량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서는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 항목이 1순위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근소한 차이로 예산 및 인력규모를 꼽았다. 2순위 역시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 항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예산 및 인력 규모가 꼽혀, 다른 항목에 비해 이 두 항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순위를 묻는 질문에서는 지역여성들의 지지와 관심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4·5순위에는 부서장의 리더십과 담당 부서의 전문성이 비슷한 빈도를 보였다. 6순위에는 유관 부서들의 지지가, 7·8 순위에는 부서 내부의 응집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먼저 시의 경우 예산 및 인력규모가 1순위라는 응답이 50%로 나타났다. 2순위로는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로 40%의 응답률을 보였다. 3순위로는 지역여성들의 관심과 지지로 28.2%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4순위로는 부서장의 리더십이 24.5%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5순위로는 담당부서의 전문성으로 24.5%의 응답률을 보였다. 6위로는 외부단체들의 지지로 24.5%의 비율을 보였다. 7순위로 부서 내부의 응집성이 35.6%, 마지막으로 유관부서들의 지지가 34.6%의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군의 경우에는 1순위로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에 51.6%의 응답률을 보였다. 다음 순으로 예산 및 인력규모에 36.6%의 비율로 나타났다. 3순위로는 지역여성들의 관심과 지지로 26.8%로 나타났다. 4순위로는 담당부서의 전문성으로 24.8%의 응답률을 보였다. 외부단체들의 지지는 5순위로 22.2%의 비율을 보여 주었고, 6순위로 19%의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7순위로 부서 내부의 응집성과 유관부서의 지지가 35.3%의 같은 비율을 보여주었고, 마지막 8순위로 유관부서의 지지로 34.6%의 응답률을 보였다.

구의 경우 1순위로 예산 및 인력규모에 48.5%의 비율로 나타났다. 2순위로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에 42.6%의 응답률을 보였다. 3순위로는 지역여성들의 관심과 지지로 20.8%로 나타났다. 4순위로는 부서장의 리더십으로 27.7%의 응답률을 보였다. 5순위로는 담당부서의 전문성으로 23.8%의 비율을 보여주었고, 6순위로는 부서 내부의 응집성이 21.8%의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7순위로 유관부서들의 지지라는 응답률로 34.7%의 비율을 보여주었고, 마지막 8순위로도 부서 내부의 응집성이 29.7%의 응답률을 보이며, 6위와 8위를 공유하였다.

<표 V-5>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역량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인

(단위: 명, %)

구분		무응답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7순위	8순위	전체
예산 및 인력규모	시	0(0.0)	55(50.0)	35(31.8)	10(9.1)	5(4.5)	1(0.9)	1(0.9)	3(2.7)	0(0.0)	110(100.0)
	군	1(0.7)	48(31.4)	56(36.6)	24(15.7)	13(8.5)	5(3.3)	4(2.6)	2(1.3)	0(0.0)	153(100.0)
	구	1(1.0)	49(48.5)	24(23.8)	10(9.9)	10(9.9)	2(2.0)	2(2.0)	3(3.0)	0(0.0)	101(100.0)
	계	2(0.5)	152(41.8)	115(31.6)	44(12.1)	28(7.7)	8(2.2)	7(1.9)	8(2.2)	0(0.0)	364(100.0)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	시	1(0.9)	45(40.9)	44(40.0)	10(9.1)	3(2.7)	5(4.5)	1(0.9)	1(0.9)	0(0.0)	110(100.0)
	군	3(2.0)	79(51.6)	44(28.8)	15(9.8)	5(3.3)	3(2.0)	2(1.3)	0(0.0)	2(1.3)	153(100.0)
	구	1(1.0)	34(33.7)	43(42.6)	11(10.9)	5(5.0)	3(3.0)	1(1.0)	1(1.0)	2(2.0)	101(100.0)
	계	5(1.4)	158(43.4)	131(36.0)	36(9.9)	13(3.6)	11(3.0)	5(1.4)	2(0.5)	4(1.1)	364(100.0)
지역여성들 의 지지와 관심	시	1(0.9)	4(3.6)	10(9.1)	31(28.2)	25(22.7)	18(16.4)	8(7.3)	2(1.8)	11(10.0)	110(100.0)
	군	5(3.3)	11(7.2)	21(13.7)	41(26.8)	29(19.0)	15(9.8)	17(11.1)	11(7.2)	3(2.0)	153(100.0)
	구	2(2.0)	10(9.9)	14(13.9)	21(20.8)	12(11.9)	20(19.8)	9(8.9)	6(5.9)	7(6.9)	101(100.0)
	계	8(2.2)	25(6.9)	45(12.4)	93(25.5)	66(18.1)	53(14.6)	34(9.3)	19(5.2)	21(5.8)	364(100.0)
부서장의 리더십	시	0(0.0)	1(0.9)	6(5.5)	25(22.7)	27(24.5)	26(23.6)	15(13.6)	7(6.4)	0(0.0)	110(100.0)
	군	4(2.6)	4(2.6)	16(10.5)	32(20.9)	33(21.6)	32(20.9)	20(13.1)	8(5.2)	4(2.6)	153(100.0)
	구	2(2.0)	1(1.0)	2(2.0)	20(19.8)	28(27.7)	19(18.8)	14(13.9)	11(10.9)	4(4.0)	101(100.0)
	계	6(1.6)	6(1.6)	24(6.6)	77(21.2)	88(24.2)	77(21.2)	49(13.5)	26(7.1)	11(3.0)	364(100.0)
담당부서의 전문성	시	1(0.9)	5(4.5)	11(10.0)	12(10.9)	23(20.9)	27(24.5)	15(13.6)	8(7.3)	8(7.3)	110(100.0)
	군	4(2.6)	7(4.6)	8(5.2)	20(13.1)	38(24.8)	33(21.6)	25(16.3)	12(7.8)	6(3.9)	153(100.0)
	구	1(1.0)	3(3.0)	9(8.9)	13(12.9)	26(25.7)	24(23.8)	16(15.8)	4(4.0)	5(5.0)	101(100.0)
	계	6(1.6)	15(4.1)	28(7.7)	45(12.4)	87(23.9)	84(23.1)	56(15.4)	24(6.6)	19(5.2)	364(100.0)
유관부서들 의 지지	시	0(0.0)	3(2.7)	1(0.9)	3(2.7)	12(10.9)	5(4.5)	26(23.6)	32(29.1)	28(25.5)	110(100.0)
	군	6(3.9)	1(0.7)	1(0.7)	4(2.6)	4(2.6)	15(9.8)	28(18.3)	41(26.8)	53(34.6)	153(100.0)
	구	2(2.0)	0(0.0)	1(1.0)	8(7.9)	2(2.0)	6(5.9)	21(20.8)	35(34.7)	26(25.7)	101(100.0)
	계	8(2.2)	4(1.1)	3(0.8)	15(4.1)	18(4.9)	26(7.1)	75(20.6)	108(29.7)	107(29.4)	364(100.0)
부서내부의 응집성	시	3(2.7)	0(0.0)	1(0.9)	2(1.8)	3(2.7)	12(10.9)	14(12.7)	39(35.5)	36(32.7)	110(100.0)
	군	6(3.9)	0(0.0)	0(0.0)	1(0.7)	5(3.3)	11(7.2)	23(15.0)	54(35.3)	53(34.6)	153(100.0)
	구	2(2.0)	0(0.0)	0(0.0)	2(2.0)	3(3.0)	15(14.9)	22(21.8)	27(26.7)	30(29.7)	101(100.0)
	계	11(3.0)	0(0.0)	1(0.3)	5(1.4)	11(3.0)	38(10.4)	59(16.2)	120(33.0)	119(32.7)	364(100.0)
외부단체들 의 지지	시	3(2.7)	1(0.9)	3(2.7)	17(15.5)	11(10.0)	15(13.6)	27(24.5)	16(14.5)	17(15.5)	110(100.0)
	군	5(3.3)	1(0.7)	5(3.3)	12(7.8)	22(14.4)	34(22.2)	29(19.0)	19(12.4)	26(17.0)	153(100.0)
	구	2(2.0)	3(3.0)	6(5.9)	15(14.9)	13(12.9)	10(9.9)	14(13.9)	12(11.9)	26(25.7)	101(100.0)
	계	10(2.7)	5(1.4)	14(3.8)	44(12.1)	46(12.6)	59(16.2)	70(19.2)	47(12.9)	69(19.0)	364(100.0)

한편, 시와 구의 경우에는 예산 및 인력규모를 1순위라고 응답한 비율이 50.0%, 48.5%로 가장 높았으나, 군의 경우에는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가 1순위라는 응답이 51.6%로 가장 높았다. 또한 외부 단체들의 지지 항목은 시의

경우 6순위라는 응답이 24.5%, 군의 경우 5순위라는 응답이 22.2%, 구의 경우 8순위라는 응답이 25.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등 우선순위는 시·군·구에서 다소간의 차이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다음은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역량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 순위를 살펴본 것이다.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역량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힌 1 순위는 전체 43.1%의 빈도를 보여주고 있는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였다. 다음으로 41.8%의 1순위와 비슷하게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는 예산 및 인력규모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 그리고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예산 및 인력규모가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역량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3위로는 지역여성들의 관심과 지지로 6.9%를 보였고, 4위로는 담당부서 업무의 전문성이 4.1%로 나타났다. 부서장의 리더십, 여성단체 등 외부단체들의 지지, 유관부서들의 협조는 각각 1.6%, 1.4%, 1.1%의 낮은 빈도로 나타났으며, 부서내부의 응집성을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역량 향상을 위한 요소로 선택한 사람은 없었다.

<표 V-6>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역량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인 순위

(단위: 명, %)

구분	빈도
(1)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	157(43.1)
(2) 예산 및 인력 규모	152(41.8)
(3) 지역여성들의 관심과 지지	25(6.9)
(4) 담당부서 업무의 전문성	15(4.1)
(5) 부서장의 리더십	6(1.6)
(6) 여성단체 등 외부단체들의 지지	5(1.4)
(7) 유관부서들의 협조	4(1.1)
(8) 부서내부의 응집성	0(0.0)
계	364(100.0)

VI



결론

1. 요약	125
2. 정책적 제언	131
3. 향후 과제	142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중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3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기반체계로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전담조직 설치, 여성발전기본조례 제정, 여성발전기금 조성, 여성발전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는지 여부가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두 번째는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적 요인에 관한 내용으로, 여성정책담당부서의 독자적 영역, 여성정책 업무 수행시의 헌신도, 여성정책 담당부서 구성원간의 결속력, 여성정책 담당 부서장의 적극적 리더십의 정도는 어느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세 번째는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에 대한 외부적 요인에 대한 인식으로 지방자치단체장, 지역 여성단체, 지역 대중매체들이 갖는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요인들이 여성정책을 효율적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또한 각 주체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지지도와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였다. 아울러 기반체계와 내부적 요인, 외부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할 시 여성정책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중요성과 향후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역량을 강화하기 요인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으며 그 내용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앞에서 여성정책추진체계의 분석변수로 전담조직, 여성발전기본조례, 자치단체내의 정책우선순위 차원의 지위, 중장기발전계획 유무, 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위원회, 여성정책의 기여도 등을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전담조직의 유무는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상관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담조직이 있을 경우가 전담조직이 없을 경우보다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응답비율이 높았다.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전체 조사응답자의 68.7%가,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응답자집단에서는 87.1%가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한다는 인식하고 있었으나 기초자치단체 중 여성발전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경우는 37.6%로 그다지 높지 않았다.

여성정책이 소속 시군구에서 중요한 행정목표로 설정되어 있는 곳은 54.9%였다. 여성정책을 중요한 행정목표로 설정할 경우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86.5%로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게 나타났다.

시·군·구의 여성정책은 현재 여성의 평생교육참여 여건강화 또는 여성의 문화활동참여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향후에 중점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으로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현재의 정책수행과 향후 방향은 차이를 보였다.

시·군·구는 여성정책에 대하여 중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하는 비율은 39.3%였고, 당해연도 계획만을 갖고 있는 경우는 49.2%, 계획이 없는 경우도 10.4%로 나타났다. 중장기발전계획유무와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은 상관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성정책 중장기발전계획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중장기발전계획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150% 내지 200%의 인력 및 예산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인력 및 예산의 부족은 심각하다.

여성발전기금은 일반예산과는 달리 특화된 사업실행, 창의성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여성발전기금이 이미 조성된 비율은 17.6%이고, 43.7%는 조성중이라고 응답하였다.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중인 여성발전기금을 현재 활용하는 비율은 25.0%로 여성발전기금의 활용은 미약하다.

여성발전위원회는 여성정책추진의 방향 및 정책개발자문, 여성정책에 대한 사업심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평가하였는데,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된 비율은 28.1%에 불과하다.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된 경우 연중 개최빈도로서 가장 많은 것은 1-2회로 66.0%를 차지한다. 여성발전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수용정도는 54.3%가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여성발전위원회의 의견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로는 예산의 부족과 인력의 부족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여성발전위원회가 여성정책추진의 방향 및 사업에 대한 건의를 한다 해도 예산

및 인력의 제약은 이를 수용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을 통해 여성의 삶의 질, 즉 남녀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복지증진의 목표달성을 어느 정도 하였다고 평가하는가에 대하여는 82.1%가 기여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시·군·구 여성정책담당공무원의 여성정책추진에 대한 효율성 평가는 69.1%가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응답은 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다는 응답과 무관하지 않다. 분석결과에서 효율적 추진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경우(교차분석결과에서 24명)에 95.9%가 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동의하고, 효율적 추진에 동의하는 편(교차분석결과에서 220명)에서 92.7%가 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응답하는 반면, 효율적 추진에 동의하지 않는 편(교차분석결과에서 98명)에서는 40.8%가 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지 않는 편이라는 부정적 의견이 나타났다. 효율적 추진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 의견(교차분석결과에서 11명)에서는 63.7%가 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부정적 의견을 제시하였다.

둘째, 내부적 영향요인으로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여성정책 관련 전문성과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여성정책 관련 사업들을 독자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는 범위, 그리고 여성정책 담당부서 구성원간의 결속력, 여성정책 담당부서 부서장의 내·외부 조직들과의 활동과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우선 여성정책 관련 전문성으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여성정책이 높은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로 인식하고 있었으나 자신이나 동료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하는 데는 부족하다고 인정하고 있었다.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이 갖는 전문성과 효율적 추진과의 관련성을 살펴 본 결과, 두 변수간의 관계가 유의미함을 보였다.

그리고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여성정책 관련 사업들을 독자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좁다(아주 좁은 편 18.7%, 좁은 편 44.8)라고 인식하는 비율이 63.5%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자신의 업무에 대해 갖는 독자적 영역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정책 담당

부서가 갖는 독자적 영역과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는 상관계수가 .367, 유의도는 0.000이었다.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구성원간의 결속력에 대한 응답은 긍정적인 응답비율(62.4%)이 부정적인 응답비율(2.7%)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도 상관계수가 .171로 낮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마지막으로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부서장이 여성정책부서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부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 조직들과의 활동에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노력하는가에 대한 인식은 노력하는 편(아주 많이 노력 12.0%, 노력하는 편 39.4%)이 노력하지 않는 편(노력하지 않는 편 10.6%, 전혀 노력하지 않는 2.5%)보다 월등히 높아 현재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 부서장들은 여성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외부조직들과의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전략으로 지지를 내어 내려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는 상관계수가 .351 유의도는 .000으로 부서장이 내·외부 조직들과의 활동에 적극적일수록 효율적 추진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셋째, 여성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외적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으로,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은 편(아주 높음 11.8%, 높은 편 42.3%)이 낮은 편(아주 낮음 1.6%, 낮은 편 11.5%)보다 응답비율이 높아 기초자치단체에서 단체장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가 아주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95.4%,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85.0%는 본인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편 있었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와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의 관계가 무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은 지역 여성단체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를 묻는 질문에서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4.3%(아주 높음 8.0%, 높은 편 36.3%)로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 14.0%(아주 낮음 2.2%, 낮은 편 11.8%)보다 월등히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아주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93.1%,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79.6%가 본인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편 있었다. 그러나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51.1%, 아주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62.5%는 본인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거나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또한 지역 여성단체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신문이나 대중매체가 지역여성들의 문제점이나 여성정책에 대해 갖는 관심은 높은 편이 26.1%(아주 높음 2.2%, 높은 편 23.9%)로 낮은 편 20.8%(아주 낮음 1.6%, 낮은 편 19.2%)보다 응답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2.7%로 특별히 여성문제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여성문제와 여성정책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음을 고려할 때, 대중매체나 지역지를 통한 홍보 및 정보전달을 통하여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킬 필요가 있겠다.

지역신문이나 대중매체가 지역여성들의 문제나 여성정책에 관심이 아주 높다고 응답한 비율의 75.0%, 높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85.1%는 본인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거나 동의하는 편 있었다. 그러나 관심이 낮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의 45.7%는 본인이 속한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하였고, 아주 낮음이라고 응답한 비율 전체는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여성, 지역 여성단체, 대중매체, 타 행정부서의 여성정책에 대한 지지도 중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지도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지역여성, 여성단체, 대중매체, 타 행정부서의 순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각 주체들이 여성정책에 대해 미치는 영향력의 순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크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여성단체, 대중매체, 지역여성, 타 행정부서의 순위였다. 각 주체의 여성정책에 미치는 지지도와 영향력을 서로 비교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영향력은 물론 여성정책에 대한 지지도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성단체의 경우는 영향력은 2위였으나 지지도는 3위였다. 대중매체는 영향력은 3위였으나 지지도는 4위로 영향력보다 낮게 나타났다.

다. 지역여성은 영향력은 4위였으나 지지도는 2위로 지역 여성문제나 여성정책에 대한 지역여성들의 관심은 매우 크다고 생각되나 이러한 관심을 행정기관의 정책으로 반영시킬 수 있는 영향은 미약함을 알 수 있다. 타 행정부서의 경우는 영향력도 낮고 지지도도 낮게 나타났다.

여성정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적 영향요인들의 중요성에 대해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한 결과,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하다는 응답비율이 86.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예산 및 인력규모 75.0%, 부서장의 관심과 지지 72.0%, 부서장의 리더십 56.0%, 지역 여성들의 지지와 관심 55.8%, 외부단체들의 지지 53.6%, 담당 부서의 법적·공식적인 권한 46.4%, 관할 업무의 전문성 45.1%, 부서 내부의 응집성 37.9%, 유관 부서들의 협조 33.2% 순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지지가 중요함은 기존 연구 결과(한국여성개발원, 2000)와 일치하며 예산 및 인력, 부서장의 관심과 지지도에 대한 중요성도 기존 연구(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2002)에서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현 행정체제 내에서 여성업무가 여러 부서에 걸쳐 있어 부서간의 협조와 조정이 중요함에도 중요성에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함을 볼 때 그 보다는 여성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인력이나 예산 등 기반체제 구축과 단체장과 부서장의 적극적인 여성정책 수행의지가 우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현재 안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위를 순위별로 살펴보면,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 것은 예산 및 인력규모의 부족으로 이에 따른 예산 및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하겠다. 다음으로는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법적·공식적인 권한의 부재로 나타나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지위 및 권한 확보가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여성정책 담당 부서의 역량 향상에 가장 중요한 요소에 대한 우선순위를 묻는 질문에서는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예산 및 인력규모를 꼽았다. 2순위 역시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 항목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예산 및 인력 규모가 꼽혀, 다른 항목에 비해 이 두 항목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순위를 묻는 질문에서는 지역여성들의 지지와 관심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

며, 4·5순위에는 부서장의 리더십과 담당 부서의 전문성이 비슷한 빈도를 보였다. 6순위에는 유관 부서들의 지지가, 7·8순위에는 부서 내부의 응집성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면 아래와 같다.

2. 정책적 제언

가. 실효성 있는 여성정책 기반체계 구축

(1) 전담조직의 설치 및 인력·예산의 지원 증대

평등의 실현을 다루는 여성정책의 과제는 우리사회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규범의 근본적인 변화와 지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며 오랜 과정이 요구되는 대단히 정치적 과제이다. 때문에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필요로 한다.

여성정책전담기구가 시에서는 90%이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으나, 군에서는 70%정도가 전담기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정책전담기구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설치되도록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의회의원, 공무원은 의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여성문제가 정책으로 되기 위해서는 여성문제가 공적인 것으로 부각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지침이 정부기관에 의해 공식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여성정책은 헌법상 평등권명령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이 평등권은 우리사회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차원에서 어떻게 여성문제를 정치적 행위로 실행할 것이며, 어떻게 정치적 힘을 형성하며, 어떻게 여성을 위한 정책으로 수립할 것인가, 특히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성에 기인한 차별의 사회구조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여성정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지방정부내의 전담기구가 필요하다.

현행의 지방자치단체에 존재하는 여성 관련부서가 여성복지과나 사회복지과 등의 명칭으로 그 기능을 하는 경우 그 설치목적과 기능이 가족정책 중심이 될 수 있으며, 요보호여성 중심의 여성복지차원의 여성행정을 주로 담당할 우려가 높다. 특히 가족 정책 내에서 여성문제를 볼 때 여성의 가족 내에서의 역할이 강조됨으로 인하여 여성정책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를 수 있고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변화된 과제는 그 과제를 수행하는 조직의 효율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게 되며 과제에 적합한 조직이 필요하게 된다.

여성정책의 목표는 법적,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 문화적인 모든 측면이 관련되는 다측면성을 갖는 특징으로 나타나며, 이러한 여성문제에 대한 공공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과정으로서 의식화와 교육이 중요하며 이를 통하여 전통적사고와 편견의 변화, 그리고 심리적, 문화적 모순의 제거가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지방차원에서 국가정책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는 지방차원에서의 여성이익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정책 전담기구의 설치가 요망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여성정책전담기구의 설치에 이 기구를 통하여 지역차원에서 목표하는 가능한 여성발전을 위한 조치와 발전모델을 개발하고 사회구조의 변화의식을 주민과 근거리에서 고취하며, 법제도의 변화를 준비할 수 있고 이에 대한 새로운 틀도 마련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이며 능률적인 방법이 된다.

그리고 현재 여성정책관련 부서들은 인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예산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여성정책관련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70%이상이 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하여 인력의 문제는 심각하다고 진단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의 정책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의 사업에 대한 현실화는 필수적이다.

(2)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 여성발전계획 수립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여성발전 목표를 수립하고 이의 실행을 위해 지속적 노력을 하고 있는 자치단체는 39.3%로 나타났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발전을 중요한 행정목표로 삼는지를 인식하는 정도에서 절반

을 약간 웃도는 정도의 비율로 나타남으로써 여성정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우선순위에서 열세에 있는 곳이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방자치단체가 여성발전기본법에서 명시한 지방정부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 나가지 않음은 자치단체의 책임성의 문제로 이어진다. 여성은 사회변화에 적응하고자 하는 욕구와 노동력의 활용을 통한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욕구에 정부가 일정정도의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상 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여성정책이 수시로 바뀔 수 있어 사업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그나마 지역 여성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사업의 목적성 있는 추진과 사업효과 극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지속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상위기관과의 연계성을 유지하면서 그 지역의 실정에 맞는 여성정책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이행 점검은 자체평가 및 상위기관의 개별평가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지방자치단체별 여성발전기본조례의 구비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각 기초자치단체가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여성발전기본조례는 법령이 제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여성발전노력 규정을 현실화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여성지위향상을 위하여 비전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내의 관련조직과의 연계를 통해 어떠한 방법으로 여성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인지를 명문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있다는 응답이 40%에 미치지 못하는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지자체의 공무원이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는 응답이 높고, 여성발전기본조례가 여성정책추진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는 곳에서나 아닌 곳에서나 높게 나타남으로써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

여성발전기본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추진체계, 관련부서의 의무,

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위원회, 예산사용상의 고려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전반이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게 되는지를 규정하는 것이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 공무원, 의회의원이 중심이 되어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4) 여성발전기금조성 확대

여성발전기금은 특화된 사업이나 창의성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지원으로 그 기능을 할 것이라는 여성정책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성발전기금이 지역 여성정책의 추진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여성발전기금이 이미 조성되었거나 조성 중인 비율은 조상응답자의 61.3%를 차지한다. 시에서는 조성중이거나 조성된 비율이 91.8%를 차지하고, 군은 58.8%, 구는 31.7%를 차지함으로써 시군구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면에서 시가 공무원 스스로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여성발전기금도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단체활동을 활성화하거나 시의성 있는 사업개발, 민간과의 협력 등을 진작해나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5) 여성발전위원회 또는 여성위원회의 설치

여성발전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의 방향에 대한 의견교환 및 정책요구에 대한 대응성을 높일 수 있는 장치로서 여성주민대표, 전문가대표, 공무원, 의회의원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통로로서 기능한다.

여성발전위원회는 시에 가장 많은 비율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발전위원회가 여성정책추진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도 하다. 여성발전위원회의 제안사항이 다소는 현실적으

로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 있기는 하지만, 일년에 정기적으로 지역여성발전의 방향을 논의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여성정책이 공무원 단독의 정책집행이 아닌 지역민의 의견이 투영된 주민대응적 정책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발전)위원회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의 제약에서 여성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적인 정책개발을 위해서도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은 필요하다.

나. 기초자치단체장 대상 여성정책연찬회 개최

지방여성정책 수행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행위 주체로서, 단체장의 여성 문제에 대한 인식 및 지역여성발전을 도모하려는 의지가 지역여성의 지위 향상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 여성정책 추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단체장이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단체장의 남녀평등의식 및 여성정책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지역 여성정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매우 커다란 장애요인임을 알 수 있다. 곧 지방자치단체 특히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체장의 의지와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 남녀평등의식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여성정책에 대한 이해와 남녀평등의식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 및 관련 연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 연구결과(한국여성개발원, 2000)에서도 남녀평등의식 교육 및 관련 연수를 받은 단체장의 경우 남녀평등적인 태도와 여성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태도를 보이고 있고, 여성정책 시행 실적 역시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교육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행정자치부는 매년 1-2회 시·도 여성정책국장회의를 행정자치부 차관주재로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행정자치부 여성정책 추진계획과 향후 방향을 알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 함과 더불어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여성정책에 대한 실천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는 중앙과 연계되는 여성정책 관련 회의가 실시되지 못하고, 상위 시·도와의 연계 속에서 여성정책이 조율되고 있으므로 상위 시·도 기관장이 여성문제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이 저조할 경우 이는 기초자치단체에까지 그

대로 영향이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상위 기관의 기관장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기초자치단체가 여성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초자치단체장의 여성문제와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현재 여성부에서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을 2003년 설립하여 사회지도층과 공무원, 민간기업체 CEO 등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을 중심으로 남녀평등의식교육(성인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여성부나 행자부가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한 여성정책연찬회를 매년 1회 정도는 최소한 개최하고, 개최시에는 이 기관과의 협조하에 일정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여성정책 교육을 받도록 하여 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인식제고와 함께 관심을 증대시킨다.

다. 여성정책 평가를 통한 인센티브 제공

중앙의 여성정책이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파급되어 효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안 모색과 지방여성정책 성과에 대한 적극적이고 강력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평가는 현대 행정기관에서 업무의 효율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평가에 대해서는 기관장과 단체장들도 그 중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정부의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는 정부업무등의평가에관한기본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평가, 중앙부처와 광역시도의 합동평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평가가 주된 평가이긴 하나 이는 여성정책이 갖는 특수성을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여성정책을 전반적, 체계적으로 독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여성정책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상위기관에서 제공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 업무는 정부업무등에관한평가기본법에 의거하여 평가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데, 정부업무등에관한평가기본법 제3조에 의할 경우 “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모법인 여성발전기본법에

여성정책에 관한 평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독자적으로 여성정책을 여성부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여성발전기본법 제11조(여성정책조정회의)의 내용 중 “②조정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3. 여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을 적용할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여성부가 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기능을 수행하여 기초자치단체까지 평가하고 이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도입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은 한층 증대될 것이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여성정책종합평가는 여성정책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포괄적인 평가항목을 가지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추진에 동기를 부여하여 기관장의 관심과 의식을 환기시키고, 인사담당자들의 평가참여를 통하여 여성공무원 인사정책에 대한 인식제고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여성부가 독자적으로 여성정책을 평가할 수 평가 틀과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기초자치단체까지 체계적으로 평가한다면 자치단체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은 한층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강원도의 경우 자체적으로 소속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여성정책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방법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라. 여성정책 담당부서 전문성 개발 및 외부조직과의 협조 체제 구축

(1) 여성정책담당자 대상 성인지교육 실시 및 협조부서 지정

여성정책담당공무원의 조사응답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여성정책은 성인지적 관점의 특수한 전문정책영역으로서 이에 대한 교육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책을 원활하게 수행해 나가기 곤란하다.

여성의 욕구와 사회발전의 목표를 연결하는 가치의 통합을 위해서는 여성정책담당공무원들이 여성정책이 사회발전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으며, 여성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왜 중요한지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돕고, 집행방식과 효과성을 감지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부가 주체가 되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직무에 관련한 여성정책

교육과 부가적 교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정책의 활성화가 전국적 지방조직에서 일어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여성정책은 여러 행정부서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 많은 관계로 중앙에서 국무총리실 산하에 여성정책조정회의를 두어 여성정책에 대한 내용을 조정·협의하고 여성정책 책임관 제도를 두어 여성정책에 관련한 협조를 얻을 수 있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에도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아래 여성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하거나 협조부서를 지정하여 여성정책을 원활히 운영할 필요가 있다.

(2) 지역 여성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

본 연구결과에서 여성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요인간의 순위를 보았을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여성단체를 꼽았다. 그 만큼 여성단체는 지역 사회에서 지역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직접 수행하기도 하고, 행정기관에 여성정책을 하도록 압력을 넣기도 한다. 현재 기초자치단체 여성단체를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와 여성의 지위향상 등 포괄적인 사업을 지향하는 일반여성단체, 남녀평등을 보가 적극적으로 표방하는 여성운동단체, 여성 직업인이 주체가 되어 여성 직업인의 권익과 사회봉사활동을 전개하는 직능여성단체, 여성농민의 권익을 지향하는 활동을 추구하는 여성농민단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성단체들의 목적은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복지 그리고 지역사회봉사활동이 가장 많으며 그 외에 자질향상 및 친목도모가 가장 많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한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는 단체는 드물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많은 여성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단체로서의 정체성과 민간단체로서의 자생력을 가진 단체가 부재함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단체가 지역여성들의 지역사회 참여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여성단체가 될 수 있도록 여성단체 스스로의 자생력 강화와 여성단체의 취약한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여성단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여성부의 제2차 여성정책기본계획에도 여성단체가 일반여성의 목

소리를 대변하고 정부 정책 수립 및 집행에 있어서 여성의 관심과 이해를 반영하는 한편, 일상생활 속의 남녀차별 개선 등 여성의식을 고양하는 등 자발적인 시민단체로서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여성단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정책과제가 제시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여성정책과 관련한 행정기구와 NGO와의 관계가 관이 주도하고 NGO는 행정기구에 의존하거나 혹은 배타적, 중립적 입장이었다면 앞으로의 관계는 상호 협력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여성단체가 여성의 참여가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 담당하고 행정기관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행정적, 시설적 재정적 지원을 담당하는 방향으로의 협조체제 구축이다. 이러한 여성단체에 대한 활성화 지원과 여성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은 특히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안고 있는 인력과 재정난을 최소화하면서 지역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여성단체 특화사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여성단체 사업에 대한 홍보(기초자치단체 홈페이지에 여성단체 소식란 만들기, 소식지 및 홈페이지 제작 지원)를 지원하여 지역여성들에게 여성정책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여성단체 우수 사업에 대한 사례집을 발간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여성 담당부서와 지역 여성단체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역 대중매체를 통한 여성정책 홍보 및 협조체제 구축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로 현대사회는 다매체 다채널의 시대가 되었다. 특히 정보사회라 불리는 21세기에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의 새로운 미디어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리라 생각된다. 특히 현 사회에서 지식의 힘은 정보의 힘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는 대부분 대중매체를 통해서 얻어진다. 따라서 대중매체가 힘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중매체에서 어떤 문제들을 포커스로 다루는가에 따라 그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그 사안에 중요성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녀평등 문제를 논설, 신문, 잡지, 라디오, TV방송과 같은 대중매체들이 의제화해야 할 것이다. 지역 대중매체들이 지속적으로

남녀평등의 중요성,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의 필요성, 여성의 복지증진을 통한 건강한 가정의 구현의 중요성, 국가 및 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사회시스템 구축의 필요성 등을 홍보 한다면 한층 지방의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효율성을 가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 여성정책담당부서와 여성단체와의 협력체제 구축을 기반으로 여성편집인(언론인) 수의 증대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중매체와의 접촉을 시도하고자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마. 상위기관의 여성정책과의 연계 구축

광역자치단체와 도는 5년마다 기초자치단체들과 협력하여 여성정책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를 매년 12월까지 시·도지사에게 다음 연도의 소관업무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므로 시·도에서 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시 기본지침을 기초자치단체에 주고 공동으로 추진할 사업들을 검토하고, 함께 노력해야 할 사항을 점검하면서 여성정책을 연계해 나가야 할 것이다(김원홍, 1997, 129). 또한 여성정책이 갖는 특수성으로 시도와 기초자치단체간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상호 협력하여 여성정책을 수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여성정책을 종합하고 조정할 여성정책담당관 내지 여성정책과를 두어 시도의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내 여타 부서와 여성정책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역할을 수행해야만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바. 지역 여성들의 여성정책 주체로서의 참여의식 교육실시

지방정부의 생활자치에서의 정책결정은 생활정치이고 생활과제이다. 그러므로 지역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일상사에서 겪는 살림꾼 당사자로서의 여성과 또한 실생활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의 직접참여는 더 이상 강조할 필요 없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런 점에서 여성들의 교육문제, 사회문제, 문화활동, 소비생활, 지역복지문제, 환경문제, 여성문제 등에서 실천의 주체로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연구(전라북도여성발전연구원, 2002)에서 여성관련 업무 수행시 가장 큰 문제점을 주민 등 정책대상자들의 참여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처럼 여성문제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은 여성단체나 소수 여성들에 한정된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여성과 관련된 제도를 개발하여 실시한다 하여도 지방정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이에 대한 성숙된 의식이 수반되지 않으면 그 제도와 정책은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없음은 너무나 분명하다. 특히 여성문제 및 정책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행정기관과 주민 역시 이에 대한 인식이 취약한 상태이므로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권익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여성들의 관심과 참여가 강조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지역 여성들의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참여의식이란 공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성 스스로의 자각과 노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여성들이 지방 여성정책을 실현하는 주체로서 효과적으로 참여토록 하기 위한 사회교육방안으로는 지역사회 내 널리 퍼져 있는 소모임을 활용을 통해 행정기관에서 나오는 소책자나 팸플릿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행정기관에서 행하고 있는 여성관련 사업들을 파악하는 방안 또는 자치단체의 업무나 사업정부를 지방의회나 행정기관과 같이 공유하는 방안도 있다.

사.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정책기능 확대

여성정책프로그램의 수행, 여성정책의 집행 내용이 주로 여성의 평생교육참여여건강화, 여성의 문화활동기회확대 등에 중점이 두어지고 있으나 향후 정책의 방향이 여성의 직업능력개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조사결과에서 나타났다. 여성정책이 지역여성의 욕구를 반영함으로써 실질적 여성의 지위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성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관심을 증폭시켜야 한다. 직업능력의 개발은 평생교육기회의 제공, 문화활동기회의

제공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할 것으로 사료되나, 여성정책이 형식적인 사업으로 전시성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예산증액과 인력증원을 전제로 한 여성 직업능력개발에 비중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3. 향후 과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필요한 요인들을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가지고 있는 기반체계와 여성정책 담당부서를 둘러싸고 있는 조직 내·외적 영향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현재 기초자치단체에서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겪는 어려움과 향후 여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데 우선시 되는 요인들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도출하기에 앞서 우선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갖고 있는 기반체계(인력, 재정, 여성발전기본조례, 여성위원회 설치, 중장기 계획 수립 여부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1차적으로 실시하였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소속 지역에서 여성정책을 추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직 내·외적 요인들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기반체계에 대한 실태 파악과 영향 요인 분석에 근거한 포괄적인 추진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도 지니고 있음을 밝힌다.

먼저, 연구의 범위 면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전체 기초자치단체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어 개별적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시도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기반체계와 영향 요인들에 대해서 전체적 현황이 정리되었으며 이 연구를 토대로 하여 개별 기초자치단체를 연구 대상으로 한 보다 심층적인 사례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해당 개별 기초자치단체에 적절한 세부적인 개선 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연구의 방법 면에서, 본 연구는 설문조사, 인터뷰, 문헌연구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기반체계에 대한 실태 파악은 전화 인터뷰와 설문조

사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연구의 대상이 전국 기초자치단체라는 조건하에서 적절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화 인터뷰는 개별 기초자치단체의 여성정책 담당부서 공무원과 직접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당 정도 심층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향요인에 대한 분석을 설문조시에 근거함으로써 해서 개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서 개별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사례연구가 수행될 경우 해당 여성정책 담당부서 공무원들과 전반적이고 심층적인 인터뷰를 직접 수행함으로써 적실성있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를 시·군·구별로 나누어 실태와 영향요인을 분석하였으나 정책적 제언은 시·군·구로 나뉜 구체화된 추진방안들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 여성정책 담당부서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조직 내·외적 영향요인들도 함께 고려한 나머지 기초자치단체에 필요한 포괄적이고 전반적인 현황과 대안은 제시될 수 있었으나, 이를 시·군·구별로 세분화하여 구체화하기에는 본 연구의 역량에 한계가 있었다. 시·군·구별로 놓여 있는 기반체계나 환경적 요인들을 고려한 정책적 방안 제시도 향후 필요하다 하겠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곽효문(1995), 『복지정책론』, 서울: 제일법규.
- 김경희(2001),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과 예산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위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1세기 한국행정 및 행정학회 비전 발표논문집.
- 김기태 외 2인(1999), 『사회복지의 이해』, 서울: 박영사.
- 김병완 외 4인(1996), 『지방자치와 지역정책』, 한울아카데미.
- 김선욱 외 3인(1991), 『지방자치와 여성정책관련 행정조직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소연(2000),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애령(1999), 『여성정책의 변화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A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엘림·김혜영(2001), 『남녀평등도시 모델개발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김원홍(1997), 『중앙과 지방의 여성정책연계추진방안』, 한국여성개발원.
- 남건우(1997), 『행정법강의』, 서울: 홍문사.
- 박유진(2002), “여성의 지방자치참여 활성화 방안”, 전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송근원 외 1인(1995),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나남.
- 신태희(1998), 『지방자치와 여성』, 서울: 홍익재.
- 여성부(2001),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 기구 및 기능의 합리적 조정방안.
- 원주여성민우회(1999), 원주지역 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방안 연구.
- _____ (2001), 여성의 눈으로 바라본 지역여성정책과 예산.
- 유훈(1994), 『정책학원론』, 서울: 법문사.
- 이경숙(1999), 여성정책전담기구 평가 및 정책제안, 한국여성단체연합, 김대중 정부 여성정책 1년 평가 및 정책제언을 위한 토론회.
- 이경희 역(1887), 『일본지방자치제도』, 서울: 문우사.

- 이창균 역(1996),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사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이호철(1996), 『일본의 지방자치』, 삼성경제연구소.
- 임성일(1996), 『영국의 지방정부』, 서울: 법경사.
- 전주시(1998), 여성정책토론회.
- 정정길(1988), 『정책결정론』, 서울: 대명출판사.
- 정준금(1991), 환경규제정책 결정과정의 갈등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 39: 36-52.
- 조석준(1994), 『한국행정조직론』, 서울: 법문사.
- 조우철(1998), “여성정책추진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실증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형(1996), 『양성평등과 한국법체계』,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한국지방자치학회(1995),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삼영사.
- 한양대학교 행정문제연구소(2002), 여성정책과 NGO.
- 한정자·김인순(2000), 『지방자치단체장의 여성문제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국외문헌>

- Aiilson, Graham T.(1972), He Power of Bureaucratic Routiness: The Couban Missile Crisis. in Francis E. Rourke ed. *Bureaucratic Power in National Politics*, 81-99.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Bardach, Eugene(1977). *The Implementation Game: What Happens After a Bill becomes a Law*.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Freeman, J. Lieper(1972), The Bureaucracy in Pressue Poitics. in Francis E. Rourke ed. *Bureaucratic Power in National Politics*, 15-27. Boston: Little Brown and Company.
- Kai Kronvall 외 인(1996), *Swedish Local Government*, Gummessons Tryckeri AB, Falkoping.

- Mike S. & Anne W.(1992), *Gender and Bureaucracy*, T. J. Press Ltd., Padstow, Cornwall.
- R. A. W. Rhods.(1985), "Intergovernmental Relations in the United Kingdom" in Y. Meny & V. Wright(ed.), *Centre-Periphery Relations in Western Europe*, London: George Allen & Unwin.
- Smith B. C.(1985), *Decentralization*, Great Britain by Mackays of Chatham.
- Stewart J. & Stoker G.(1985), *The Future of Local Government*, Macmillan Education Ltd.
- Yates, Douglas(1986). An Analysis of Public Bureaucracy, in Lane, Frederick S. ed. *Current Issues in Public Administration*, 54-69. ew York: St. Martin's Press.



부록



<부록-1> 여성정책 담당기구 (시)

여성정책 담당기구 명칭			시
문화환경 복지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경기도(수원시)
문화복지국	여성복지과	여성정책팀	경기도(성남시)
	여성과	-	경기도(남양주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	경기도(시흥시)
사회경제국	여성과	여성복지팀	경기도(고양시)
복지환경국	여성복지과	여성정책팀	경기도(부천시)
	여성과	-	경기도(안양시), 전남(순천시)
	여성정책과	-	강원도(원주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담당	경북(구미시)
	여성정책과	-	전북(전주시)
	가정복지과	여성복지담당	전북(익산시)
	사회과	여성정책담당	충북(청주시)
환경복지국	여성복지과	-	경기도(의정부시)
	여성청소년과	-	경남(창원시)
	사회여성과	-	전남(여수시)
사회환경국	사회여성과	-	경기도(안산시)
	여성청소년과	여성복지담당	경남(김해시)
	사회복지과	여성정책팀	경북(포항시)
		여성복지담당	충남(천안시)
	가정복지과	-	경기도(평택시)
		여성복지담당	경남(진주시)
사회산업국	사회여성 복지과	-	경기도(광명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경남(거제시)
시민봉사국	여성복지과	-	경기도(군포시)
총무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팀)	경기도(광주시, 안성시), 경남(진해시, 통영시, 밀양시), 충남(보령시)
총무사회국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담당	경기도(화성시)
산업복지국	사회복지과	-	경기도(이천시)

여성정책 담당기구 명칭			시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경기도(파주시), 경북(김천시)
		여성정책담당	경북(안동시)
	복지과	여성복지팀	경기도(김포시)
	복지여성과	-	충남(논산시)
자치행정국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	경기도(하남시, 의왕시, 오산시)
		여성복지담당	전북(김제시), 전남(나주시), 충남(아산시, 서산시)
	복지사업과	여성정책담당	충북(제천시)
	여성복지과	여성정책팀	제주시
경제복지국	여성정책과	-	강원도(춘천시)
행정지원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경북(경주시, 영주시, 영천시, 상주시, 문경시)
보사환경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경북(경산시)
생활민원국	여성청소년과	-	경남(마산시)
경제사회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경남(양산시), 전남(목포시)
	사회여성과	-	전북(정읍시)
시민생활지원국	가정복지과	여성복지담당	충북(충주시)
자치문화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충남(공주시)
기타	복지행정과	여성복지담당	전북(남원시)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팀)	경기도(동두천시, 과천시), 서귀포시, 강원도(속초시), 전남(광양시)
		여성정책팀	강원도(삼척시)
	복지여성과	-	강원도(강릉시)
	계 68		

<부록-2> 여성정책 담당기구 (군)

여성정책 담당기구			군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여성청소년팀	부산광역시(기장군), 대구광역시(달성군)
-	사회복지과	여성복지담당 (팀)	경기도(포천군, 양주군, 양평군, 연천군), 강원도(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화천군, 인제군), 경북(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 예천군, 봉화군), 경남(함안군, 고성군, 남해군, 거창군, 합천군), 전북(완주군, 순창군, 고창군), 전남(고흥군, 화순군, 강진군, 영광군, 신안군), 충북(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충남(연기군, 서천군, 청양군, 예산군, 태안군, 당진군), 강원도(고성군)
		복지여성담당	경남(창녕군)
		복지담당	충북(청원군)
		여성청소년팀	경기도(여주군), 인천광역시(옹진군)
		가정복지담당	경기도(가평군), 경북(영덕군, 울릉군), 경남(의령군)
		여성노인담당	강원도(홍천군)
		여성지원담당	전남(장흥군)
		여성아동담당	경북(청도군), 전남(보성군)
		여성담당	경북(울진군), 전남(담양군, 해남군, 영암군), 충남(홍성군)
		여성정책담당	전남(곡성군, 무안군, 장성군, 완도군), 충북(진천군)
	환경복지과	여성복지담당	강원도(횡성군, 평창군, 양양군), 경남(산청군, 함양군)
	사회과	여성아동과	경북(영양군)
	복지위생과	여성인력개발	경남(하동군)
	민원복지과	가정여성담당	전북(진안군)
	문화복지과	여성복지담당	전북(장수군, 임실군)
	사회경제과	여성복지담당	전남(함평군), 충북(보은군)
	주민자치과	여성정책담당	전남(진도군)
	위민홍보실	여성정책담당	충북(단양군)
	사회복지 여성과	-	북제주군, 남제주군
계 80			

<부록-3> 여성정책 담당기구 (구)

여성정책 담당기구			구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담당	대구광역시(중구, 서구)
		여성업무담당	대구광역시(동구, 북구)
		여성복지담당(팀)	대구광역시(남구), 대전광역시(중구, 서구, 대덕구), 인천광역시(계양구, 서구), 부산광역시(부산진구, 남구, 해운대구, 금정구, 수영구)
		여성청소년팀	부산광역시(서구)
	복지행정과	여성아동담당	대구광역시(달서구)
	가정복지과	여성복지담당(팀)	대전광역시(동구), 부산광역시(북구, 사하구)
	복지과	여성생활복지담당	대전광역시(유성구)
	보건복지과	여성정책팀	인천광역시(중구)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	여성복지팀	인천광역시(동구)
		여성·아동팀	인천광역시(남동구)
사회문화산업국	사회복지과	여성팀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문화국	사회복지과	여성지원팀	인천광역시(연수구)
문화복지국	여성과	여성정책팀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복지국	가정복지과	여성복지팀	서울시(강남구, 강북구, 강서구, 도봉구, 서초구, 송파구, 은평구, 중랑구, 노원구)
		부녀·청소년팀	서울시(영등포구)
		부녀복지팀	서울시(용산구)
		가정복지담당	서울시(중구)
		여성팀	서울시(마포구)
	복지행정과	여성복지팀	서울시(강동구)
	사회복지과	여성·아동복지팀	서울시(구로구)
		여성복지팀	서울시(금천구, 동대문구)
복지경제국	여성정책과	여성정책팀	서울시(양천구)
계 45			

<부록-4> 여성정책 담당인력 (시)

경기도		강원도		경상남도	
기초자치	인력수	기초자치	인력수	기초자치	인력수
수원시	3	춘천시	16(5)	창원시	3
성남시	4	원주시	17(4)	마산시	3
고양시	4	강릉시	24(3)	진주시	3
부천시	4	동해시	1	진해시	3
안양시	6	태백시	3	통영시	5(1)
안산시	4(1)	속초시	3	사천시	4(2)
용인시	3+파견1	삼척시	3(1)	김해시	4(2)
의정부시	11(1)	경상북도		밀양시	3
남양주시	21(4)	포항시	2	거제시	3
평택시	5(1)	경주시	3	양산시	3
광명시	3	김천시	3	전라남도	
시흥시	2	안동시	2	목포시	3
군포시	5	구미시	3	여수시	5(2)
광주시	3(2)	영주시	3	순천시	4
화성시	2(1)	영천시	3	나주시	6
파주시	4(1)	상주시	3	광양시	3
이천시	3(1)	문경시	5	충청북도	
구리시	3(1)	경산시	5	청주시	3
김포시	2	전라북도		충주시	4(1)
안성시	3	전주시	4	제천시	4
하남시	3(1)	군산시	2	충청남도	
의왕시	3(1)	익산시	3	천안시	3
오산시	3	정읍시	3	공주시	3
동두천시	5(1)	남원시	3	보령시	2
과천시	3(1)	김제시	3	아산시	3
제주도				서산시	1
제주시	4			논산시	16(2)
서귀포시	3				
계 74					

<부록-5> 여성정책 담당인력 (군)

경기도		강원도		경상북도	
가평군	4(1)	홍천군	3	군위군	3
연천군	5	횡성군	3	의성군	3
포천군	3(1)	영월군	3(1)	청송군	2
양주군	3(2)	평창군	2	영양군	4
여주군	3	정선군	6	영덕군	4(1)
양평군	2	철원군	3	청도군	1
인천광역시		화천군	3	고령군	3
강화군	3(1)	양구군	3	성주군	2
옹진군	3	인제군	2	칠곡군	3
대구광역시		고성군	2	예천군	3
달성군	3	양양군	4(1)	봉화군	3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울진군	3
기장군	3(1)	담양군	4	울릉군	3
경상남도		곡성군	3	충청북도	
의령군	4(1)	구례군	2	청원군	5(1)
함안군	3	고흥군	3	보은군	3(1)
창녕군	3	보성군	3(1)	옥천군	4(1)
고성군	2	화순군	3	영동군	3(1)
남해군	3	장흥군	3	괴산군	4(1)
하동군	3	강진군	3	음성군	6(1)
산청군	3	해남군	3	단양군	4(2)
함양군	3	영암군	2	충청남도	
거창군	3	무안군	3	금산군	3
합천군	1	함평군	4	진천군	3
전라북도		영광군	3	연기군	2
완주군	3	장성군	3	부여군	16(3)
진안군	4(1)	완도군	4	서천군	2
무주군	4	진도군	3	청양군	3
장수군	2	신안군	3	홍성군	3
임실군	2	제주도		예산군	5
순창군	3	북제주군	3(2)	태안군	2
고창군	3	남제주군	3(2)	당진군	4
부안군	4				
계 88					

〈부록-6〉 여성정책 담당인력 (구)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기초자치	인력수	기초자치	인력수	기초자치	인력수	기초자치	인력수
강남구	4	금천구	5	중구	3	중구	4
강동구	4	노원구	4	서구	4(2)	동구	5
강북구	2	동대문구	4	동구	3	남구	4
강서구	4	양천구	6	영도구	(1)	연수구	3
구로구	6	마포구	4	부산진구	4	남동구	4
도봉구	4	광진구	3	동래구	4	부평구	6
서대문구	4	성동구	6	남구	4	계양구	4(1)
성북구	5(2)*	동작구	1	북구	4(1)	서구	4
서초구	4	관악구	5	해운대구	5(2)	대구광역시	
송파구	4	종로구	6	사하구	5(1)	중구	3
영등포구	6	대전광역시		금정구	4	동구	2
용산구	4	동구	3	강서구	5	서구	5
은평구	3	중구	5(2)	연제구	4	남구	4
중구	5(1)	서구	3	수영구	3	북구	4
중랑구	5	유성구	6	사상구	5(1)	수성구	6
		대덕구	4			달서구	4
계 60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 설문지

한국여성개발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금년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여성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여성정책의 추진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효율적으로 추진될 때 한국여성의 지위는 향상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추진의 기반과 효율적 수행의 장애요인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설문지는 기초자치단체(232단체)의 여성정책수행부서에 2부씩 배포되어 회수하는 설문지로서, 응답은 여성정책 전담(수행)부서에서 ①관리자급 한분, ②관리자급이 아닌 한분이 각각 설문을 하셔서 하나의 봉투에 담아 반송처리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본 설문은 향후 여성정책 추진기반을 정비해나가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이며 매우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설문은 연구를 위해서만 활용되며 개인적 의견에 관해서는 일체의 비밀이 보장됩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 7월

한 국 여 성 개 발 원

문의처: 한국여성개발원(02)3156-7000

문미경(02)3156-7103, 김혜영(02)3156-7106.

Fax: 02-3156-7279

1. 귀하의 부서에서는 여성정책을 전담으로 하는 조직으로 “과”나 “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___ ①그렇다 ___ ②그렇지 않다

- 1-1. ①에 응답하신 경우, 전담공무원(정규직, 별정직, 계약직 포함)은 몇 명입니까?

___ ①2인 이하 ___ ②3인 ___ ③4인 ___ ④5인 이상

2. 귀하께서는 현재의 전담직원 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___ ①매우 부족하다 ___ ②부족한 편이다 ___ ③적정하다
___ ④충분한 편이다 ___ ⑤매우 충분하다

3. 귀하께서 생각하시기에 여성정책과 관련한 업무는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매우 높은 전문성을 요구한다
___ ②높은 정도의 전문성을 요구한다
___ ③보통이다
___ ④그다지 전문성이 필요하지 않다
___ ⑤전혀 전문성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3-1. 귀하께서는 여성정책 수행과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십니까?

___ ①전혀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___ ②전문성이 부족한 편이다
___ ③보통이다
___ ④전문성을 어느 정도는 갖추었다
___ ⑤아주 높은 정도의 전문성을 가졌다

3-2. 귀하의 소속 시·군·구 여성정책 전담 공무원들의 여성정책 관련 전문성은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전혀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
 ___ ②전문성이 부족한 편이다
 ___ ③보통이다
 ___ ④전문성을 어느 정도는 갖추었다
 ___ ⑤아주 높은 정도의 전문성을 가졌다

4. 귀하의 소속 시·군·구는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까?

- ___ ①그렇다 ___ ②그렇지 않다

4-1. ②에 응답하신 경우, 귀하의 소속 시·군·구가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담당공무원의 인식부족
 ___ ②의회의원의 활동부족
 ___ ③단체장의 의지부족
 ___ ④여성발전기본조례의 필요성이 없다고 봄

5. 귀하는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여성정책 추진에 기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그렇다 ___ ②그렇지 않다

6. 귀하의 소속 시·군·구는 지역의 여성발전을 중요한 행정수행목표로 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그렇다 ___ ②그렇지 않다

7. 귀하의 소속 시·군·구가 **현재** 여성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어디입니까?

- ___ ①여성의 건강과 빈곤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
 ___ ②여성의 직업능력개발
 ___ ③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성폭력 근절
 ___ ④여성의 평생교육참여 여건강화
 ___ ⑤여성의 문화활동참여확대

8. 귀하의 소속 시·군·구는 여성정책추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___①중장기 발전계획(3-5년 정도)을 가지고 있다
 ___②당해연도 계획만을 가지고 있다
 ___③계획에 의거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수행한다

- 8-1. ① ②에 응답하신 경우, 여성정책중장기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인력은 어느 정도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현재의 인원을 100%라고 한다면)

___①130% ___②150% ___③180% ___④200% ___⑤기타

- 8-2. ① ②에 응답하신 경우, 여성정책중장기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현재의 예산을 100%라고 한다면)

___①130% ___②150% ___③180% ___④200% ___⑤기타

9. 귀하의 소속 시·군·구의 여성정책(아동보육정책 제외)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___①5천만원 미만
 ___②5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___③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___④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___⑤3억 이상
 ___⑥기타

10. 귀하의 소속 시·군·구가 향후 여성정책으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할 부분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___①여성의 건강과 빈곤여성에 대한 경제적 지원
 ___②여성의 직업능력개발
 ___③가정폭력·성폭력 근절
 ___④여성의 평생교육참여 여건강화
 ___⑤여성의 문화활동참여확대

11. 귀하의 소속 시·군·구는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 ___ ①이미 조성된 상태이다
 ___ ②조성 중이다
 ___ ③조성을 고려하고 있다
 ___ ④조성에 대한 계획이 없다

11-1. ① ②에 응답하신 경우, 현재 여성발전기금을 활용하고 있습니까?

- ___ ①그렇다 ___ ②그렇지 않다

12. 귀하께서는 여성발전기금이 여성정책 추진에 기여하는 부분을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 ___ ①부족한 사업비에 대한 보충적 역할
 ___ ②특화된 사업 실행
 ___ ③예산 삭감이 있더라도 지속할 수 있는 사업의 지속성 유지
 ___ ④창의성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 지원

13. 귀하의 소속 시·군·구에는 여성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___ ①그렇다(13-1, 13-2, 13-3, 13-4번으로 가시오)
 ___ ②그렇지 않다(14번으로 가시오)

13-1. 귀하께서는 귀하의 소속 시·군·구의 여성발전위원회의 기능을 주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여성정책에 대한 사업심의
 ___ ②여성정책 추진의 방향 및 정책개발 자문
 ___ ③필요한 연구 사업의 제안
 ___ ④여성정책에 대한 평가

13-2. 귀하의 소속 시·군·구는 여성발전위원회를 연중 몇 회 개최합니까?

- ___ ①1-2회
 ___ ②3-4회
 ___ ③5회 이상
 ___ ④기타

13-3. 귀하께서는 귀하의 소속 시·군·구가 여성발전 위원회의 제안 사항을 어느 정도 수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의견으로만 참고 한다
 ___ ②일부의견만을 수용 한다
 ___ ③많은 부분을 수용 한다
 ___ ④전적으로 수용 한다

13-4. 여성발전위원회의 제안 사항을 수용하는 데, 가장 큰 제약 요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지적해 주십시오.

- ___ ①예산의 부족
 ___ ②담당인력의 부족
 ___ ③단체장의 무관심
 ___ ④관련부서의 협조부족
 ___ ⑤비현실적인 제안 사항들
 ___ ⑥기타

14. 귀하의 소속 시·군·구에서는 여성정책이 추구하는 남녀평등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복지증진의 목표달성을 통해 지역여성의 삶의 질 제고에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매우 크게 기여하였다
 ___ ②어느 정도 기여한 편이다
 ___ ③기여하지 못한 편이다
 ___ ④전혀 기여하지 못하였다

15. 귀하께서는 “내가 속한 시·군·구는 여성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 ___ ①전적으로 동의한다
 ___ ②동의하는 편이다
 ___ ③동의하지 않는 편이다
 ___ ④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16. 귀하께서는 여성정책과 관련한 다음 항목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문항	전혀 모름	조금 모름	보통	조금 앎	많이 앎
16-1)여성정책기본법	①	②	③	④	⑤
16-2)제2차여성정책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①	②	③	④	⑤
16-3)상위 기관의 여성정책사업	①	②	③	④	⑤

17. 귀하께서는 여성정책 담당부서가 여성정책 관련 사업들을 독자적으로 수립·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아주 좁다
___②좁은 편이다
___③중간 정도이다
___④넓은 편이다

18. 귀하께서는 여성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느 정도로 헌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다른 업무를 담당할 때보다 헌신하는 정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___②다른 업무를 담당할 때보다 헌신하는 정도가 높은 편이다
___③보통이다
___④다른 업무를 담당할 때보다 헌신하는 정도가 낮은 편이다
___⑤다른 업무를 담당할 때보다 헌신하는 정도가 아주 낮은 편이다

19. 귀하의 부서는 여성정책을 담당하는 구성원간의 결속력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다른 부서보다 결속력이 아주 높은 편이다
___②다른 부서보다 결속력이 높은 편이다
___③보통이다
___④다른 부서보다 결속력이 낮은 편이다
___⑤다른 부서보다 결속력이 아주 낮은 편이다

20. 귀하께서는 여성정책 부서의 관리자(과장) 입니까?

___ ①그렇다

___ ②그렇지 않다(20-1, 20-2번으로 가시오)

20-1. 귀하의 부서장은 부서내부의 여성업무 관련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어느 정도로 노력하십니까?

___ ①아주 많이 노력하는 편이다

___ ②노력하는 편이다

___ ③보통이다

___ ④노력하지 않는 편이다

___ ⑤전혀 노력하지 않는 편이다

20-2. 귀하의 부서장은 여성정책부서의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 부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외부 조직들과의 활동에 어느 정도로 적극적이십니까?

___ ①아주 적극적인 편이다

___ ②적극적인 편이다

___ ③보통이다

___ ④소극적인 편이다

___ ⑤아주 소극적인 편이다

21. 귀하의 소속 시·군·구 자치단체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___ ①아주 높은 편이다

___ ②높은 편이다

___ ③보통이다

___ ④낮은 편이다

___ ⑤아주 낮은 편이다

22. 귀하는 현재 귀 지역의 여성정책이 다른 부문의 정책들에 비해 어느 정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다른 부문보다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 ___ ②다른 부문과 비슷한 정도로 다루어지고 있다
- ___ ③다른 부문보다 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 ___ ④다른 부문에 비해 전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지 않다
- ___ ⑤잘 모르겠다
23.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귀 지역 여성단체들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아주 높은 편이다
- ___ ②높은 편이다
- ___ ③보통이다
- ___ ④낮은 편이다
- ___ ⑤아주 낮은 편이다
24. 귀하의 소속 부서는 지역 여성단체와 원활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매우 그렇다
- ___ ②그런 편이다
- ___ ③그렇지 못한 편이다
- ___ ④전혀 그렇지 못하다
25. 귀하께서는 여성정책 관련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여성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영향력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 ①아주 강한 편이다
- ___ ②강한 편이다
- ___ ③약한 편이다
- ___ ④아주 약한 편이다

26. 귀하지역의 지역신문이나 방송(대중매체)은 지역여성들의 문제점이나 여성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___①아주 높은 편이다
 ___②높은 편이다
 ___③보통이다
 ___④낮은 편이다
 ___⑤아주 낮은 편이다

27. 일반적으로 볼 때, 귀하께서는 다음 각 주체의 여성정책에 대한 지지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매우부족	약간부족	보 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27-1)지방자치단체장	①	②	③	④	⑤
27-2)지역여성	①	②	③	④	⑤
27-3)여성단체	①	②	③	④	⑤
27-4)대중매체	①	②	③	④	⑤
27-5)타 행정부서	①	②	③	④	⑤

28. 귀하께서는 다음 각 주체가 여성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매우작음	약간작음	보 통	약간 높음	매우 높음
28-1) 지방자치단체장	①	②	③	④	⑤
28-2) 지역여성	①	②	③	④	⑤
28-3) 여성단체	①	②	③	④	⑤
28-4) 대중매체	①	②	③	④	⑤
28-5) 타 행정부서	①	②	③	④	⑤

29. 다음은 현재 여성정책을 수행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요인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항	전혀 중요하지 않음	중요하지 않은 편임	보통	약간 중요함	매우 중요함
29-1)예산 및 인력규모	①	②	③	④	⑤
29-2)여성정책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	①	②	③	④	⑤
29-3)부서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 지지	①	②	③	④	⑤
29-4)여성정책 담당부서의 법적·공식적 권한	①	②	③	④	⑤
29-5)여성정책에 대한 지역 여성들의 지지와 관심	①	②	③	④	⑤
29-6)부서장의 리더십	①	②	③	④	⑤
29-7)관할업무의 전문성	①	②	③	④	⑤
29-8)유관부서들의 협조	①	②	③	④	⑤
29-9)부서내부의 응집성	①	②	③	④	⑤
29-10)여성단체들의 지지	①	②	③	④	⑤

30. 귀하께서는 여성정책 담당 부서가 현재 겪고 있는 다음 각 문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항	매우 심각함	약간 심각함	보통	심각하지 않은 편임	전혀 심각하지 않음
30-1)예산 및 인력규모 부족	①	②	③	④	⑤
30-2)여성정책에 대한 단체장 의 관심과지지 부족	①	②	③	④	⑤
30-3)부서장의 여성정책에 대한 관심과지지 부족	①	②	③	④	⑤
30-4)여성정책담당부서의 법적·공식적 권한 없음	①	②	③	④	⑤
30-5)여성정책에 대한 지역여성 들의 지지와 관심 부족	①	②	③	④	⑤
30-6)부서장의 리더십 부족	①	②	③	④	⑤
30-7)관할업무의 전문성부족	①	②	③	④	⑤
30-8)유관부서들의 협조부족	①	②	③	④	⑤
30-9)부서내부의 응집성부족	①	②	③	④	⑤
30-10)여성단체 등 외부단체 들의 지지 부족	①	②	③	④	⑤

31. 귀하께서는 앞으로 여성정책 담당부서의 역량이 향상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순위를 정해 주십시오.

- ___ ①예산 및 인력규모
 ___ ②여성업무에 대한 단체장의 관심과 지지
 ___ ③여성정책에 대한 지역여성들의 지지와 관심
 ___ ④부서장의 리더십
 ___ ⑤담당업무의 전문성
 ___ ⑥유관부서들의 지지
 ___ ⑦부서내부의 응집성
 ___ ⑧여성단체 등 외부단체들의 지지

응답자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___ ①여자 ___ ②남자

2. 귀하의 여성정책 업무담당 경력은 얼마나 됩니까?

- ___ ①1년 미만
 ___ ②1년-2년 미만
 ___ ③2년-3년 미만
 ___ ④3년-4년 미만
 ___ ⑤4년 이상

3. 귀하의 지역은 기초자치단체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___ ①시 ___ ②군 ___ ③구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003 연구보고서 210-17

지방자치단체 여성정책의 효율적 추진 방안

2003년 12월 27일 인쇄
2003년 12월 31일 발행

발행인 : 장 하 진

발행처 : 한국여성개발원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1-363
전화 / 02-3156-7000 (대)

인쇄처 : 도서출판 한학문화
전화 / 02-313-7593 (대)

<정가 4,500원>

ISBN 89-8491-067-8 93330